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3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 정 만

연구진

연구책임 | 김혜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문위원 | 김새미(한양대학교 SSK연구교수)

김석우(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이태주(한성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전진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팀장)

정정숙(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주재연(서울 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예술감독)

최준호(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장)

한경아(쇼앤아츠 대표이사)

*가나다순

연구보조 | 서정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이아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목 차 CONTENTS

1	연구 개요	1
1-1.	연구배경 및 종합계획 수립의 의의	3
1-2.	연구 목적 및 방법	5
1)	연구 목적	5
2)	연구 범위 및 방법	7
1-3.	연구의 특징 및 한계	9
2	국제문화교류정책의 국내·외 특징 분석	11
2-1.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	13
1)	국제 환경의 변화	13
2)	국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	20
3)	미래기술환경 변화	25
4)	문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및 담론들	28
2-2.	국제문화교류정책 흐름 분석	35
1)	국제문화교류의 트렌드 변화	35
2)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 과정	39
3)	시사점	41
2-3.	국제문화교류진흥 정책 현황 분석	43
1)	2016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및 활동 현황 분석	43
2)	2017-2018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현황 분석	46
3)	시사점	48

3 국제문화교류진흥 중기 정책 비전 및 목표 53

3-1.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성	55
1) 기존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검토	55
2)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의 생태계 특징 고려	66
3)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개념 검토	69
4) 국제문화교류 가치 우선순위 및 위계배치를 위한 고려사항	73
3-2.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76
1)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및 추진전략	76
3-3.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	78
1)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	78
2)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안)	79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81

4-1.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범위 및 주체 조정 필요의 그간의 논의	83
4-2.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안)	87
1)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간,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등과의 전반적 지원 체계 재구축 필요	87
2)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행체계도(안)	89
3) 단계별 추진일정(안)	91
4) 참고사례	91
4-3.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96
1) 배경 및 필요성	96
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확대개편(안)	97
3) 단계별 추진일정(안)	98

목 차 CONTENTS

4-4.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99
1) 배경 및 필요성	99
2) 재외문화원 국유화를 통한 시설 개선	101
3) 문화원의 현지 문화교류 매개기능 강화 집중지원(안)	101
4) 단계별 추진일정(안)	104
4-5.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105
1) 배경 및 필요성	105
2) 추진내용	105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07

5 ▶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109

5-1.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류의 세분화 및 다양화 방안	111
1) 문화교류 정보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책자 개발의 필요성	111
2) 다자협력 채널 진흥 및 교류 공동체의 추진	112
3) 문화ODA를 통한 공존과 협력 및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진흥	114
5-2.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116
1) 배경 및 필요성	116
2) 추진내용	117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19
5-3.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120
1) 배경 및 필요성	120
2) 추진내용	121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24
5-4.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125
1) 배경 및 필요성	125
2) 추진내용	125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27
5-5. 유네스코(UNESCO)와의 협력 강화	128
1) 배경 및 필요성	128
2) 추진내용	128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30
5-6. 한국문화를 매개로한 국가이미지 제고	131
1) 배경 및 필요성	131
2) 추진내용	131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33

6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135

6-1.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137
1) 배경 및 필요성	137
2) 추진내용	137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37
6-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원	138
1) 배경 및 필요성	138
2) 추진내용	138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40
6-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141
1) 배경 및 필요성	141
2) 추진내용	141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44
6-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145
1) 배경 및 필요성	145
2) 추진내용	145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45

7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147
7-1.	현장경험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 지원의 방향성	149
	1) 국내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그간의 한계	149
	2) 현장경험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 지원의 필요성	152
7-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153
	1) 배경 및 필요성	153
	2) 추진내용	155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60
7-3.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61
	1) 배경 및 필요성	161
	2) 추진내용	162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63
7-4.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164
	1) 배경 및 필요성	164
	2) 추진내용	164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65
7-5.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	166
	1) 배경 및 필요성	166
	2) 추진내용	166
	3) 단계별 추진일정(안)	168
	참고문헌	169

표 목 차

【표 1-1】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상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조항	4
【표 1-2】 연구방법	8
【표 2-1】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	22
【표 2-2】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2017)의 3대 가치 설정	25
【표 2-3】 문화다양성 이슈의 주요 흐름	29
【표 2-4】 미국 DCLA의 <CREATE NYC> 수립 프로세스 및 내용	33
【표 2-5】 1-2차 CREATIVE EUROPE 계획에 나타난 교류방법 비교 및 시사점	35
【표 2-6】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과정	39
【표 2-7】 2017-2018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현황 분석 결과	47
【표 3-1】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	63
【표 3-2】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64
【표 3-3】 문화기본법	72
【표 3-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포함사항	78
【표 4-1】 정책 영역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 개념	83
【표 4-2】 국제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정책 범위 비교	84
【표 4-3】 국제문화교류 정책기조 변화	86
【표 4-4】 미국의 20세기 공공외교와 21세기 공공외교의 패러다임 변화	92
【표 4-5】 연도별 국유화 계획	101
【표 4-6】 현지 유관기관 협의체 포함 기관 및 운영사업	103
【표 4-7】 주요 권역별 협력 사업('18년)	104
【표 4-8】 사업예시 : 권역별 세종학당 한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105
【표 4-9】 주요 프로그램 : 세종문화아카데미 예시	106
【표 5-1】 국제문화교류 권역별 백서 발간 사업(안)	111
【표 5-2】 한국 문화교류 통합 가이드북 발간 사업(안)	112
【표 5-3】 교류대상의 집중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문화교류 채널 구축 사업(안)	114
【표 5-4】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 세부내용	117

【표 5-5】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119
【표 5-6】 '19~'22년까지 아세안 국가 중 수교기념 대상국가	122
【표 5-7】 연도별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현황	126
【표 6-1】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 계획 컨설팅 지원(안)	139
【표 6-2】 지역 문화교류 단체의 글로벌 사업 집중 지원 방안(안)	139
【표 6-3】 실무자(행정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안)	140
【표 6-4】 민간 주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안)	142
【표 7-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분류	149
【표 7-2】 기관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현황	150
【표 7-3】 전문인력 양성 및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역할분담(안)	153
【표 7-4】 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현황	154
【표 7-5】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155
【표 7-6】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분리(안)	156
【표 7-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분류	157
【표 7-8】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기술(예시)	167

그림 목차

【그림 2- 1】 영국 BREXIT 국민투표 찬/반 결과 및 지역별 분포 현황	14
【그림 2- 2】 미국 트럼프주의에 대한 사회적 갈등 심화	15
【그림 2- 3】 중국 및 동아시아 국제 갈등 심화	18
【그림 2- 4】 외국인주민수 증가 추이	21
【그림 2- 5】 청년고용동향 추이	24
【그림 2- 6】 M2M, IoT, IoT 변화 과정	28
【그림 2- 7】 국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 과정	42
【그림 2- 8】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영역 비교	44
【그림 2- 9】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분야 비교	44
【그림 2-10】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방식 비교	45
【그림 2-11】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대상국 비교	46
【그림 3- 1】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56
【그림 3- 2】 <국제문화교류 중장기계획수립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58
【그림 3- 3】 <문화공감 포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60
【그림 3- 4】 <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외교부, 2017)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62
【그림 3- 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셜 매트릭스: 한국사회, 한국사회문화	73
【그림 3- 6】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가치 및 키워드	74
【그림 3- 7】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요 가치다이어그램	75
【그림 3- 8】 2018-2022 국제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목표(안)	77
【그림 3- 9】 2018-2022 국제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목표(안)	79
【그림 4- 1】 국제문화교류 정책 수행체계도(안)	90
【그림 4- 2】 미국 공공 공공외교 담당부서 체계도(한국법제연구원, 2016:37)	93
【그림 4- 3】 이은정(2010: 66)	95
【그림 4- 4】 ‘문화원 공통미션 확립’에 따른 시너지 창출	101

【그림 5- 1】 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동북아 문화공동체(안)	113
【그림 5- 2】 비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한-유 문화공동체(안)	113
【그림 5- 3】 비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한-미 문화공동체(안)	113
【그림 5- 4】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국	120
【그림 5- 5】 필코리아 인 런던 사례, 2017	121
【그림 6- 1】 민간 국제교류대사 양성 및 파견 사업(안) 수행체계	144
【그림 7- 1】 한국문화 인식 정기실태조사 수행 체계도	165

1

연구 개요

- 1-1. 연구배경 및 종합계획 수립의 의의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 1-3. 연구의 특징 및 한계

1-1. 연구배경 및 종합계획 수립의 의의

■ 새 정부 및 최근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를 반영하여 미래지향적 국제 문화교류 정책의 방향 설정 및 제시가 필요한 시점임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에 부합하는 새 정부의 방향성 정립이 시도되고 있음. 문화 정책 분야에서는 <문화비전 2030>을 발표,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을 도출하며 문화의 본질 및 그간 문화정책의 철학에 대한 성찰과 그를 바탕으로한 미래지향적 문화정책 수립을 추진함
-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의 역할과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
- “국가”, “국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사용 보다는 “사람”, “개인”, “사회”를 중시하고자 하는 새 문화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국제문화교류의 본질과 역할을 성찰하여 시대에 필요한 국제문화교류의 가치 및 정책의 방향성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에 대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국내 관심 증가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진흥법>(2017. 09. 22 시행)이 제정, 동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5년 단위)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
-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1990년대 이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국가이미지 홍보와 문화적 정체성 구축을 위한 수단적 역할을 넘어, 최근에는 ‘문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창조적 발전, 그를 통한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이라는 국제문화교류의 개념 정립과 함께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 방식이 논의되어오고 있음
- 그간 논의 및 연구되어온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대한 성찰과 최근 사회·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 미래지향적인 국제문화교류 정책 수립을 위한 비전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을 마련해야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기반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촉구됨

- 최근 국제적 흐름 및 환경변화에 부합하도록 관련 부처 및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의 수행체계와 역할설정, 법의 적용 범위, 정부와 지자체의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성을 포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마련이 필요함
- 그간 논의되어온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사업 현황을 파악, 변화된 시대 상황과 새 문화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도록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에 부합하는 과제 및 전략 도출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기반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개선책들이 제시되어야 함

【표 1-1】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상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 관련 조항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자원 조달 및 운용 방안
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5.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6.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7.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
9.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목표 및 방향성 제시

-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 및 환경변화, 국내 국제문화교류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비전 및 목표 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현 법률의 주요 내용 및 기존 중장기 계획의 메타분석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향후 법제도 개정방향 제시와 더불어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목표 및 추진 과제를 도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및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의 향후 발전 방향성 모색

■ 국제문화교류 정책 범위 및 각 행위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역할 설정

- 부처 간 정책 범위 조정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과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앙-지자체-민간의 역할 범주 및 수행체계에 대한 설정이 필요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지원하는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8조에 명시된 법적 장치(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및 정책방안을 사전에 구상할 필요가 있음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ODA 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관련 현행 사업체계들의 특징 파악을 통해 한계점을 분석, 연속성 및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의 유통 지원 방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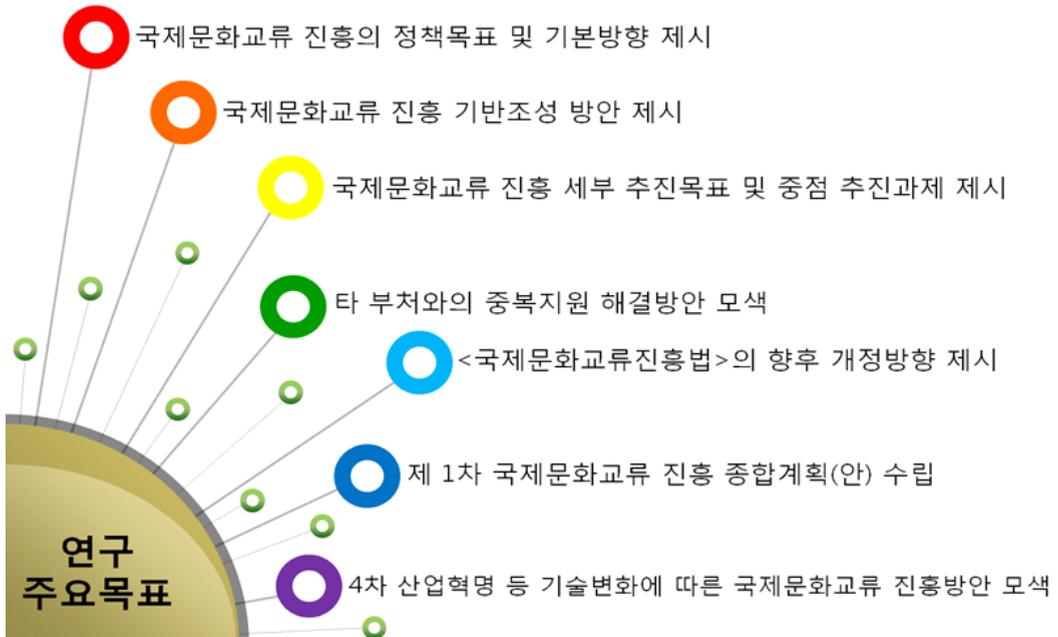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9조와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기관의

개념 및 역할을 설정하고, 동법 제12조와 관련하여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의 전반적 역할 및 구체적 업무사항과 전담기관 지정방안 등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국제문화교류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활동의 효과성 및 질적 제고 도모

■ 미래 기술변화(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과 한계

- 4차산업혁명 시대적 변화 흐름에 따라 현재의 문화교류 형태 및 방법론의 변화 및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문화교류정책이 무엇을 준비하고 지원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문화교류 내용에 대한 분석이나 지원보다는 문화교류의 방법의 확산 가능성 등에 보다 무게를 두고, 기존의 face-to-face 방법에서 벗어난 방법론들을 진흥할 정책방안을 정립하도록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 범위

- 국제문화교류 거시환경 주요 이슈 및 정책 변화 이슈 분석
 - 국제관계적 측면: 분리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충돌
 - 문화정책적 측면: 사람, 자율성, 창의성, 함께,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 강조
 - 사회기술적 측면: 스마트환경의 도래로 하이퍼네트워크 사회 빠르게 도래
 - 국제관계, 문화정책, 사회기술적 측면에서의 거시적 환경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정책에 관련한 방향 분석의 필요성 제시
- 국제문화교류 내용과 방법의 주요 변화 분석
 - 교류방법의 변화: 양자 간 교류에서 다자 간 교류로의 변화
 - 교류내용의 변화: 문화 인프라 기반 확충, 연구·정책교류 등 문화교류 영역의 확장
 - 교류주체의 변화: 국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 국제문화교류 주요 현황 및 특징 분석
 - 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분석연구>에서 실시한 중앙정부, 정부산하 공공기관, 전문 문화예술기관, 민간단체 총 2,626개관 대상 국제문화교류 주요 현황조사 분석 자료의 결과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연구 방법

- 국제문화교류 정책환경 이슈 분석: 범사회, 국제문화교류 트렌드 조사

【표 1-2】 연구방법

구분	내용
범사회 환경스캐닝	<p>MECE(mutually exclusively, collectively exhaustively) 방법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사회 및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환경변화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주제로, 키워드로 도출하는 데 있어 논리적 정연성을 갖기 위한 방법론으로 MECE에 기반을 둔 “So What?” - “Why So?”를 묻는 질적 연구방법론 활용
미래트렌드 이슈 메타분석	<p>메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미래보고서2030』, 『미래가 보이는 25가지 트렌드』 등 기존의 문헌 및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요약하여 국제문화교류 관련 트렌드 도출

■ 전문가 Focus Group Interview

- 국제문화교류정책 전문가, 민간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국제문화교류지원사업 관계자 등으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FGI 실시
- ①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종합정책 방향성 ② 국제문화교류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그간의 문제점 인식과 체계 구축을 위한 조건 ③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의 기능 관련 ④ 민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역할 ⑤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방안 ⑥ 교류대상 다양화를 위한 전략적 지역 및 다양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영역 및 방법론 ⑦ 4차산업혁명시대 도래 관련 정책지원 수요 등을 큰 주제로 분류하여 FGI를 실시

1-3. 연구의 특징 및 한계

■ 국제사회의 국제문화교류 기조에 부합한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향성 정립

-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하는 국제문화교류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본격적인 모색과 방향성 정립이 본 연구의 핵심적 역할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국정홍보’ 혹은 ‘국제문화교류사업’의 지원 등의 단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 제시가 연구의 가장 큰 특징임
- 특히 신규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가지고 올 역할과 기대,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의 범위와 방식을 보다 확장시키기 위해, 즉 일회성 행사와 한시적 교류에 그쳐온 그간의 교류의 변화 방법론을 고민하기 위한 정책진흥방법론을 제시
- 국제문화교류의 역할과 가치의 재정립을 통한 정책의 지원범위 설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교류 진흥의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유통 방안,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구 설치와 효율적 업무추진 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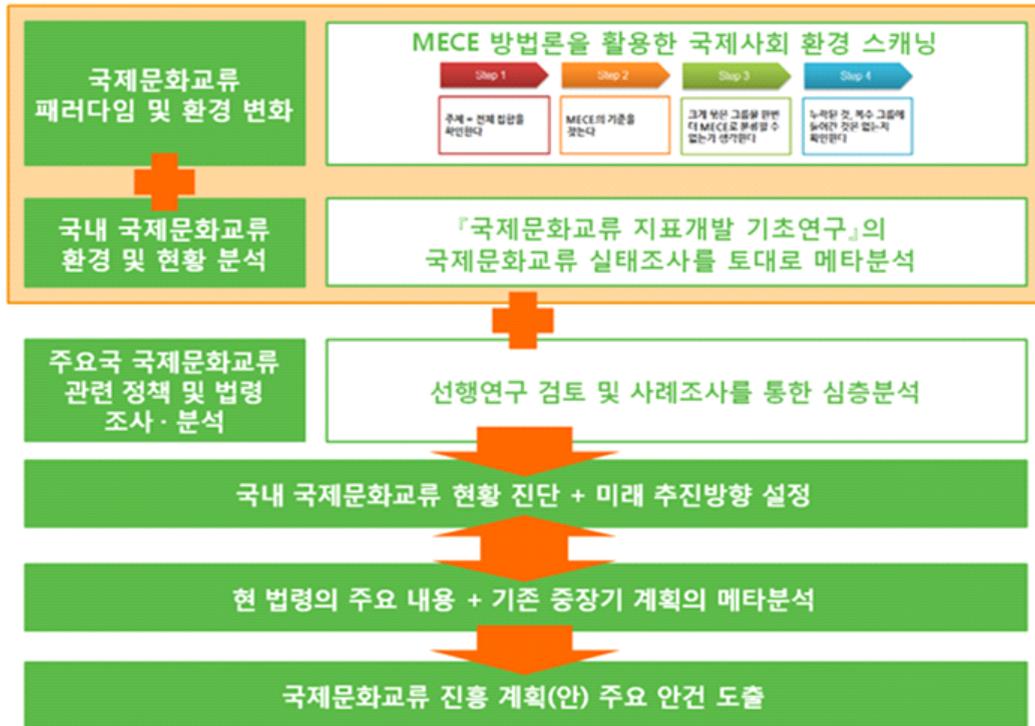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 정책 구성요소 파악 및 정책사업 설계의 방향성 제시

- 문화정책의 특정 정책으로서 문화외교정책 등과 구별되는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정책구성 요소를 분류 및 파악하고, 공통 및 협력이 필요한 정책범위 및 요소와 국제문화교류정책으로서 차별화가 필요한 정책 요소를 분류하여 정책사업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

■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그간 국제문화교류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 및 정책적 논의들은 많았지만 법정 종합계획으로 이어진 적은 없는 바, 본 연구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이후 본격적으로 향후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기틀 마련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지님

-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경우 국제문화교류 정책 분야 최초의 종합 계획인 점, 정책 추진을 위한 큰 틀과 수행체계 명확화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됨



2

국제문화교류정책의 국내·외 특징 분석

- 2-1.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
- 2-2. 국제문화교류정책 흐름 분석
- 2-3. 국제문화교류진흥 정책 현황 분석

2-1.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 분석¹⁾

- 본 절에서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국내외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중요 이슈 지점들을 검토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국제 환경의 변화, 국내 정치 및 사회 환경의 변화, 미래기술환경의 변화, 그리고 문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와 담론이란 4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며, 각 관점 별 세부논의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주요 트렌드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함

1) 국제 환경의 변화

① 국제적 인구증감의 불균형과 고령화 현상 지속

- 국제적 인구증감은 권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지역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구 전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UN의 추정에 따르면 2035년 세계 인구는 2017년 75.5억 명보다 약 13%가 늘어난 85.5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선진국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인해 향후 인재유치를 위한 각국 간 경쟁이 계속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 및 보건 수준의 향상은 인류의 기대수명을 급격히 증가시키고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인구 구조의 고령화 현상의 빠른 확산을 가져오고 있음
-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데올로기, 종교의 영향력 증대, 개인의 권한 확대, 양극화, 도시화, 여성의 권리 신장, 윤리적 문제 등장과 기준 변화 등이 트렌드를 형성할

1) 본 장에서의 논의는 최근 문화정책의 동향 및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정책 포럼 문화공감」 결과보고서 및 김혜인 외(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의 내용 중 일부를 토대로 재구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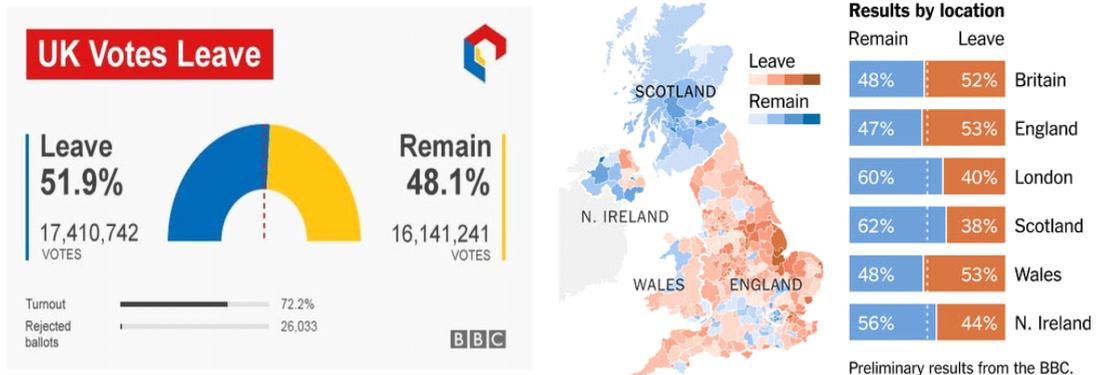
것으로 전망되고 그에 따른 갈등 증가 및 그 해소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삶과 소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질과 행복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함

② 보수 민족주의 및 국수주의 현상 VS 다양성 및 포용성 기반의 공동체 가치 추구

■ 세계적으로 보수 민족주의 및 국수주의 현상이 증가하는 한편으로, 일각에서는 다양성 및 포용성 기반의 공동체 가치를 추구하는 흐름이 공존하고 있음

-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는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국가 뿐 아니라 동유럽, 북유럽 국가 등 유럽 전역에서 EU 탈퇴 이슈를 거론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으며, 실제로 국가별 극우정당이 주축이 되어 EU 탈퇴를 외치는 세력이 응집되는 등 연쇄적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있음



* 자료: 영국 BBC, <http://www.bbc.com/news/uk-politics-eu-referendum-36618855>

【그림 2-1】 영국 BREXIT 국민투표 찬/반 결과 및 지역별 분포 현황

- 대표적인 예로 최근 스페인의 예를 들 수 있음. 2017년 10월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역이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의사를 묻는 투표를 강행함. 그간 카탈루냐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교부받는 것 보다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 액이 더 많

왔던 점, 주민들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의식을 지녀왔음.²⁾

- 부유한 지역에서 징수한 세금을 가난한 지역에 더 많이 풀어 국가 전체 지역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국가의 입장과, 이러한 노력을 경제적 강탈로 받아들이는 지역 간 팽팽한 대립이 지속되어왔으며, 이와 같은 경제적 측면이 카탈루냐 독립 주장의 핵심 이유로 언급되고 있음³⁾
- 한편, 2017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는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함. 미 국무부는 “유네스코의 체납금 증가, 유네스코 조직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 유네스코의 계속되는 반(反)이스라엘 편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반영하다”고 탈퇴 배경을 밝힘.
- 미국이 탈퇴한 것은 파리기후협약 등 각종 국제조약을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한다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의 일환으로 해석되는 한편, 유네스코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⁴⁾ 축소와 체납 등의 재정적 압박에도 세계평화에 방점을 둔 유네스코의 설립 취지와 원칙을 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존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우선주의 천명



LA 국제공항의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시위자 모습⁵⁾

【그림 2-2】 미국 트럼프주의에 대한 사회적 갈등 심화

- 2)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하는 스페인 동남부 카탈루냐 지역의 인구는 나라 전체의 16%를 차지, 지역 총생산(GRP)은 국내총생산(GDP)의 19%를 차지함
- 3) 중앙시사매거진(2017). http://jmagazine.joins.com/art.print.php?art_id=318440 (최종접속 2017.12.15.)
- 4) 유네스코는 1년에 3억 3,350만달러(3,90억원)의 정규예산을 쓰고 있는데, 점차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회원국 분담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2017년 유네스코 분담금 비율은 미국(22%, 약 411억원), 일본(9.7%, 191억원), 중국(7.9%, 148억원) 순으로, 한국의 경우 약 38억원(2%)로 전체 13위에 해당함.
- 5) 시사IN(2017.02.15.).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쟁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359>)

-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선언에 이어 이스라엘 역시 ‘반(反)이스라엘 편견’ 등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 12월 22일 탈퇴를 정식으로 신청함. 이스라엘과 미국은 역사 유산 관련 그 간 유네스코와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음.
- 이번 탈퇴 발표 시기는 유엔 총회가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이튿날로, 유네스코가 그간 팔레스타인 등 아랍 회원국의 편을 든다는 이스라엘의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있음.
- 실제로 유네스코는 지난 해 이스라엘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과 유대교 공동성지 관리 문제에서 팔레스타인의 손을 들어줬고, 올해 7월 요르단 강 서안 헤브론 구시가지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 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음⁶⁾
- 이치림 인종 및 종교 갈등을 둘러싼 시리아 내전, 파리, 니스, 뮌헨 등에서 테러 문제, 난민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며,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분리주의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다양성 및 연대를 기반으로 한 공존·협력을 추구하는 공동체주의 가치에 대한 흐름이 함께 대두되고 있음

③ 권력의 다극화에 따른 국제 권력의 아시아 이동 전망

■ 미래트렌드를 연구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인 밀레니엄 프로젝트(The Millennium Project)는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다극화’는 ‘아시아로의 국제권력 이동’을 가져올 것이라 예측함

- 아시아의 권력이 북미와 유럽을 능가하는 다국적 리더십 부각될 것이라 전망하며, 이는 그간의 신자유주의에 의한 세계화 현상에 대한 반발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측함. 즉 약소국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유럽과 아시아, 북아프리카 등이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이런 경향들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단위 전략적 네트워크로 이어지며 권력의 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 한편, 국제정치적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도시나 지역 그룹의 권한이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국가나 세계적인 기구보다 도시네트워크 혹은 지역네트워크의 권한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NIC, 2012)

6) 연합뉴스(2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3/0200000000AKR20171223051900108.HTML?input=1195m>(최종접속 2017.12.29.)

- 이와 같이 일종의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의 대면(face-to-face)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공동체 구성이 약화되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네트워크화된 개인들의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즉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예측되며, 실제 한국의 경우 이러한 신직접민주주의의 모습은 국민청원제도, 주민입법제도, 예산 주민참여제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근 실현되고 있음

④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내 긴장관계, 문화를 통한 화합과 공존의 가능성 모색

■ 북한의 핵실험 및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한반도 내 긴장 강화

- 북한의 핵실험 및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문제는 한반도 내 긴장 강화 뿐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내 대중국 군사전략등과 긴밀히 연결되어있는 점, 동북아 정치군사지형의 변화 및 국제관계 향후 행방을 가늠하는 주요 이슈라 할 수 있음
- 북한은 작년 말 여러 차례의 핵실험 및 ICBM 실험을 단행, 국제정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 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선전포고’ 및 ‘화염과 분노’라는 문구를 주고받으며 긴장관계를 더욱 고조시키기도 함
- 그러나 2018년 1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자국민들을 위한 신년인사를 통해 ‘평창올림픽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표현, 한국 측은 신속히 통일부장관을 포함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북한측 올림픽 대사와 대화를 개진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음⁷⁾
- 이렇듯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와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화교류는 갈등 완화 및 화합을 위한 소통 측면에서 그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음

■ 한반도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 관계

- 중국의 경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한반도의 사드배치 문제 등을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으로 간주, 강력한 대응 입장을 표명함. 북한에 대해서는 원유

7) 국제뉴스(2018.01.08). “니키 헤일리, 북한의 올림픽 참여 회담 두고 ‘핵실험 중단 확실히 하라’ 전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208>)

공급 전면 중단이라는 극단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냈으며, 추후 특사파견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유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대응하고 있음

- 또한 한반도 사드배치에 관해서 중국은 무역시장에서의 한국수출품에 대한 관세 강화, 한국행 단체관광 승인 거부 등 경제적 차원을 넘어 자국 내 반한·협한 정서 확대, 한류 중단과 같은 문화적 차원에까지 이르는 등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 방중 후 중국의 보복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하였으나, 중국은 여전히 단계적으로 보복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최근 중국인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는 공연계를 비롯한 내수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간 영리, 비영리 영역을 막론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한국-중국 간 국제문화교류 측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⁸⁾
- 이처럼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와 갈등 고조 상황에서의 문화교류는 갈등 완화 및 화합을 위한 소통 측면에서 가능성을 주목 받고 있음



중국의 관광금지 조치 및 영사관 앞 시위 등 중국 내 반한 감정고조⁹⁾



남중국해 미,중,일 영유권 분쟁 격화

[그림 2-3] 중국 및 동아시아 국제 갈등 심화

8) 중앙일보(2018). <http://news.joins.com/article/22250533>(최종접속 2018.01.02.)
 9) 조선일보(2017.03.03.) “중국 ‘관광 보복’”(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3/2017030300241.html)

⑤ 동북아 내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대두

■ 최근 국내에서도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대한 논의가 참여정부 이후 재조명, 한중일-러시아, 대만, 몽골 등을 포함,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음

- 동북아 내 갈등과 경쟁을 극복하고, 협력을 도모하려는 다양한 시도의 구체적 사례로서 중국을 중심으로한 지역무역협상(RCEP) 체결, 아시아지역포럼(ARF) 중심의 동북아 안보체제 강화 방책 등 여러 노력이 강구되고 있음
- 그러나 아시아 내 협력 및 통합은 과거사에 대한 인식차이와 문제, 국가 간 영토 갈등과 대립, 지역 내 국가들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이, 이념적 갈등, 지도자 간 경쟁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외교적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임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와 ‘북방경제협력’비전과 함께하는 문화협력

- 2017년 6월 북방경제를 주관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7월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이 신북방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하고 한국, 러시아,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동북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 기반으로 구축하자는 정책 방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 경제협력을 주축으로 진행하자는 초기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협의 채널과 단기, 장기 차원의 다양한 성과창출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논의로 범위가 확장되면서 해당 지역의 문화 및 관광분야를 연계한 경제, 인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문화공동체를 형성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임

⑥ 국제사회 갈등의 해결장치, 상호이해 및 소통을 위한 ‘문화’의 가치 확산

■ 국제사회 갈등 및 분쟁 극복을 위한 해결기제로서 ‘이해와 소통’의 역할을 하는 ‘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지난 2015년 밀라노 엑스포 및 문화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 분쟁의 해결 장치로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문화에 대한 기대감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¹⁰⁾
- 동북아 국가들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도 문화와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 등을 통해 아시아 시민들 간 협력의식을 높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음
- 한국 역시 최근 10여 년간 발생한 한류 확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다양한 콘텐츠, 아시아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되고 있음

2) 국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¹¹⁾

① 문화다양성 사회로의 빠른 진입

■ 국내 인구구조 변동을 비롯한 환경 변화, 사회구성원 및 문화권의 다양화 현상에서 비롯되는 각종 갈등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고조되는 인종 및 타문화로 인한 갈등 문제가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에도 부합하는 일임을 시사

- 현대 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데올로기, 종교의 영향력 증대, 개인의 권한 확대, 양극화, 도시화, 여성의 권리신장, 윤리적 문제 등장과 기준 변화 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갈등 증가와 해소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10)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정책모럼 문화공감」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p.56

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중심형 문화정책연구」, 문화체육관광부, pp.10-25.

- 지역 간 인구이동과 외국인 유입¹²⁾의 증가로, 2016년 11월 기준 204만 여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총 인구의 3.4%),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음



자료: 행정자치부 · 통계청(2016)

【그림 2-4】 외국인주민수 증가 추이

- 다문화사회는 한국사회의 인종, 민족, 문화 간 갈등이라는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의 새로운 하층계급을 형성하며 도시의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음
- 다문화 가정 2세들의 불안정한 사회적응, 한국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차별,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제노포비아(xenophobia) 현상 등의 문제 발생
- 우리 국민의 다문화 인식은 성인 기준으로 2011년 51.2점에서 2015년 54.0점으로 개선되었고 젊은 층(청소년 67.6점, 30대 연령층 56.8점, 40대 연령층 51.5점)일수록, 다문화 교육·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수용성이 높았음¹³⁾

12) 국내 체류 외국인(불법체류 제외) 204만 명은(2016년 말 기준) 2015년 대비 8.5%(159,922명)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간 매년 9.26%의 증가율을 보임(e-나라지표)

13) 이상열, 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3.

② 계층, 세대, 성별 간 갈등 가속화로 인한 소통과 상호이해의 중요성 증대

■ 한국사회 내부 갈등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포용성과 수용성이 요구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바,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목표로 하는 문화교류의 정책적 중요성 및 지향점을 가늠해볼 수 있음

- 한국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소득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 대립은 정치·경제·문화적 측면에 걸쳐 다양한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권력이양 시기 세대교체 공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바, 한국의 경우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갈등과 얽혀 표출되는 양상을 보임
- 2002년 대선 전·후, 박근혜 정부 탄핵, 2017년 대선 전·후 시기가 대표적인 세대 간 이념갈등의 표출기라 할 수 있는바, 광화문 등에서 벌어진 젊은 세대 중심의 ‘촛불집회’와 기성세대 중심의 ‘태극기집회’의 충돌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음
- 이러한 계층, 세대, 성별 간 대립과 갈등은 한국사회 내부적으로 다름에 대한 인정, 넓게는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을 목표로 하는 문화교류의 정책적 중요성 및 지향점을 가늠케 해줌

【표 2-1】 사회통합 국민의식 조사

(단위 : %)

구분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계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16.0	46.2	32.0	4.4	1.4	100.0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33.6	45.9	17.6	1.4	1.5	100.0
지역간의 갈등	17.2	41.4	32.2	7.0	2.2	100.0
다문화 갈등	8.3	40.9	40.1	6.9	3.9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 의식 조사 중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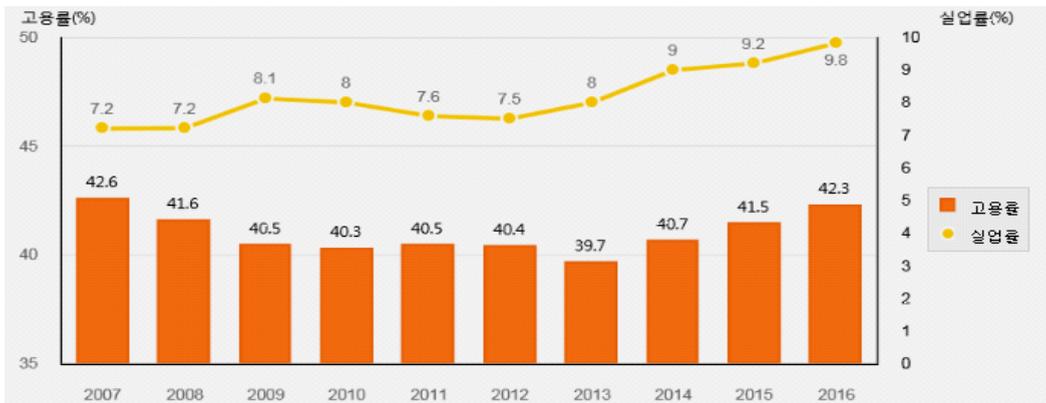
- 또한,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 장기간 지속된 경제 침체 등은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자산과 소득의 불균형적 분포, 안정된 일자리 등 노동시장에서의 각 세대가 점유하는 기회의 차이가 경제영역에서의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따라서 계속된 접촉기회의 감소, 점유기회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서 문화가 지닌 가치와 효과에 대한 논의가 보다 중요해지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부의 불평등, 청년세대의 어려움

- 불평등(inequality)과 격차(disparity)는 국제적으로 가장 관심이 뜨거운 문제적 이슈로 UN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화두로 강조하는 배경에는 우리사회 전체가 불평등과 빈곤,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는 전제가 작용함
- 우리나라의 경제 불평등 수준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니계수 0.302로 부의 불평등 수준이 2000년 이후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무계중심이라 할 수 있는 중산층의 규모 또한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눈에 띄게 감소함
- 소득의 불평등은 교육, 주거, 문화, 건강, 여가 정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피에르 부르디외가 지적했던 사회적 불평등의 상속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확장되고 구조화되는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갈등해소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회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이러한 한국사회의 부조리 문제는 최근 청년 세대들을 N포 세대라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되고 있음
- N포 세대는 사회·경제적 압박에 따라 연애, 결혼, 주택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로 기존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포기), 5포 세대(3포 +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넘어서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¹⁴⁾
- 이런 개념들은 청년층이 자신의 출신, 경제적 위치 등과 관계없이 교육 등을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 극히 낮아진

14) 이상열, 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7.

현 사회 상황에 대해 긍정적 가능성을 포기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사회문화 전반에 생산적 미래를 바라보는 문화보다 단기소비나 짧은 만족을 추구하는 문화 등으로 연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5】 청년고용동향 추이

③ 새 문화정책의 방향 정립, ‘사람’과 ‘함께’의 강조¹⁵⁾

■ 새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제시되고 있는 다양성 및 창의성, 최근 국제 사회에서 주목 받는 문화다양성 등의 가치 추구를 미루어볼 때 국제문화 교류가 더욱 더 주목 받게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대에 부합하는 새 정부의 방향성 정립이 시도되고 있음. 문화 정책 분야에서는 2017년 12월 <문화비전 2030>을 발표,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을 도출하며 문화의 본질 및 그간 문화정책의 철학에 대한 성찰과 그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문화정책 수립을 추진함
- 새 정부의 문화정책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의 역할과 개념을 재정립함
- “과도한 시설과 행사보다는 사람과 문화 권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 “지역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자치 및 분권”, “문화적으로

15)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기초발표 자료

의미있게 즐길 수 있는 여가있는 사회”,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과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는 문화”등 문화에 대한 개념과 가치를 확대

【표 2-2】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문화체육관광부, 2017)의 3대 가치 설정

<p>자율성 (개인의 자율성)</p>	<p>개인의 권리와 생각이 타인과 집단,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개성과 감각의 특별함을 중시하며 개인이 문화권리의 주체임을 강조하는 가치로서 제시됨</p>
<p>다양성 (공동체의 다양성)</p>	<p>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임.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가치로서 제시됨</p>
<p>창의성 (사회의 창의성)</p>	<p>미래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자 문화 안과 밖이 융합하는 기본원리임. 창의성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을 이끄는 귀중한 능력이자 역량이 되는 가치로서 제시됨</p>

- <문화비전 2030>은 <문화기본법>에 기초, 국민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핵심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설정함
- 위 3대 가치의 방향성에 따라 ①개인의 창작과 향유의 권리 확대, ②문화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③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④공정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⑤지역 문화분권 실현, ⑥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⑦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⑧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 협력 확대 8대 정책의제를 설정, <문화비전 2030>의 구체화 및 실질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3) 미래기술환경 변화

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진화: 제4차 산업혁명

- 2016년 다보스 포럼의 핵심의제로 선정된 ‘제4차 산업혁명’은 최근 정책 환경의 최고 유행 화두로 주목받으면서 각국은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 4차산업혁명 분야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시장과 빅데이터 시장인데, Tractica(글로벌 시장 분석기관)가 분석한 인공지능 시장의 매출 규모는 2016년

6.4억 달러에서 10년 후 2025년에는 36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¹⁶⁾

- 그 중 현재까지 누적 매출이 가장 큰 분야는 정적 이미지 인식/분류/태깅(tagging)으로 총 80억 달러이며, 2위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분야로 총 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해당 산업분야들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중
- 인공지능산업의 핵심경쟁력은 빅데이터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현재 감독된 학습(supervised learning)을 통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일종의 가능한 모든 데이터(빅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계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한 것으로 빅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 즉, 감독되지 않은 학습(un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적용이 제한적이기 때문
- 즉 빅데이터 기술의 규모와 다양성이 확대되면 딥러닝 기술이 고도화되고, 이와 함께 신경망분석방법이 정교화된다면 빅데이터의 용도가 인공지능 분야의 진화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②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함께 윤리와 규정 개발

■ 프랑스: 정부차원의 AI규정 개발 시작

-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기술의 발전에 대해 각 정부는 발빠른 대처들을 하고 있음. 프랑스는 특히 인공지능 관련 규정과 윤리, 조건 등에 대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인공지능에 관한 의회 포럼에서 인공지능의 규제와 윤리 분야에서 프랑스가 선두주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히며 디지털경제부가 유럽의 AI 규정 개발을 주도하도록 지시함
- 2018년 프랑스 정부는 AI에 대한 자금 지원 및 AI 규정 개발 수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프랑스 수학자이자 정치가인 Cedric Villani가 주도함
- 컨설팅 최종 보고서에는 1) AI 시대에 대응하는 데이터 정책수립, 2) AI윤리체계 구축, 3)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통제방안, 4) 분야별 AI개발을 위한 조건 마련 등이 포함됨

16) DIGIECO(2017),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딥러닝을 중심으로' 디지에코보고서, p.1

- 또한 총리실 부속 싱크탱크인 France Strategie는 4차산업혁명이 프랑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AI,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스마트도시 등과 같은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음

③ 하이퍼네트워크 사회의 스마트 장소성 확산¹⁷⁾

■ 만물인터넷(IE) 도입을 통한 스마트 장소성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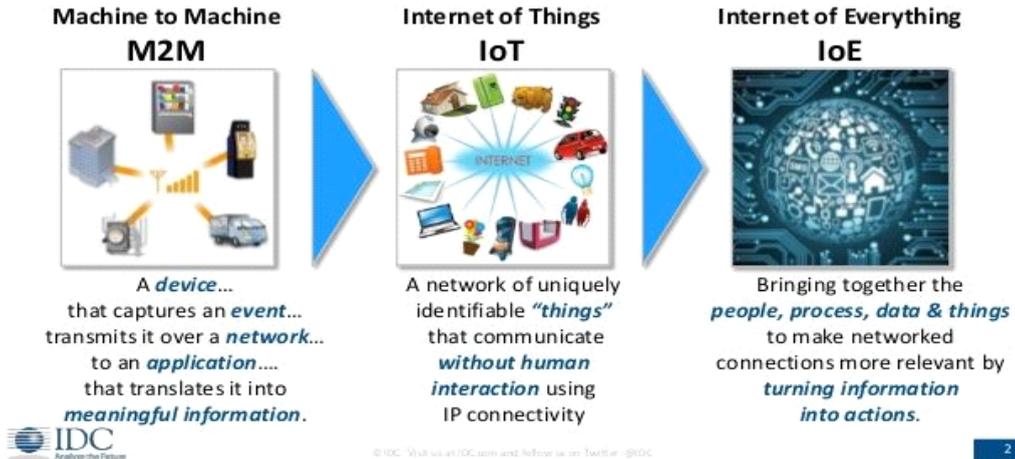
- 자동화 및 초지능화를 기반으로 초연결시대(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는 가운데, 유비쿼터스 컴퓨팅, 웨어러블 인터넷 등의 기술발전으로 IOT를 넘어 IOE (Internet Of Everything)의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음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은 점차적으로 좁아지며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등 이미 만물인터넷은 상당부분 현실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기술들은 초연결사회에 대한 전망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사람과 사물, 기계 사이의 연결/융합/공진화를 통해 과거의 인식을 뒤흔들고 있음
- IOT에 기반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시티는 실시간으로 집, 공장, 도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안전·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IOE는 인터넷의 역사를 통틀어 연결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의 연결 프로세스에 의해 사람이 인식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사물로부터 새로운 데이터와 통찰력을 만들어내는 이 같은 시스템을 한 대 모은 것으로 ‘빅데이터’와 ‘사람’, ‘사물’ 등 모든 것을 말함
-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중요 데이터들이 분석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각각의 인지수준이 높아지면서 접속자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결국 초인식(Hyper-aware)세상이 되어 가고 있음¹⁸⁾

17) 이상열, 정종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50

18) Cicco Korea-YouTube채널(2014.08.14.), “2014 The Internet of Everything”(https://www.youtube.com/watch?v=mh-PzPpC-44)

- 초연결사회를 특징짓는 스마트 장소성은 결국 초개인화된 향유 방식의 확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사람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쉽게 이룩하는 동시에 당연하게 생각함으로 개인취향이 고도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것

Battle of the buzzwords: M2M v IoT v IoE



자료: IDC Community(https://idc-community.com/groups/it_agenda/iot/should_it_care_about_the_internet_of_things_iot)

【그림 2-6】 M2M, IoT, IoE 변화 과정

4) 문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및 담론들

①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주목

-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문화다양성¹⁹⁾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으며 ‘풍요로운 다양성’의 확보를 헌장에 명시, 문화의 개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 문화와 정체성, 문화와 발전, 문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킴

- 세계문화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1995)은 ‘다양성’이라는

19) 문화 다양성 개념은 2001년 제31회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에 잘 나타나 있음

것이 단순히 보호받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인류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온 핵심적 자원이며 향후 인류 발전의 전략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님을 강조하고 있음²⁰⁾

- 이는 문화 보전에만 관심을 두던 소극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 성장 및 창조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며 문화 및 문화정책 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²¹⁾

【표 2-3】 문화다양성 이슈의 주요 흐름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인권으로서의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주목, 기존 문화 보전의 관점에서 더 나아가 문화 성장 및 창조적 가능성에 주목, 문화 및 문화 정책 발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법 제시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Action Plan” 채택 - Action Plan의 5가지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정책을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할 것 · 문화적 삶에서 창조성과 참여를 증진할 것 · 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산업의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 ·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 및 언어 다양성을 증진할 것 · 문화 발전을 위해 가용한 인적, 재정적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할 것
제54차 UN총회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약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권리 간의 연관성 확인 - 문화다양성이 인류 상호간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원천이자,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확인
“문화다양성 선언”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 뿐 아니라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정의 - 문화다양성을 교류와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 이해, 그것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정책포럼 문화공감」 결과보고서 pp.59-60 바탕으로 재구성

②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문화의 가치: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5년 9월 25일 UN은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2016년부터 15년 간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필두로, 2030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채택, 17개의 목표 및 169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함

20) 김 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44-45

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정책포럼 문화공감」 결과보고서 p.59

- SDGs의 궁극적 지향은 2000년에 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개발목표)에서 제시된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의 인권, 환경, 경제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며, 개발목표의 대상을 선진국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됨²²⁾
- ‘문화’는 SDGs의 17개 목표 전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빈곤의 퇴치(end of poverty), 지구의 보존(protecting the planet), 모든 이를 위한 번영(ensuring prosperity for all) 등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정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음
- 각 목표는 문화유산에서 창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핵심 요소로서 문화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그간 국제사회 ‘문화와 발전’이라는 주제로 벌여온 담론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음
- ‘문화’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문화가 발전의 동인(driver)이자 조력자(enabler)인 것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옴. 그러나 1998년 스톡홀름 회의 이후 문화에 관한 논의는 문화유산 보호 및 예술적 창조행위를 넘어 사회 전 분야의 통합 차원으로 확대, 2005년 UNESCO ‘문화적 표현이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등 각 종 국제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필수적인 문화의 가치와 역할이 언급되어옴²³⁾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속 문화 분야의 5가지 주제

- ①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모든 문화교류는 상호이해를 위한 것
- ② 개발도상국의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 활용 지원: 활용 시스템이나 Knowledge 및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
- ③ 지속가능한 투어리즘(Sustainable Tourism): 상업적으로 치중된 매스 투어리즘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④ 평화의 문화: 문화 자체가 세계의 평화 및 안정, 갈등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
- ⑤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문화가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정책포럼 문화공감」 결과보고서 p.60

22) 노영순, 김혜인(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i.

23) 노영순, 김혜인(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iv.

- SDGs는 문화적 자원의 전략적 가치 및 공동체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국들로 하여금 목표 실현과 관련된 17개의 주요 목표를 국가별 발전전략에 적극 수용하도록 독려함

③ 충돌과 갈등, 사회 불안 문제의 또 다른 접근, 포용적 성장²⁴⁾

■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포용적 성장은 성장과 공정한 분배의 공존을 의미하는데 이때 분배는 단지 소득 또는 부의 이전 뿐 아니라 교육, 문화 등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한 분배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OECD는 포용적 성장의 핵심 요소를 ①일자리 창출(Jobs), ②기회의 평등(Equality), ③신뢰의 구축(Trust)으로 규정, 해당 관점에서 조세, 재정 및 금융, 노동, 복지, 혁신, 경쟁정책 등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주장. 실제로 OECD의 주요 국가들의 정책 경험 속에서 전통적인 복지정책(과세 및 재정 지출 통해 불평등을 완화)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밝힘
- 이문기(2012)는 포용적 성장의 특징을 ①고도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여 발전기회를 창조하는 것, ②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비경제적 부문에서의 권리 제공 및 기회를 보장하는 것, ③결과적 불평등의 해결 이전에,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회 진입 조건에 해당하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주력하는 것, ④경제성장의 성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으로 설명함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IG)은 경제성장은 중요하지만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고에서 비롯됨(OECD, 2014). 우선 성장배당이 개인과 사회집단에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소득 및 부의 증가는 국민의 웰빙 관점에서 중요하지만 그는 복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일 뿐이기 때문임

24) 노영순, 윤주(2013)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49-51

-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자 본질적인 특징으로 ‘다차원성’을 꼽을 수 있음. OECD는 웰빙의 중요한 비소득 차원으로 건강과 교육적 성과, 사회적 관계, 개인의 안전, 일과 삶의 균형,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을 꼽았으며(Stiglitz, Sen, Fitoussi, 2009), 이러한 차원들의 하위 집합과 소득, 건강, 일자리에 중점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소득, 건강 및 실업의 변화를 복합적으로 반영, 생활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다는 점은 OECD 포용적 성장의 또 다른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합체의 주목적은 정책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과 건강,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하는 상충과 시너지 효과 수량화를 돕는 데 있음²⁵⁾

④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과 소통의 강조

- 미국 뉴욕시의 DCLA(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²⁶⁾는 2016년 8월부터 여러 아티스트, 문화기관, 뉴욕시내 기관,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 리더, 지역 내 거주민들과 함께 데이터 및 공공 투입 자원 등을 파악함으로써 ‘CREATE NYC’라는 이름의 Cultural Plan을 수립, 문화 예술이 지닌 가치와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최초의 문화 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²⁷⁾
- “A Cultural Plan for All New Yorkers”를 모토로 하는 Create NYC는 문화와 예술분야에 투자해온 뉴욕시의 풍부한 역사를 강화, 그 가운데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연결 강화를 주된 목표로 삼아, 문화와 예술이 지닌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종합계획을 마련함

25) OECD(2015) OECD 통계 실무 보고서 『포용적 성장, OECD의 측정 틀』 p.6

26) DCLA는 1962년 Robert F. Wagner Jr. 시장에 의해 설립, 뉴욕시민의 문화적 삶을 지원하고 있음. 매년 DCLA는 뉴욕시 내에 있는 900개 이상의 조직 및 단체에 재정 지원을 지속,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재정의 4%는 운영 예산에 쓰이고, 나머지는 뉴욕시 내 비영리 문화영역 분야에 직접적으로 투입·배분됨

27) <http://www1.nyc.gov/site/dcla/createnyc/createnyc.page> (최종접속 2018.01.02.)

【표 2-4】 미국 DCLA의 <CREATE NYC> 수립 프로세스 및 내용

계획수립의 프로세스	(1) 리서치를 통한 발굴 작업(2016.08-2017.03) → (2) 공공 참여(2016.10-2017.03) → (3) 최종 정리 “What We Heard” 및 초안 도출(2017.05-2017.06) → (4) Cultural Plan 수립(2017.07)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서치를 통한 발굴 작업(2016. 08 - 2017. 03): 연구 보고서 및 데이터, 문화자산 매핑, 문화계획 및 정책, 기회 탐색 - 공공 참여(2016. 10 - 2017. 03): 18만 8천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직접 참여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 거주민, 아티스트, 교사, 연구가, 학생, 학부모, 전문가, 문화예술 기관, 관련 종사자, 조합원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룹 인터뷰, 워크샵, 위원회와의 소통, 행사 및 프로젝트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취합하는 Show up과정, 심층 질문 선발 및 설문조사, 위원회와의 심층 면담 등 Speak up과정, 중점 그룹 선정 및 초청, CREATNYC 대사로 임명, 지역사회 간 소통 개시 등의 Set up 과정으로 이루어짐 - 최종 정리 및 초안 도출(2017. 05 - 2017. 06): 그간 공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여 “What We Heard”를 발표, 이에 근간한 계획(안) 도출, 뉴욕 시 5개 자치구 내 위원회 주관 행사 및 웹사이트 통해 피드백 과정을 거침 - Cultural Plan 수립(2017.07): 보다 나은 뉴욕시 커뮤니티 발전을 위하여 5개 자치구를 아우르는 문화예술 지원 관련 종합 계획 수립

- ‘모든 뉴욕인들을 위한 문화정책’을 내세우며 CreateNYC는 ‘평등’, ‘포용’, ‘접근성’, ‘상호연결’, ‘성장과 리더십’ 5개 가치를 원칙으로 설정함
- 특히 DCLA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은 커뮤니티 역량 강화에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지는 이슈들은 다양성, 평등, 그리고 포용성과 같은 주요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음
- 각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자국민, 외국인, 미국 문화 및 외국 문화의 구분을 설정하기보다 뉴욕을 거주지로 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들(300만 명의 해외 출생 거주자 및 그 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뉴욕 내 자치구 구분과 개개인의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뉴욕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라는 영역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주된 초점을 둠
-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DCLA는 2017년도 예산 177백만 달러(한화 약 2천억원) 가운데 96%를 뉴욕 시 전 지역의 예술에 대한 향유·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 추진비로 투입하고 있음. 4년간 총 800백만 달러(8,7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됨. 문화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서는 미국 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임

- 해당 예산은 크게 문화기관 운영비(자연사 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등을 포함한 비영리 민간 문화기관 대상 운영 및 컬렉션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급,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문화 개발 기금(뉴욕시 전체를 대상으로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900여개의 비영리 단체 지원), 문화 시설 설계 및 건설 지원, 기관 자체 프로그램 운영비(이니셔티브 추진비) 등으로 사용됨

2-2. 국제문화교류정책 흐름 분석

1) 국제문화교류의 트렌드 변화²⁸⁾

- 국제문화교류를 둘러싼 국제, 국내의 각종 환경변화 이슈들은 문화교류 트렌드 변화로 반영되고 있는데, 본 절에서는 현재 이미 문화교류의 중요 변화 트렌드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 변화 지점들을 정리함

① 단선적 교류 ⇨ 관계망 중심 교류

- 국제문화교류 방식이 과거 인바운드 혹은 아웃바운드로 나타나는 일대일 혹은 양자간 교류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연결 방식의 다자간 교류로 확장, 진화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국제문화교류의 선도주자라 할 수 있는 EU 중심의 유럽권 역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의 특성은 종래의 국가 간 제약된 경계를 넘어서서, 다자 간 협동사업 및 네트워크/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국제 문화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확인되고 있음

【표 2-5】 1-2차 CREATIVE EUROPE 계획에 나타난 교류방법 비교 및 시사점

항목설정		비교 내용 및 시사점		
내용범주	사업범주	1차 계획(2007-2013)	2차 계획(2014-2020)	주요 변화 및 시사점
	목표	분야 공통	/	
Culture		국가 간 이동성 초국가적 순환		산업 역량 강화 초점: 노하우, 신규 사업 모델, 디지털화

28) 김혜인 외(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의 내용을 재구성

항목설정		비교 내용 및 시사점		
내용 범주	사업 범주	1차 계획(2007-2013)	2차 계획(2014-2020)	주요 변화 및 시사점
시행 내용		문화권 교류 유럽공동체 시민의식	적용, 관객 계층 확대, 국제 전문가 (international careers) 초국가적 순환: 문학, 순회공연, 행사, 전시, 관람객 집단	력주체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종합적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방향성 채택
	MEDIA	시청각 부문 역량 강화 시청각 창작물 분배 시청각 예술 분야 경쟁력 제고	산업 역량 강화 초점: 디지털 기술, 시장발달에 적용, 분배와 공동생산, 시장접근성	종전 유럽-비유럽 구도 아래 사업목표규정 경향이 사라지고 전체적 역량 강화, 파트너십이 강조됨
	MEDIA Mundus	유럽-제3세계 영화산업 간 문화적/상업적 관계	초국가적 순환: 영업, 분배, 신규 관람객집단, 신규 사업 모델	개인 예술가/수혜자 차원 환경여건에 관한 논의 약화, 반면 협력사업 운영 주체의 진정한 요구(real needs)로서 사업운영 지원체계 강조됨
	분야 공통		보증금 지원 (guarantee fund) 초국가적 정치 협력(transnational spollitical cooperation)	사업시행 기제로 공동생산 (Co-Production) 개념 명시적 강조
	Culture	작품 번안·번역 정보수집공유 문화축제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유럽기관, 유럽 네트워크 활동 예술가, 작품 교류·순환 작품 번안·번역 유럽문화상(European cultural prizes) 지정, Cultural Heritage Seal, Capitals of Culture 등 문화재 지정·보존	추진체계로 네트워크 협력체계 부각 추진방향에 있어 전파, 지원, 공유보다 협력, 교류, 순환 개념 부각 프로젝트 시장성,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목적·취지보다 자금·인력차원에서 생존 역량이 부각됨
	MEDIA	현지예술인 지원 프로젝트, 사업 지원 시청각 문화예술 콘텐츠 공유 신기술 전파	기술, 지식, 네트워크 획득 유럽 내/국제적 공동생산 상업적 AV 행사, 온라인 강의	주체 단위 운영비 지원 폐지, 성과 기반 자금 지원에 보다 충실한 프로젝트 기반 지원 방식 채택
	MEDIA Mundus	관련 산업 현직자들 기술향상 국제시장에 접근성 유럽 예술작품을 유럽 외 시장에 공급		문화사업 비영리단체 대상 지원 기준 강화

항목설정		비교 내용 및 시사점		
내용 범주	사업 범주	1차 계획(2007-2013)	2차 계획(2014-2020)	주요 변화 및 시사점
		내 영 민 주	공통	

② 과정(process) 중심 교류 콘텐츠

■ 국제문화교류에서 그간 선호되어 왔던 교류 내용이 공연·전시, 문화재, 예술품 교류 등 완성된 결과물에 치중되었던 것에서 생산부터 향유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음

- 과거에는 효율성 및 편이성 측면에서 결과물 중심의 교류가 활발했다고 한다면, 최근 국제문화교류 패러다임이 일방적인 문화의 전파나 홍보가 아닌 ‘상호존중 및 이해와 협력’이란 관점에서 강조되는 측면을 반영하듯 기획 단계부터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제작과정 자체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등 “과정”이나 공동 프로젝트 중심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추세임
- ‘과정 중심’ 교류방식의 활성화는 최근 국제문화교류의 지향점이 이전과 달리 공유, 협력, 존중, 이해 등의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콘텐츠 구성방식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전통 및 순수예술 중심교류에서 교류 영역 확장

■ 비영리영역인 전통예술 중심에서 학술연구, 국제 심포지움, 정책플랫폼 공유 및 문화산업분야로의 확장

- 국제문화교류에서 일반적으로 각광받아온 분야는 전통예술로, 이는 그간 교류의 핵심주체가 국가단위 및 주로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주도되어 온 경향을 반영함
- 그러나 최근 국제문화교류의 분야는 비영리영역 중 전통문화나 순수예술 중심 교류를 벗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문화교류를 둘러싼 환경이 초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국제기구나 초국가적 네트워크 및 기구 등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기반 정책교류 및 인문/학술연구 영역까지 확대되는 등 다양화 되고 있는 상황임
- 가장 잘 알려진 사례로 범국가적 국제문화교류 진흥기구로는 IFACCA(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를 들 수 있음. IFACCA는 세계 각국의 문화정책 최신 정보와 문화교류 관련 동향 및 정책 트렌드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인 ‘World CP’를 통해 제공하고 있음. 또한 정기적인 세계총회(Summit on Arts and Culture)를 이를 통해 각국 예술진흥 관련 기구와 관련 단체 및 개인들에게 교류의 장을 열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④ 교류주체: 중앙 ⇨ 지역과 민간으로

■ 국제문화교류를 주도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변화가 활발해지고 있음

- 이런 변화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측면은 수직적·위계적 관계에서 보다는 수평적·네트워크적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교류의 성격이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음
- 일례로 아프리카 투어 서킷(African Tour Circuit) 케이스는 일종의 공공영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재정지원이 투여되기는 하였지만, EC가 주도하고 기획한 것이 아닌 노르웨이 소재 민간단체인 Mimeta가

제안하고, Pamberi Trust, African Synergy Trust 등의 재단 및 비영리기관 등 민간기관 등의 협력 하에 기획 운영된 국제문화교류 사례라 하겠음. 즉 공공은 교류사업의 기획을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관의 제안한 프로젝트에 공공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식으로의 국제문화교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중앙주도에서 지역단위로 국제문화교류 주체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즉, 중앙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여 지역으로 실행을 요청하거나 외부로 전달하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지역 소재 민간단체나 지자체 차원에서 먼저 제안·주도하고 이에 대한 중앙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향식 방식으로 교류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함
- THEATER TOUR BY PEOPLE WITH DISABILITIES 사업은 세네갈의 LOUGA라는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33개의 민간 예술지원 사업 중 하나였음. 지역 소재 인권단체가 사업을 제안하고 해당 지역의 지자체, 중앙정부를 통해 공론화하는 상향적 사업으로서 지역주도성이 주목되는 사례라 할 수 있음

2)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 과정

- 미래지향적 국제문화교류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 과정을 (1)국제문화교류 개념 변화, (2)정책의 비전 및 방향성, (3)정책 추진 과제 및 전략, (4)정책 추진 체계 및 수립 과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비교 및 분석함

【표 2-6】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과정

구분	관련 정책 및 연구	비전 및 세부 내용	추진체계 및 특징
1990년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예진흥 5개년 계획,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 부문계획 (1987-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문화홍보” • 한국의 문화정체성 구축 및 전통 문화 우수성 홍보를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 본의 직제를 통한 수행 • 재외 한국문화원 최초 설립 • 해외홍보관 최초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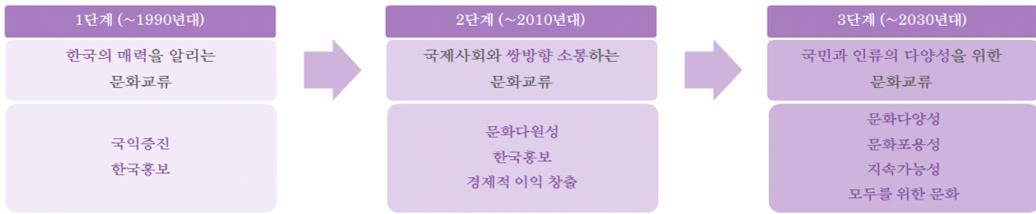
구분	관련 정책 및 연구	비전 및 세부 내용	추진체계 및 특징
199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조성 전략의 문제점과 정책방향』(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를 통한 우리 문화의 세계화” 문화 산업 성장 등의 국익 증진, 국가 이미지 향상과 연계된 것으로 국제문화교류 개념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문화홍보원(1998 개원)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설립
2000년대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문화홍보체계 발전 방안』(문화관광부, 2003)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문화관광부, 2004)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제도수립 방안 연구』(문화관광부,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수세적 민족 문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문화 선진 국가> 구현” 국가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연계, 세계 속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정홍보처의 분리 운영 코리아센터 설립 운영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및 확대 세종학당 설립 운영 국제문화교류전담센터(예경)지정 국제문화교류정책협의회 구성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와 공감하는 문화 매력국가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횡단적 문화교류 모델국가” 모든 주체들이 문화콘텐츠 등을 통해 타 국민과 상호 관계를 맺는 활동. 개인차원에서는 타 문화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사회·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발전을 성취,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추진체계 현황 파악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사업수행의 거시구조 제안 교류 주체별 역할과 수행체계의 통합적 모델 제시
최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지원개선을 위한 조직설계 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 계획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5)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7)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협업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확산” 실천으로서의 활동 영역에 속해 왔던 국제문화교류를 정책 대상으로서 개념 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법정 종합계획의 틀로 사용

- 해방 이후에는 권위주의 정부 체제를 거쳐 정치적 혼란기를 겪었던 점, 민족 문화에 대한 강조와 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의 이념이 설정됨. 이에 따라 민족 정신의 반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예술 및 그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구문화예술을 들여와 진흥하고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둠

- 1990년대 이후 문민정부에서는 ‘세계화’를 강조, 한국문화의 국제화 차원으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관심이 증대,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국제문화교류와 결합하여 문화의 경제적 가치로 확장되기도 함
- 2000년대 이후에는 국제문화교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문화관광부, 2004)를 발간, 문화분야에서 최초로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체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
- 2010년대 이후에는 한류 확산 및 신한류의 재점화에 따라, 한국문화와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이 증대한 바, 국내 문화예술 창조력 향상과 문화교류의 선순환을 위한 교류정책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등 점차적으로 정책대상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 개념과 정체성이 형성됨

3) 시사점

- **국내 국제문화교류 정책은 1990년대까지 국익증진이나 국가 이미지 홍보 등 실천으로서의 활동영역에 주된 초점을 두었으나, 이후 문화적 다원성, 경제적 이익 창출, 쌍방향 소통 등으로 관심을 확대하며 목적으로서의 정책대상으로 개념이 발전해옴**
- 1990년대 이전: 한국 문화정체성 구축 및 전통문화 홍보를 위한 수단적 개념으로서 인식, 이후 문화산업 성장 등의 국익 증진, 국가 이미지 향상과 연계됨
- 2000년대 이후: 국가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연계, 문화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연계하여 문화교류의 개념이 이해되었으며, 국제사회와의 쌍방향 소통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이 설정됨
- 2010년대 이후: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 및 문화다양성의 확산과 관련된 정책적 개념이 마련, 다양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의 가치 확산과 더불어, 소외계층 없는 ‘모두를 위한 문화’로의 방향성이 나타남



【그림 2-7】 국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 과정

2-3. 국제문화교류진흥 정책 현황 분석

1) 2016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및 활동 현황 분석

- 최근 국제문화교류 정책현황 및 활동 현황 파악을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7)를 참고, <국제문화교류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함
- 본 실태조사는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시범조사로 실시,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총 721개(공공 349개, 민간 372개)를 대상으로 2016년 공공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교류 영역, 분야, 방식, 대상국 등)을 비교 분석함
- 국제문화교류 기관 및 단체의 사업현황을 객관적으로 측정,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의 첫 시도로서 이루어진 실태조사로, 문화교류 실태 파악 및 분석이 가능토록 활동 범주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 효율적인 국제문화교류사업 실행의 기초자료로서 행해짐
- 국제문화교류 분야의 핵심 활동범주를 교류 영역, 교류 분야, 교류 방식 세 가지로 설정, 영역별분야별로 교류 방식 및 내용이 어떠한 변화 양상과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됨. 이로써 지원기관이 체감하고 있는 정책지원 사업의 특징 및 한계점을 파악, 활동기관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 사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 도출하는 기초자료가 됨

① 교류 영역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주요 교류영역은 문화예술영역이 66.5%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두 문화예술영역에서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8】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영역 비교

② 교류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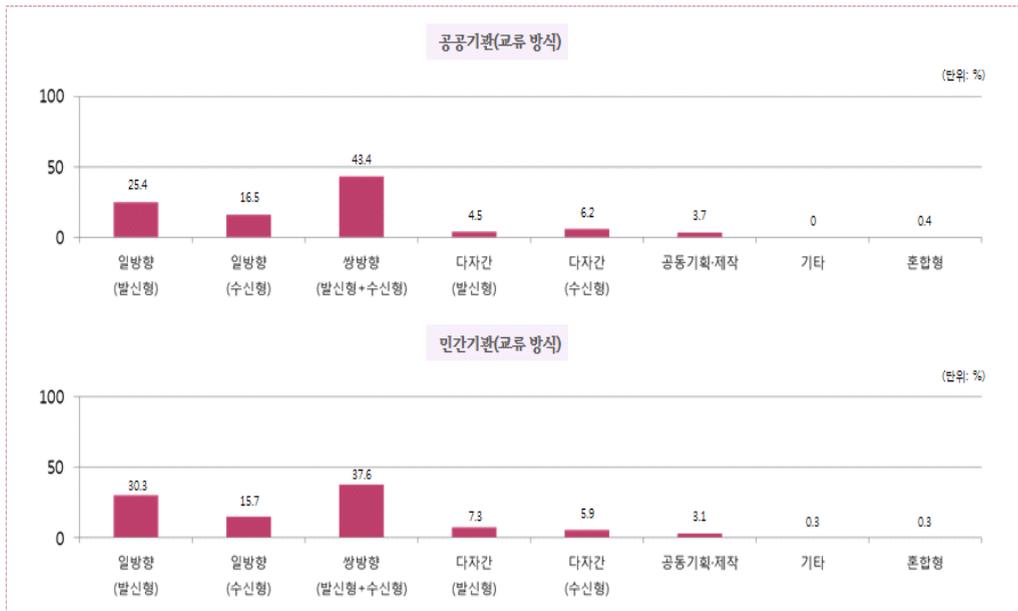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주요 교류분야는 국제행사참여(25.8%)가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모두 가장 많이 활동하는 교류분야가 국제행사 참여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9】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분야 비교

③ 교류 방식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주요 교류 방식은 쌍방향(발신형+수신형)이 41.3%로 가장 많았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류방식 또한 쌍방향(발신형+수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0】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방식 비교

④ 교류 대상국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주요 교류 국가는 중국(37.5%)와 일본(37.2%)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유럽 국가와의 교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국제문화교류의 55.4%가 중국(28.%)과 일본(27.2%)에 집중되어 있음. 지원 및 병행기관으로만 한정할 경우에는 중국 및 일본이 속해있는 '동북아'에 80% 이상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집중되어 있으며, 활동기관의 경우는 '동북아(54.4%)'와 '유럽(23.8%)'에 88% 이상 교류 활동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교류가 활발

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 남미 국가, 중동 국가 등과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그림 2-11】 2016년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국제문화교류 대상국 비교

2) 2017-2018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현황 분석

- 국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및 교류사업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기관별 2017-2018년도 국제문화교류 추진 현황을 분석,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후 나타나는 변화 및 특징들을 파악함
 - 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2017년도 상·하반기 국제문화교류 협업 증진 워크숍에 참석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하는) 17개 지자체 및 유관기관 21개를 대상, 기관 제출 자료 및 워크숍 자료집을 토대로 분석됨
 - 분석 내용은 기관별 국제문화교류 지원 사업의 방향성, 2017년 및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현황, 사업 평가, 향후 방향성 등으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2-7】 2017-2018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 현황 분석 결과

		지자체	유관기관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해당 지자체의 '도 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2018년도 사업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문화 콘텐츠 발굴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던 예술 담론을 확대, 중동, 동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권역과의 교류로 넓혀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드러남
교류 현황	교류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전통문화가 주된 영역이며 문화산업 및 스포츠분야 교류 일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특성화된 영역 별 교류 사업(지원, 활동) 추진
	교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매(우호)도시간 작품교류 행사, 문화 홍보, 국제행사 참여, 우수공연 해외 초청 및 해외 축제 참여등이 주를 이룸 Ex. 자매도시서화교류전, 제2회 샤프로 국제예술제 참가, 00무용단 스웨덴 해외공연, 한중인문교류관광패م 투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품교류 및 공동프로젝트, 국제행사 참여 등 다양한 분야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력 교류의 경우 기관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중심의 교류가 주를 이룸 Ex. 해외 한국학 사서 워크숍, 해외 작곡가 및 음악과 교수를 대상으로한 국제 국악연수, ODA 수원국 출신 현대미술 분야 실무자 초청 연수 등
	교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발신형일방향 사업 및 교류국과의 공동 개최를 통한 쌍방향 사업이 다수, 일부 다자간 교류를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었음 Ex.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제주도는 UCLG 개최 계기로 국제기구-제주-공기업(JDC) 간협약, 지역 청년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체결 등 의연속 사업으로 연계) Ex.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제주도의 경우 ning보(중국), 나라(일본) 간 협의체 구축 통해 2017, 2018년도 후속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국과 공동 기획 및 행사 개최하는 쌍방향 교류가 많으며, 다자간 협력 교류 활성화 Ex. 아시아-유럽박물관 네트워크, 국제협의회 활동 등 전통문화 영역은 여전히 발신의 측면이 강하나, 공동 제작 및 기획 통해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 Ex. 국립극장전속단체 우수레퍼토리 작품
	교류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매(우호)도시 사업의 경우 중국과 일본 교류가 월등히 많으나, 러시아, 폴란드, 네덜 등의 소규모 도시와 협약을 맺고 교류를 시도하기도 함 발신형 사업의 경우미국, 서유럽, 북유럽 일부 등 교류국이 보다 다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교류 미진국과 새로운 교류 네트워크 형성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Ex. ODA 사업, 레지던시 사업 등

3) 시사점

① 시사점 전반

■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영역에서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가운데, 공공 및 민간 주체 별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 지원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거시적인 기능 측면에서 중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음
- 현재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사기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전반적 협력 및 업무조정 강화가 필요
- 한편, 각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및 협력사업이 부족한 점, 국제문화교류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영역과 전문기능을 파악하여 상호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업무중복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교류 분야 및 방법의 다양화 시도(동아시아문화도시 등 다자간 협의체의 활용)가 발견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그러나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이후, 법에 의한 새로운 시도나 변화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

- 기관에 따라 특정 장르에 대한 교류지원이나 전통문화 중심의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문화교류 콘텐츠의 기획 및 발굴에 따른 다양성 확보가 부족

② 지원기관 활동 및 방식 관련

■ 세분화된 전문인력 양성과 지원의 필요: 교류사업 직접 추진 시, 적합한 전문인력(통역 및 해당 지역 전문가) 부재로 원활한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름

- 문화산업분야의 경우 한류확산과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외마케터, 수출코디네이터(coordinator), 문화산업 전문 컨설턴트 등의 문화산업 교류 및 수출 전문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며 문화산업 해외진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전문적인 국제교류사업의 기획 및 발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부족한 상황임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카데미 및 양성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기관의 경우 예비 및 신진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으나 경력급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심화과정은 미흡한 상황
- 현장 실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인력 양성교육과정의 개발과 경력직의 재교육 및 심화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

■ **지속가능한 교류 지원 방식의 마련: 국제행사참여 및 작품교류 활동 시, 행사 참여 외에도 현지와 네트워크 조성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방식 마련이 요구됨**

- 행사성 이벤트(전시 등의 작품교류)가 주를 이루며, 민간 인들의 교류(청소년) 및 국내단체의 해외파견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지나치게 단기(일주일 이내)인 경우가 많음
- 특히 공연 단체의 경우, 행사준비 외에 별도의 네트워크 및 인적교류(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후속사업 연계를 통한 지속성 구축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지원기관 및 교류 주체와 협력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 및 매개 지원 필요: 지원기관의 정책사업 추진 시 교류 채널 및 네트워크적 한계가 존재, 다자간 사업 추진보다는 쌍방향 교류 또는 발신형 교류사업을 선호함**

- 좋은 국내 다른 시·도의 사례나 해외 사례 등 국제문화교류 관련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하고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정기 워크숍, 포탈

서비스, 아카이브 등), 그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정보활용 및 사례 학습 매뉴얼) 또한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임

③ 지자체

■ 담당 행정 인력의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교육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외국 행사에 초청되어 '방문'하거나, 행사에 '참석'한 사항 등이 국제문화교류 실적으로 제출되고 있음. 지자체 업무 관계자들은 '국제문화교류'라는 개념에 대하여, 그것의 목적이나 과정 상의 특징 보다는 무조건 '해외'와의 관련성이 있는 이벤트의 하나로 해당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듯 함
- 국제문화교류 업무 및 사업 방향 설정과 관련, 이전 년도 문서에 기록된 방향성과 이듬해 사업 방향성에 큰 차이가 없음(중앙의 정책 및 비전, 목표 등이 지방 업무 담당자에게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담당자의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대한 이해 및 사업 방향성에 대한 큰 고려 없이, 기계적인 업무 추진 및 사업 추진, 이는 국제문화교류 활동의 내실 제고 및 질적 제고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됨
- 대부분 지자체의 사업 방향의 어휘 속에는 국제문화교류에서 중시하는 가치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오히려 공통적으로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구축이라든가, 홍보 등과 같은 외교적 가치나 국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문화교류의 개념과 중요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홍보/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자료) 등이 필요해보임
- 국제문화교류 정책 사업 수립 시, 담당자의 이해 미진으로 기존 사업의 관습적 반복이 상당하였으나,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류의 의지를 보이거나 이를 사업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도 있는 점, 담당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식 제고 필요. 특히 문화 전파라는 발신(일방향)형 개념에서, '소통'과 같은 상호적 의미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함

■ 지자체 별로 다자간 협력 및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문화교류의 지속성 모색을 시도하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음

- 일회성 행사 중심의 교류가 지나는 한계점을 인식, 국제행사 등을 계기로 형성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후속사업 추진으로 지속적 교류를 이어가는 등 한계점 보완을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ex.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A의 경우, 해당 도시와의 네트워크 지속을 통해 한중일 협의회를 구축, 후속사업 등을 통해 교류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자체B의 경우, 국제기구-지자체-기업의 민간협력 형태로 국제행사의 단발적 한계 보완, 연속성 있는 지자체 사업으로 풀어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 지자체에서 상당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문화 중심의 지원이나 교류는, 콘텐츠 내용상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려울 수 있음. 한국의 경우 발신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지만, 상대국가나 교류 대상의 경우 그들 자신의 삶과 밀접한 연관 또는 필요와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임
- 작품교류가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와 더불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간 네트워크 형성이나, 정서적 교류의 계기를 만드는 종류의 성과는 드러나고 있지 않음

④ 민간 및 각종 활동기관

■ 권역 및 지역별 맞춤형 정보 수요 증가: 교류 대상국과의 협력형 사업 지속되는 한편, 교류 지역의 특수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공연의 차별화 시도 등 문화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한 고민과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각국별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의 기획과 제공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국내문화를 소개하기 위한 플랜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교류사업의 진행이 필요
-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담당기관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각각의 기관은 정보의 공유 또는 기관과의 특색사업 개발 등의 과정을 보완, 교류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교류 대상 및 방법의 다양화 시도: 교류 대상 국가를 다양화 하려는 시도와 함께 다자간 협력 사업 시행

- 해외문화원의 주재지역의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강조한 비슷한 강좌나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각가의 권역에 대한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발굴이 필요하며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

ex. 타지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국립도서관과의 MOU체결 및 갱신,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내 국악문화학교 개설지원 등

- 교류 대상의 다양화 관련, 외교적으로 중요시되는 나라의 리스트를 외교부 협조를 통해 공유하고, 사업 계획시 참고·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국제적으로 시급히 원조 또는 관심이 필요한 나라, 혹은 국내 거주 비중이 높아지는 베트남, 동남아시아, 러시아 지역과의 교류 비중은 일반 시민들의 삶과 직접 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므로, 연속성을 지닐 수 있으며 그 의미도 키울 수 있음

3

국제문화교류진흥 중기 정책 비전 및 목표

3-1.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성

3-2.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3-3.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

3-1.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성

1) 기존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검토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2012년도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정정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²⁹⁾에서는 ‘세계와 공감하는 문화 매력국가’를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으로 제시, 한국문화 및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함

KEYWORDS

- ① 문화다양성 증진
- ② 횡단적 문화교류 모델국가
- ③ 한류 지속,
- ④ 문화교류콘텐츠의 다각화
- ⑤ 정부지원 거버넌스 체계 강화
- ⑥ 교류 지속성 확보 추진

- 한류 확산 및 신한류의 재점화가 이슈였던 당시에 한국문화 및 문화교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적의식 하에 정립된 비전 및 목표였음. 한국의 국제문화교류 접근의 약점을 ①Global killing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점, ②문화교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통제력행사 시도들이 정책영역에서 나타난다는 점, ③한국문화의 일방적 수출이 문화교류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의 문제, ④문화다양성 및 다원주의에 대한 역사적 체험이 짧다는 점 등을 지적했음

29)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국제문화교류 비전과 전략



【그림 3-1】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그러나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사회 전반, 국가품격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기는 행정부의 관심 증대라는 환경적 요인이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 보며 국제문화교류의 새로운 비전 정립을 시도함

● 주요 제안

인아웃바운드 균형추구 전략사업	인바운드 국내거점 확대사업
	아웃바운드 문화교류증진사업 (해외문화연구 전문위원회 포럼설립,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교류민주성 확대사업	신진예술가 문화교류멘토링사업
	국제문화교류기초인력 양성사업
	SNS 활용 네트워크 구축사업

자료: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② <국제문화교류 중장기계획수립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2015년도 <국제문화교류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김혜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³⁰⁾의 경우, ‘창의적 협업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확산’이라는 국제문화교류의 정책 비전을 제안, 이는 현재 법정 종합계획의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음

KEYWORDS

- ① 쌍방향에서 협력·협업으로
- ② 교류대상과 교류방법의 다양화
- ③ 존엄성 있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 및 존재감 강조
- ④ 국제문화교류 전문성 강화
- ⑤ 글로벌한 환경구축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 당시 국제문화교류 사업 및 정책의 현황적 문제점을 ①낮은 질의 단편적 교류 난립으로 인한 한국문화에 대한 인식도 하락, ②국가 간 양국 문화소개 사업 외의 교류방식 발굴의 부족, ③외교부와 문체부의 정책영역 혼란 지속으로 인한 문화예술 정책영역으로서의 정체성 정립 부족, ④정치외교적 이익 및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문화교류로의 인식 지속, ⑤법제도적 장치마련의 지지부진

30)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으로 인한 정책효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⑥교류 대상의 문화적 특징 등에 대한 분석 부족으로 인한 교류전문성 문제, ⑦민간과 지자체의 문화교류 상황 및 특징 파악 부족 등으로 지적했음



【그림 3-2】 <국제문화교류 중장기계획수립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최근 범사회 트렌드 및 문화교류에 대한 국외단체들의 주요 방향에 대한 키워드를 ①국제기구 및 다자간 협업의 강화, ②국제사회의 분쟁과 충돌의 해결장치로서 문화교류가 지니는 문화다양성 확산 가치에 대한 기대 강화, ③문화예술분야의

위키비즈니스적 협업시스템 확산은 문화교류방법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으로 바라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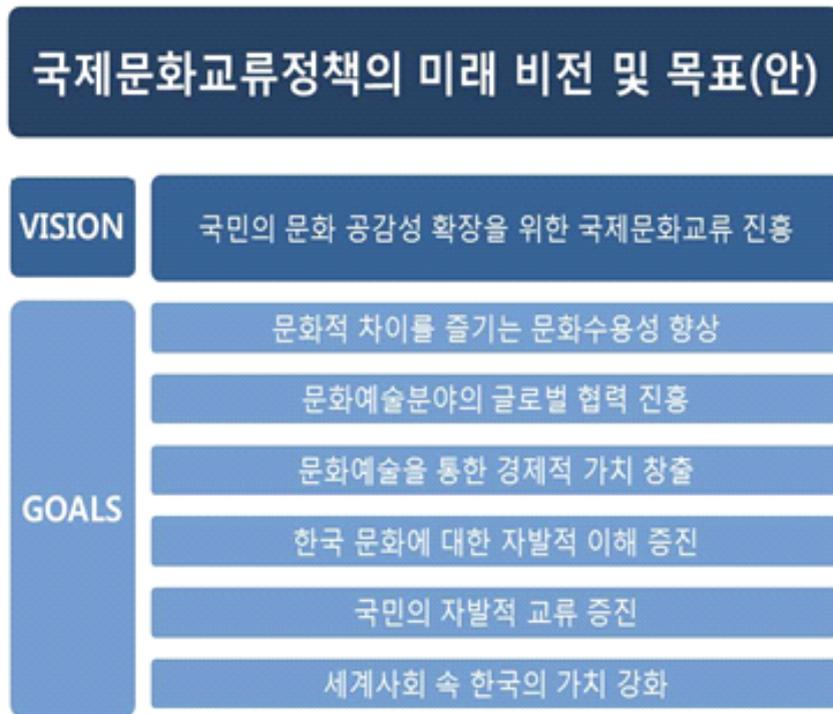
● 주요 제안

협력의 국제문화교류	다자협력 채널 진흥 (주한문화원 네트워크 발족 및 진흥, UNICK 네트워크형 지원사업)
	공동협력 기획 진흥: 한국문화콘텐츠 협력기획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지원, 민관 및 산학협력모델구성 지원 등)
	양자/삼자 교류공동체 추진(한중일 문화공동체 등)
	세계 문화의 집 설립 추진
다양한 권역과 소통 하는 국제문화교류	아시아 교류의 맞춤형 교류 진흥(동아시아 네트워크형, 국가간 교류형)
	서구 유럽 및 북미 교류의 다자간 교류 및 창조산업 교류 진흥사업
	오세아니아 교류의 예술교육 및 인력교류 진흥사업
	교류 비활성화 지역 스타트업 교류지원사업
세계 속 문화적 존 재감을 높이는 국제 문화교류	세계 주요도시 '코리아 위크' 추진
	재외 한국문화원 특성화 지원
	세종학당 활성화 지원
국제문화교류 전문성 제고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심화 및 출구전략 마련 (양성 후 지원사업 기획 및 지원 등)
	권역별 백서 및 한국문화교류 가이드북 개발 및 배포
	문화교류활동 빅데이터 구축 지원
	수교 및 대규모 교류 프로그램 개발 지원(통번역 지원 포함)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지자체 국제문화교류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지역중심 문화교류단체의 글로벌사업 집중지원
	지역협력형 국제문화교류 지원
	교류지원 플랫폼 활성화 및 전담기관 지정

- <국제문화교류정책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의 경우 현재 법정 종합계획의 기본 틀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키워드, 비전, 주요 추진과제 등의 제안이 문체부의 중장기 계획 발표로 이어진 경우는 아직 없음

③ <문화공감 포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2017년도에는 <문화공감 포럼>(한국문화관광연구원³¹⁾을 개최, 국제문화교류 정책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과제와 함께 '창의적 협업을 통한 국제문화교류의 확산'이라는 비전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적 지향점을 확인



【그림 3-3】 <문화공감 포럼>(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KEYWORDS

- 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은가?
- ② 한국문화를 이국적 문화로 보이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정체성있는 문화로 보이고 싶은 것인가?
- ③ 문화교류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향상시키고 싶은가?
- ④ 문화교류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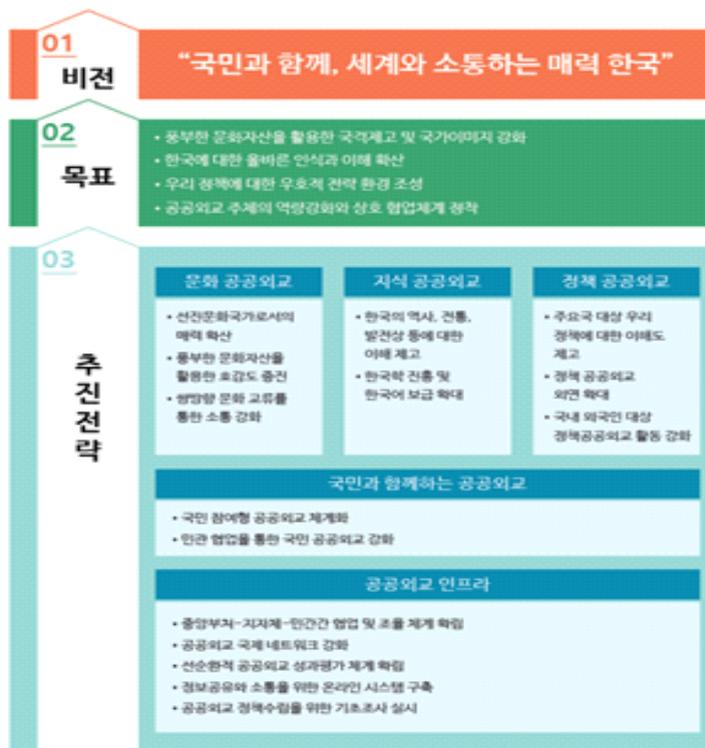
31)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기 추진 정책의 성과로 ①<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과 법제도 기본장치 마련, ②재외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의 양적 확충, ③문화 부문 국제개발협력 지원의 시작과 중요성 인식강화, ④전문인력 양성의 시작 등을 들었음
- 기 추진 정책들의 한계로 ①국제사회의 추세, 기술적 발전, 문화의 가치 증대와 같은 변화추세에 따른 문화교류에 대한 담론과 공유된 인식의 부족, ②재외한국문화원의 역할과 정체성 미 정립, ③문화ODA의 전략 및 기반마련 부족, ④류대상의 문화권 및 특징 파악 부족, ⑤국제문화교류정책의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목표 부재, ⑥민관 협력 및 중앙-지역 협치의 방안 고민 부족, ⑦전문인력의 조건 및 역할, 정책적 지원 가능 부문에 대한 구체성 결여, ⑧보편성과 한국문화 동시 고려 방법에 대한 고민 부족, ⑨다양한 파트너십의 활용 부족, ⑩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향상 방안 고민 부족, ⑪한류를 벗어난 교류를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가능성에 대한 구체성 부족, ⑫정부주도 교류로 인한 자발성 부족 등이 지적됨
-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전략적 질문들로 위의 4가지 질문과 답을 제시
 - 1) 국제사회 속 책임있는 일원의 이미지, 협력파트너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며 한국문화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세계사회 속에서의 한국의 가치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2) 전통문화나 한류 등으로 국한되어 중복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교류 콘텐츠 구성, 교류대상인 외국인들의 문화권, 생활권, 정체성 사이에서 익숙함과 낯설음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발적 문화수용성 진흥을 위한 연계점을 생성할 주제들을 발굴해야한다는 점
 - 3) 문화다양성 협약국가이자, 주한외국인 70만이 넘어가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한국인은 외국 문화, 나와 다른 문화, 소수문화 등에 대한 문화다양성의 수용성 정도가 낮다는 문제의식 속에 다양한 층위의 문화예술교류 경험은 문화의 수용력과 다른 문화에 대한 공감의 일상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이 문화교류정책의 또 다른 강조점이어야 한다는 점
 - 4) 문화의 국제교류와 수출은 특정 문화권에 대한 접근성제고 ⇨ 문화의 이해와 공감 ⇨ 문화의 수용 ⇨ 문화행위 ⇨ 구매, 방문, 다운로드 등의 적극적 행동 ⇨ 국가 브랜드 향상 ⇨ 타 제품과 서비스 소비의 증가 등의 단계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됨. 문화는 생산의 한계비용이 매우 낮은 영역으로 한계점을 넘어서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 분야라는 점에서의 기초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점

④ <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외교부, 2017)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올해 초 발표된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 따르면 공공외교의 개념 및 업무추진 체계들이 국제문화교류와는 다른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외교부, 2017)의 주요 내용은 ①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②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③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④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⑥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등으로, 전반적인 정책의 방향성이 외교적 이익, 즉 국격(국익)의 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에 맞춰져 있음. 그를 위한 자원·수단으로서 문화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3-4】 <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외교부, 2017)에서 도출된 비전 및 목표

- 기존 공공외교 현황의 문제점에 대하여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 ①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의 공공외교 활동이 상호 조율 없이 수행되고 있어, 공공외교 활동 현황 파악이 쉽지 않고 업무의 유사·중복, 편중 및 누락문제 등 비효율성이 존재, ②“공공외교”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실상 공공외교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교적 목적에 맞게 적극 활용하지 못하여 국익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 ③ 민간의 경우 대상의 국가 및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일방적 추진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나 호감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의 전문성 결여

【표 3-1】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

기본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외교 가이드라인 ● 향후 5년간 범정부적·범국민적 차원의 통합적·체계적인 공공외교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제시
주요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외교 수행주체 ● 중앙부처, 지자체, 재외공관, 민간 등 대한민국 모든 공공외교 수행주체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성격의 기본계획 수립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 콘텐츠별 공공외교 추진전략 등 ● 문화, 지식, 정책 등으로 콘텐츠별 활동목표 및 구체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그밖에도 국민들의 공공외교 인식제고 및 참여 강화, 인프라 강화 관련 추진과제를 명시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외교 효과성 제고 ● 공공외교 수요자인 외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이해도, 신뢰도를 효과적으로 제고하여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외교를 추진

- 위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①내실있는 공공외교법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②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각 주체(중앙부처-지자체간)의 협업 통한 공공외교 효과 도모, ③국민 참여형 공공외교³²⁾ 활성화를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제고, 3가지 과제 및 다음과 같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함

32) 국민외교: 신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합의를 근간으로 한 외교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소통 확대 활동

【표 3-2】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에 따른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추진 과제		세부 과제	
1. 공공외교 추진체계 확립	중앙부처-지자체-민간간 협업 및 조율 체계 확립	대한민국 공공외교 통합조정 기구로서 「공공외교 위원회」 위상 확립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협업체계 구축 공공외교 추진기관 및 한국국제교류단의 역할 강화	
2.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선진문화국가로서의 매력 확산	수교기념 및 주요외교계기 행사의 전략적 활용 재외공관별 현지 맞춤형 한국 알리기 한국 예술품 소개공간으로서 재외공관과 문화원 활용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호감도 증진	한류(대중문화)의 전략적 확산 전통·현대 한국 문화의 체계적 전파 국제 스포츠 행사의 효과적 활용 미래형 문화 콘텐츠 발굴 및 확산 지원 한식 홍보 강화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
			쌍방향 문화 교류를 통한 소통 강화
	3.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한국학 진흥 및 한국어 보급 확대	해외 한국학 맞춤형 지원 강화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육성 해외 한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강화 해외 한국학 및 한국어 교육 진흥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

추진 과제		세부 과제
4.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주요국 대상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통합적·체계적 정책공공외교 강화 주요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지지 확보
	정책공공외교 외연 확대 (대상, 주제, 방식, 콘텐츠)	정책공공외교 지역 및 대상층 확대 정책공공외교 수행주체 및 사업 방식 다변화 정책공공외교 콘텐츠 개발
	국내 외국인 대상 정책공공외교 활동 강화	국내 외국인 및 유학생과의 교류 강화 주한 외신 기자단 및 외교단 정책 이해도 제고
5.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국민참여형 문화외교 체계화	차세대 국민 공공외교 추진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재외동포의 공공외교 활동 지원 우리국민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
	민관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	민관협력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구성 민간 공공외교 저변 확대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지원
6.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	공공외교 국제네트워크 강화	국제 공공외교 협의체 발족 및 협력기반 강화 재외공관 공공외교 내실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선순환적 공공외교 성과평가 체계 확립	공공외교 평가모델 개발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제도 운영 공공외교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공공외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공공외교포털 기능 활성화
	공공외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공공외교 실태조사 정례화 해외 한국 이미지 조사 실시

자료: 외교부(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를 참고하여 정리

- 2017년 외교부에서 발표한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연구>(2012)에서 드러난 비전 및 핵심목표와 유사한 점이 많음. 그러나 한국 문화 발전에 중점을 두거나 문화교류의 도구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추구하는 등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성은, 추후 국제문화교류 정책이 어떠한 지점에서 공공외교와 차별화된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 시사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제문화교류의 생태계 특징 고려

■ 문화예술관련 전문기관 중심의 문화교류 프로젝트 중심

-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국악 등),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생활문화, 지역문화,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예술분야 각종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들은 자체 기획 등을 통해 각종 문화예술교류 사업들을 수행함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시각 및 공연예술 관련 기관, 각종 문화예술관련 협회, 무형문화재 및 유형문화재 관련 기관, 문화예술교육기관, 지역문화예술 관련 기관 다양한 형태의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은 (a) 자신들의 작품 및 프로젝트를 국외에 알리기 위해, (b) 국외의 좋은 프로젝트들을 국내에 알리기 위해, (c)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d) 다양한 국제페스티벌, 국제행사 등에 참가하기 위해, (e) 자신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수집을 위해, (f) 관련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등의 이유로 교류 사업들을 진행함
- 이들은 (a) 자체 기획의도에 따라, (b) 교류대상의 요청 및 제안에 의해, (c) 정부나 타 주체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d) 우연한 기회에 따라 등의 계기로 교류사업을 기획 및 참여하게 되며 한번 교류사업을 진행한 기관은 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음

■ 공공기관 및 문화재단이 문화교류관련 지원 및 매개기관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 및 준정부기관 성격의 기관들(예.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과 지역정부 산하 문화재단들(예.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제주문화재단 등)은 본래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민간의 문화예술교류를 진흥하는 지원사업 수행 역할에 주된 목적임
- 또한 중앙 및 지역정부 차원의 교류사업(예. 한국 정부와 외국 정부의 수교 행사 차원의 교류행사의 주관 등)의 주관기관으로 역할하며 민간과 정부 사이의 매개기관 역할을 수행함
- 공공 주체의 문화예술재단 및 각종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들은 직접적인 교류주체로서의 역할과 교류를 지원하는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음

■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복지분야 NGO들이 문화교류 중요 NGO주체

-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전문기관들은 보다 큰 조직과 고정적 공간을 바탕으로 한 교류사업을 진행한다면, 문화예술 분야 NPO들은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프로젝트 단위의 교류사업을 진행함
- 특히 이들의 경우 하이퍼 네트워크, 전문인력 간의 인식 및 기획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다양한 교류사업의 기회를 발굴하고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제문화교류활동의 가장 직접적 주체로 볼 수 있음. 이들의 활동은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재정 및 제도 지원의 대상임 문화 부분 NGO들은 국내에서 문화 NPO와 크게 구분되어 인식되고 있지 않아 국제문화교류의 주체로서 NPO와 크게 분류되기 어려우나, 국제개발협력 및 사회복지 분야 NGO들은 문화교류에 있어 중요한 매개주체이자 교류 주체로 역할
- 이들은 교류대상국가 및 권역의 문화권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장 밀착형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예술 중심의 교류활동보다 문화전반 중심의 교류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매개주체이자 직접교류주체로서 역할을 함

■ 문화예술, 전통문화예술 등의 예술프로젝트 중심 교류

- 문화예술전문단체, 기관들의 주요 주체가 되는 문화예술교류의 가장 대표적 형태이며 점차 국가 대 국가 간 교류보다는 기획의 주제와 내용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다자간 교류로 흘러가는 경향이 강함
- ‘교류’라는 타이틀로 분류되기보다 자연스러운 문화예술활동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한국-호주 교류전시’ 형태의 교류보다는 기획의 주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주체들이 교류하였는가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남
- 전시, 공연, 페스티벌, 문학작품 등의 교류프로젝트 활동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교류의 결과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인식되는 활동 유형임. 프로젝트가 기획, 공유, 진행, 평가되는 모든 과정이 교류라는 점에서 과정 중심의 교류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만, 교류의 최종 결과물이 프로젝트라는 시각화될 수 있는 형태로 종료되는 경우가 대다수임

- 공동기획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선(先)기획 및 완성된 프로젝트를 주고받는 일방향 교류 모두 활발하게 나타나며, 최근으로 오면서 일방향 교류보다는 쌍방향 교류사업의 강조 및 과정부터 교류하는 공동제작 및 기획이 보다 강조되는 모습이 보임

■ 수교기념 및 한국문화홍보 목적의 행사성 교류 다수

- 한국문화 홍보 및 국가 간 수교를 기념하기 위한 목적의 행사성 교류는 그 주요 주체가 중앙정부 및 지역정부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간의 수교 지속을 축하하고 양국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이루어짐
- 이런 목적의 교류에 포함되는 교류행사들은 전통문화분야 전시, 공연 등과 예술분야 전시, 공연 등이 주를 이루며, 대국민 대상 페스티벌 등도 종종 포함됨
- 보통 양국에서 각종 다양한 전시, 공연, 학술행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형태의 교류는 그간의 양국 간의 교류지속을 축하하고 향후의 상호 호혜적 관계의 지속을 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문화수용성 강화를 위한 문화권별 생활문화 이해교류 점진적 확산 중

- 문화권에 따른 전통문화나 생활문화 등의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수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류영역은 문화권 교류페스티벌, 교육, 출판,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음
- 국제사회 전반에서 문화다양성 증진을 강조하는 흐름은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예술교류 중심 외에 문화권별 전통문화 및 생활문화 전반에 대한 서로의 문화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단위 및 레벨의 교류활동의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이슬람문화주간’ 같은 제목으로 특정 문화권의 생활문화, 민속문화, 전통문화 등을 체험하고, 즐기는 행사 등은 대표적인 문화수용성 강화형태의 교류활동임. 이런 교류활동은 행사, 교육, 체험, 전시, 공연, 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짐

■ 언어교육 제공을 시작으로 한 문화교류 파급효과 진행 중

- British Council의 영어교육, Goethe Institut의 독일어교육, Alliance Francaise의 프랑스어교육처럼 언어를 통한 교류는 가장 오랜 역사와 파급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음. 언어에 대한 이해는 타 문화권에 대한 이해의 기본이자 자발적 탐구 및 교류를 확산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각 국 정부는 문화교류사업의 기본 바탕으로 언어교육사업을 집중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 또한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도 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이 한국어교육의 수요를 높이고 있기도 한 쌍방효과 속에서 확산되고 있음

3)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주요 개념 검토

① ‘문화다양성’와 ‘문화교류’의 가치 공유

■ 소수문화 중심 개념이 아닌 문화적 고유성과 문화 정체성 개념에 무게를 둔 문화다양성 개념이 국제문화교류정책 가치방향 내에서 논의될 필요

- 유네스코의 중장기전략에서 드러나 있듯 ‘문화다양성’은 세계적 문화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주요 개념이며, ‘다양성’, ‘분권’, ‘협치’ 등을 중시하는 국내 정부 정책 과도 연결됨. 문화교류와 관련된 개념들이 ‘다양성’의 차원으로 수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다양성의 가치개념을 문화교류의 정책적 가치 중 하나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 그간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 온 과정에는 유네스코의 활동과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민권운동의 발전과정이 있었음. 특히 인종이나 종족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문화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하였음
-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 논의에서 문화의 개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면서, 문화와 정체성, 문화와 발전, 문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켜나갔음. 유네스코 164개 회원국은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를 발표했다

- 이 주요 내용 중 문화는 시공간을 걸쳐 다양한 양식을 가지고,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고 규정함. 즉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라는 점
- ‘문화적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풍요롭고 다양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교류를 공통된 개념을 공유하고 있음
-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 문화 발전에의 기여’라는 측면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음.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를 수용, 궁극적으로 우리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와 관련된 개념들이 ‘다양성’의 차원으로 수렴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 가치로 다뤄져야 함

②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으로의 주목

- 다양한 국제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용적 성장’이 대두되고 있음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은 ‘세계화’ 논쟁과 함께 ‘불평등’, ‘기회의 박탈’, ‘충돌’, ‘갈등’, ‘사회 불안정’ 등의 핵심적인 부정 이슈들을 관통할 수 있는 해법적 화두로 제기되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WEF)은 포용적 성장을 통해 다양한 국제문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라 역설함
- WEF는 2015년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를 발표하며, 노동과 기업, 성장과 평등을 대립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병행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함. 클라우스 슈밥 WEF 회장은 “전세계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이 집중해야할 최우선과제는 경제성장 과정과 그 성과에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서문에 밝히고 있음

- WEF는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2015)』를 통해 교육, 사회 인프라, 문화, 부패와 비효율, 추방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들이 국가의 진정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14위를 기록함. 더불어 한국이 OECD 최저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나 낮은 청렴도, 개인의 삶의 만족도 등의 여건을 개선하면 포용적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 ‘포용적 성장’을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의 대안적 방향가치로 고려해볼 수 있음. 지난 정부의 부패로 인해 현재 한국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적폐청산’인데, 청산 이후의 미래지향적 사회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 이에 대안적 화두인 포용적 성장은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더 강한 시사점을 지니고 있음

③ 문화기본법 상의 3대 기본가치 :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의 고려

- <문화기본법>은 문화정책의 방향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향후 문화교류책의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안)을 제시할 때, <문화기본법>과의 연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문화기본법> 제7조에도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문화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기본법>상의 기본 이념은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인데, 이 3가지 기본 원칙은 문화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표 3-3】 문화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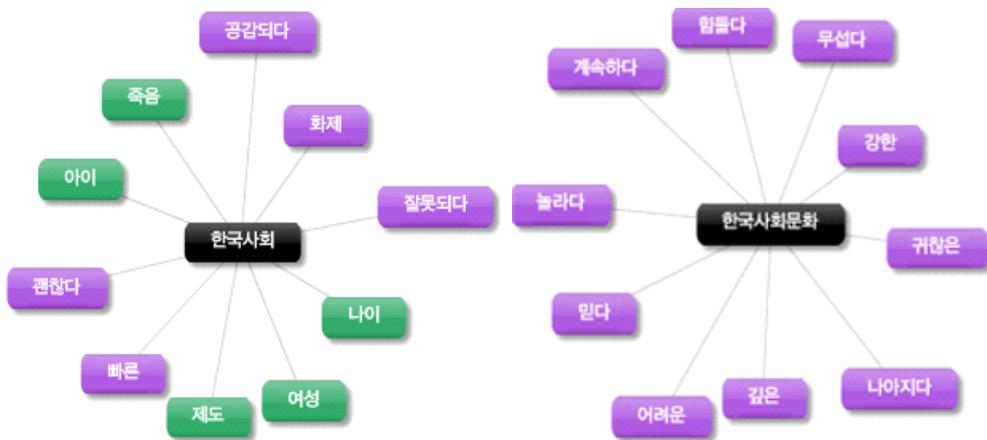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7조(문화정책 수립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④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서의 ‘문화’를 교류 한다는 방향의 공유

- 2017년 실시된 <문화청책포럼>을 통해 수집된 국민들의 의견을 보면 국민들은 문화를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인지하고 있음
- 또한 ‘한국사회’와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셜 매트릭스 작업 결과 상 발견되는 심리적 연관어들을 분석해보면 부정적 심리단어(힘들다, 무섭다, 어렵다 등)와 함께 사회의 미래가능성 판단 표현(나아지다, 믿다, 놀라다 등)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키워드와 문화적 특징 키워드의 층위는 상이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소셜 매트릭스 상에서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가 종종 발견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국민들도 문화를 미래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위한 핵심요소로 바라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김혜인 외, 2017)



*자료: <http://www.socialmetrics.co.kr/searchKeywordMap.html?keyword>

【그림 3-5】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소셜 매트릭스: 한국사회, 한국사회문화

4) 국제문화교류 가치 우선순위 및 위계배치를 위한 고려사항

■ 방향설정을 위한 질문들

- 한국의 문화정책으로서 국내의 문화다양성 환경 구축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한국문화를 알리고 소통한다는 점에 집중하여야 하는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 공공외교정책의 효과 및 강조점 부분과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인가?
- 국제문화교류의 주체 전문화, 대상 다양화, 방법 및 내용 다양화 및 전문화, 제도 정비 등의 이슈 중에서 향후 5년간의 정책방향으로서의 우선순위 설정은 어떠한가?
- 중앙정부, 지역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역할 및 협업 설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 문화예술교류, 문화교류를 통한 수출 및 소비 진작, 문화ODA 등의 기대효과가

다르다는 점에서 정책 집중의 균형을 고려할 때 전체 정책 계획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 국제문화교류정책의 주요 가치 및 키워드 도출

- 이상의 검토를 통해 ①최근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발전 방향성을 반영하는 ‘다양성’, ‘포용성’, ②국익 및 국가 이미지를 중시하는 공공외교와 차별화되는 지점으로서의 ‘모두’, ‘삶의 질’, ‘향유’, ③세계 문화의 발전에 대한 책무와 기여로서의 ‘보편가치’, ‘인류’, ‘세계시민’ 과 같은 가치 키워드 들이 추출됨
- 전문가 FGI³³⁾를 바탕으로 도출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요 가치 및 키워드로 다음 그림을 들 수 있음



[그림 3-6] 전문가 FGI를 통해 도출된 주요 가치 및 키워드

■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가치 우선순위 및 위계배치를 위하여 이하의 사항들을 고려, 최종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요가치를 다음 그림과 같이 도출함

- 여러 문화의 수용, 세계 문화의 발전 등 문화교류의 여러 가치들이 수렴하는 개념으로서 ‘다양성’ 강조할 것

33) 본 연구에 관한 전문가 FGI 조사는 2017년 11월 6일-2018년 1월 19일 총 4 차례에 걸쳐 진행됨

- 지속가능성, 포용성, 공감과 존중 등 소외된 집단이 없도록 하는 세계적 문화 이슈의 큰 흐름을 반영할 것
- 문화교류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 바,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을 수단으로 하되 그것이 국민의 향유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제시할 것
- ‘한국’, ‘국가’ 등 국가를 강조하거나 외교적 인상을 주는 단어는 지양, 공공외교와 차별화되는 문화교류의 정체성을 마련할 것



【그림 3-7】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요 가치다이아그램

- 이는 결국 국제문화교류의 역할 및 정체성으로서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되, 그간 문화교류과정에서 간과해왔던 자국민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그것이 ‘모두’를 위한 것, 모두의 평화와 자유에 정책의 지향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함
- 국가, 국익이 아닌 ‘국민 모두’의 문화적 삶, 그를 통한 지속가능 사회를 지향하는 국제문화교류의 주요가치들은 공공외교와 차별화되어야 할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중심목표이자 정체성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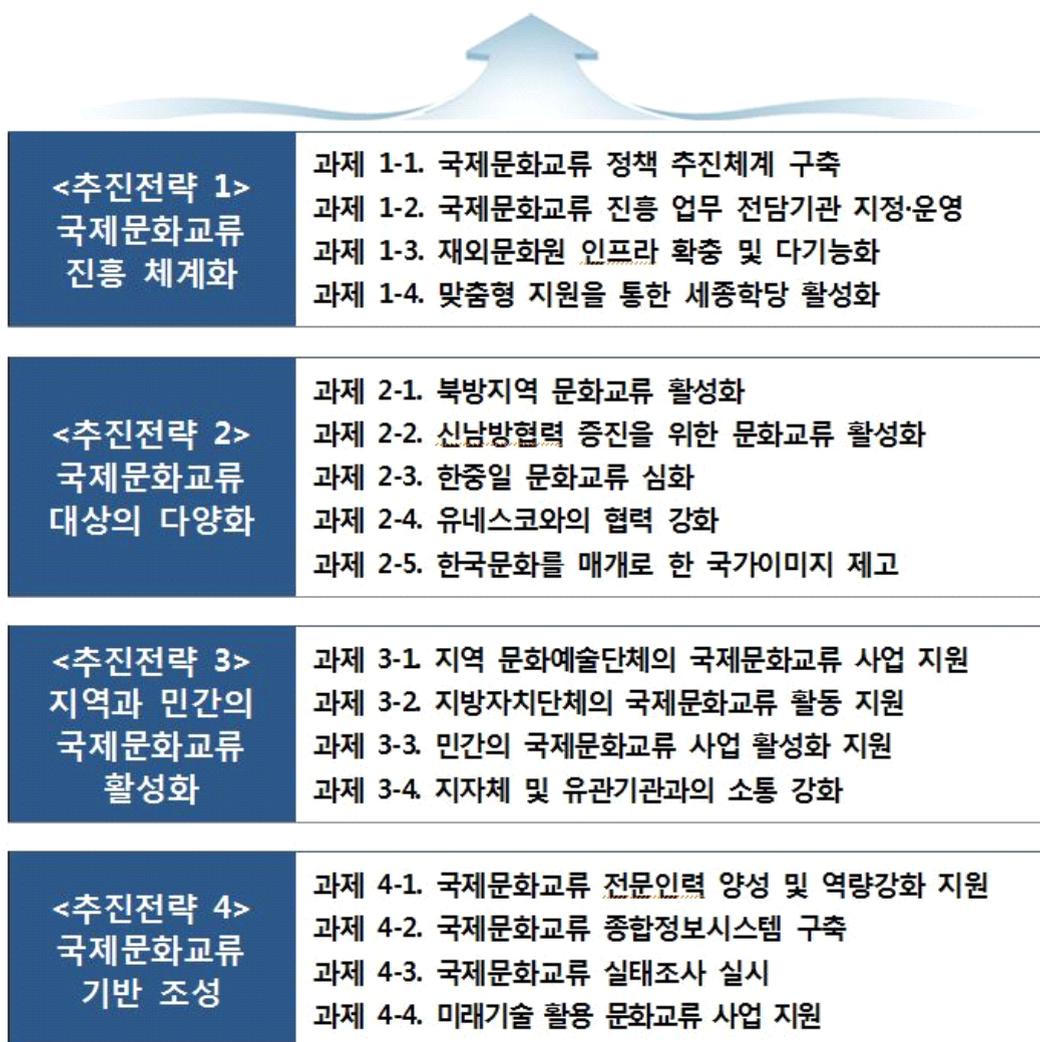
3-2.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1) 2018-2022 국제문화교류 정책 비전 및 목표 및 추진전략

■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미래지향적 방향설정을 위하여 도출된 가치들을 바탕으로 다음 그림과 같은 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함

- 앞서 도출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주요 가치에 의거, 국제문화교류의 향후 정책 방향으로서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라는 비전(안)을 도출함
- 또한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방향성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적 핵심 목표를 ①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②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③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으로 설정함
- 추진전략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으로 설정
 -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전략은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를 추진 과제로 설정
 - 교류대상의 다양화 전략의 추진과제는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한국문화를 매개로한 국가이미지 제고임
 -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안함
 -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의 추진과제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국제문화교류 정보시스템 구축,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으로 설정

비전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정책 목표	세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small>☞ <전략1></small>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small>☞ <전략3></small>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small>☞ <전략2>, <전략4></small>



【그림 3-8】 2018-2022 국제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목표(안)

3-3.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

1)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방향성

- 2017년 9월 22일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5조(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각 지자체들은 이에 따라 지역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화교류 활동이 시대에 적합한 방향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장려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종합계획 포함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

【표 3-4】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포함사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2017.9.22. 시행)에 따른 종합계획 포함사항(제5조)>

-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 목표 및 방향(비전 및 목표 설정)
- ② 국제문화교류 진흥 위한 정책 수립·조정/ 평가/ 제도개선
- ③ 국제문화교류 진흥 자원 조달 방안/ 운용 방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 목적의 사업 및 활동, 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지원(제13조)
- ④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전담기관 지정(제12조)
- ⑤ 지방자치단체의 진흥방안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지역계획 수립·시행
 -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운영(제8조) :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20명 이내
- ⑥ 민간의 진흥방안
- ⑦ 전문인력 양성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등의 활동 지원(제9조)
- ⑧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유통 방안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⑨ 그 밖에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국내외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10조)
 - 포상(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공로한 기관·법인·단체·개인 등)(제14조)

-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은 국제문화교류 정책에 관한 최초의 종합계획인 바, 국제문화교류 정책 영역과 수행체계에 관한 큰 기틀, 협력 루트 등을 기반으로 거시적인 체계 수립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제 1차 진흥 종합계획 수립 후, 이후 2차, 3차 계획을 통해 단계적으로 체계를 보완, 콘텐츠를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

2) 2018-2022 제1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는 각 전략별로 다음과 같음

<p><추진전략 1>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p>	<p>과제 1-1.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과제 1-2.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과제 1-3.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과제 1-4.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p>
<p><추진전략 2>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p>	<p>과제 2-1.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 2-2.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과제 2-3.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과제 2-4.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과제 2-5.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이미지 제고</p>
<p><추진전략 3>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p>	<p>과제 3-1.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과제 3-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과제 3-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과제 3-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p>
<p><추진전략 4>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p>	<p>과제 4-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과제 4-2.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과제 4-3.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과제 4-4.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p>

[그림 3-9] 2018-2022 국제문화교류정책 비전 및 목표(안)

- 한국법제연구원(2016)에서는 공공외교 사업 현황을 크게 ①우리의 공공외교 자산, ②재외공관 주요 공공외교 사업, ③국민참여형 공공외교사업, ④법령정비를 위한 현황 검토로 범주화, 관련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 과제를 도출한 바 있음. 이를 과제 도출에 참고함

주요 공공외교 사업현황 (한국법제연구원, 2016, pp.28-29바탕으로 재구성)	
우리의 공공외교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 달성 → 개도국 성장 모델, 개발경험 전수, 선·후진국 간 교량역할 - 침략의 역사가 없는 평화애호국, 정, 근면한 이미지 → 국가브랜드 - 다양한 콘텐츠와 역동성, 독창성, 보편성, 현대와 전통의 선순환 - 한류에서 촉발하여 현대 및 전통문화를 거쳐 종합적인 한국알기로 진화
재외공관 주요 공공외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포럼, 전시,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지 맞춤형으로 한국의 총체적인 매력을 소개하는 매력한국 알리기 사업 - Quiz on Korea, K-food World Festival, K-pop World Festival, 동영상 콘테스트 등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기능 경연의 장인 코리아 콘테스트 사업 - 수도 이외 지방도시를 순회하며 한국을 알리는 지방순회카라반 - 현지 주요 대학, 도서관, 문화센터 등에 한국의 선진 IT기술이 가미된 복합 한국홍보관 Korea Comer 개설사업 - 현재인으로 구성된 한국문화동호회, 태권도동호회, 한국유학/근무경험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홍보토록 하는 K-Lover(친한 외국인) 기반구축 사업 - 유명 외국인을 한국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하는 공공외교 친선대사 사업 - 외국의 초중고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 서술 확대 사업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공공외교 프로젝트의 직접 기획·시행자로 참여하는 “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 - 국내외 청년의 자발적·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청년 공공외교단” - 시니어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활용한 “시니어 공공외교단” - 젊은 문화예술 인재를 문화적 불모지인 개도국에 문화봉사단으로 파견하여 현지의 문화꿈나무를 발굴하는 “개도국 문화꿈나무” - 국내 대학생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각 공관이 시행하는 현지 공공외교 사업을 지원, 공공외교 참여기회 제공
법령 정비를 위한 현황 검토	<p>○ 공공외교 현안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에 활용 가능한 자산 및 자원의 고갈: 세계 각처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받는 것, 이를 위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인식을 호의적으로 바꾸는 것, 이를 위한 자산 및 자원의 고갈(기준에 지나치게 한류 및 IT기술의 우위에 의존) - 미·중 갈등과 공공외교/ 한·일 갈등과 공공외교: 한국에 대한 불신의 증가 속에서 한류 및 IT기술을 활용해 한국의 ‘이미지’만을 개선하려는 공공외교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공공외교적 발상 및 전략 필요 - 국민참여와 공공외교: 국내 체류 외국인 180만명(불법체류자 포함 2백만명), 이들이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 또한 한국에 대한 인식들은 우리 국민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국민 상대로 중요성 및 이해/지지 기반 넓히는 노력 중요 - 사이버 공공외교

4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 4-1.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범위 및
주체 조정 필요의 그간의 논의
- 4-2.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안)
- 4-3.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 4-4.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 4-5.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4-1.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범위 및 주체 조정 필요의 그간의 논의

-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범위는 개인차원에서는 타 문화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사회와 국가차원에서는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에 관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정책영역으로서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개념 정의는 정정숙(2012)과 김혜인(2015)의 연구를 통해 설정되어 왔으며, 기본적으로 유네스코 세계 다양성 선언에서 제시된 문화개념에 근거, 정책 영역으로서의 개념이 정립됨

【표 4-1】 정책 영역으로서의 국제문화교류 개념

국제문화교류 개념	
광의 (활동에 초점)	• 모든 주체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교류를 하는 활동
협의 (목적 및 성과에 초점을 둔 정책 개념)	• ‘문화부문’의 모든 주체들이 문화콘텐츠를 통해 타 국민과 상호관계를 맺고, 개인 차원에서는 타문화이해와 창조적 자극을 얻고, 국가차원에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등의 발전과 수용으로 문화적 발전을 성취하며, 전 지구적 차원에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과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른 목적과 정의	• (제 1조 목적)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 • (제 2조 정의) 문화, 예술, 관광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문화(예술, 관광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의미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P.61을 바탕으로 재구성

- 그간 공공외교, 문화외교 등 국제문화교류 유사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으나, 2017년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른 국제문화교류의 정책 영역은 ‘국가 간 상호이해 및 협력의 증진을 통한 문화 자체의 발전 추구’라는 문화의 특수성이 반영된 범주에 해당함
- 국제문화교류는 국가 간 상호이해 및 협력을 통한 문화 자체의 발전을 우선적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적·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문화관계가 수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외교, 공공외교 등과 차별성을 지님

【표 4-2】 국제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정책 범위 비교

	국제문화교류	공공외교
주체	• 공공기관 · 민간단체 및 개인	• 정부기관 및 정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
목표	• 문화자체의 발전 및 문화 간 이해와 대화 추구 •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이해관계 추구	• 국가이미지 제고 • 상호이해라는 과도기적 목표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국익 증진
대상	• 한국 및 상대국 일반 국민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	• 상대국 일반 국민
성과지표	• 과정중심	• 결과 중심
사업형식	• 쌍방향성의 교류 중심	• 쌍방향의 교류도 있으나 일방적 홍보 및 선전의 형식도 포함
사업내용	• 문화예술	• 문화예술에 국한되지 않음
국가승인	•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 사이에도 민간 기관들 통해 지속적 교류 가능	•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 양자 협약에 의해 이루어짐.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상대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방적 홍보, 선전도 가능

- 공공외교의 경우 외교전문가가 기획의 주체가 되는 바, 교류 현장에서도 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성 보다는 외교 전문가의 개입에 따른 주체성 훼손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성과도 단발적인 경향이 있음
- 그러나 국제문화교류 활동은 결과 뿐 아니라 실제 교류가 일어나기 전 사전 단계 및 수행 과정, 교류 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문화예술의 자율성 및 전문성에 의존하여 실천되는 행위라 할 수 있음

참고: 민간대상 공공외교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본 ‘공공외교’ 개념 인식

- 외교부는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빅데이터 조사를 통해 공공외교의 실태와 그를 둘러싼 인식에 대한 조사를 진행, 구체적으로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 사업 지원 받아 수행한 민간단체 및 외교부 공공외교 웹사이트에 등록된 커뮤니티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함³⁴⁾
- 공공외교 활동에서 ‘문화교류’란, 문화교류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외교 수행을 위한 매개 혹은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위 사업의 목표 역시 해당 활동을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후속적 영향력’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실태조사 주요 내용 및 결과

1) 설문 내용

기관현황	기관보유자산 / 기관목표(mission) / 커뮤니케이션 채널 / 기관활동 영역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공공외교 인지 / 공공외교 필요성 / 민간기관의 공공외교에 대한 역할 인식
성과(평가 포함)	실천과정 평가 / 기관네트워크 / 공공기관 / 지원평가

2) 설문 결과

- 민간 주도의 공공외교 역할 관련, 민간에서 진행하는 공공외교 활동이 정부기관 주도의 활동보다 '자유도'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음
 - 특히 공공외교의 경우, 원조적 성향이 짙으면서도 외교관계에서 우리의 이득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기보다 자연스럽게 묻어난다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지식·기술 전달 또는 정책홍보 등의 외교 형태보다 선호되는 추세임
 - 이벤트 중심의 국제교류는 단기적, 국제 원조의 경우 지속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단기적 교류활동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임
 - 본 설문외의 경우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 사업 참가 단체에 한정하여 수행된 점, 민간 공공외교 활동의 특징 전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지님. 그러나 공공외교 활동 현황을 일부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행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가늠케 함
- 공공외교 활동의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기존 사업들의 내실화(단발성 사업들의 지속성, 연계성 확보), 재외공관을 플랫폼으로 삼는 등의 조정권 강화 등을 제언
- 사업의 단절성과 이벤트 중심의 국제교류로 그치면서, 네트워크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부의 국제업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현지 외교관 대상 문화외교 인식 제고 및 전문인력 확보,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조정자(coordinator)의 확보, 지원체계(사업 공모 통한 선정절차 통해 추진되는 방식)의 확대, 커뮤니티의 범주 확대(청소년, 대학생)를 적용한 교류사업의 다양화 등이 필요함을 지적

자료: 외교부(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정책영역을 둘러싼 논의들은 초기 '대외 선전 업무' 및 '문화 홍보'라는 시작점을 가졌던 바, 국제문화교류 업무 영역의 혼돈 및 부처 간 논의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지기도 함

34)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사업 대상: 2013년 23개, 2014년 52개, 2015년 47개, 2016년 39개 단체 지원(단체유형: 대학 연구소, 연구회, 포럼, 협회/ 지원사업: 학술세미나, 외교 관련 특강, 친선도모 등)(김영미, 외교부, 2017)

【표 4-3】 국제문화교류 정책기조 변화

제1기 (1948-1960)	1948.07 1948.11 1956.02	외무부 정보국 산하 문화과 대외선전업무 실시 공보처 신설, 서방진영국에 대외홍보활동 실시 공보처 폐지, 공보실 설치
제2기 (1961-1972)	1961년 1968년 1971년	공보부 발족, 외무부 대외선전업무 공보부 이관 문화공보부 신설, 문화예술 관련업무를 문교부에서 이관 문화공보부 산하 해외공보관 신설
제3기 (1973-1989)	1978.04 1979.04	외무부 정보문화국 내 문화과/공보과/문화교류과 설치 문화공보부 내 국제교류과, 해외홍보관 내 문화부 설치 → 문화교류정책 기반조성 및 정착단계(제 5공화국 헌법: 문화발전정책 강조, 대외홍보정책 문화분야 중시)
제4기 (1990-1998)	1990년 1991년 1993년 1998년	문화공보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 외무부 정보문화국, 문화협력국으로 개편 국제문화협회,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고 외무부 소속으로 변경 문화부, 문화체육부로 변경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로 변경
제5기 (1998-1999)	1998년 1999년	공보처 폐지, 업무는 문화체육부로 이관 해외고보관, 해외문화홍보원 명칭 변경 문화관광부, 국정홍보처로 관련업무이관
제6기 (1999-2005)	1999년 2005년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국, 문화외교국으로 개편 문화관광부-한국문화원과 국정홍보처-문화홍보원 통합,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교류 모든 기능 문화관광부로 이전 → 문화관광부는 문화교류 및 한류확산의 핵심부서가 됨
제7기 (2008-2014)	2008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 국정홍보처 폐지, 해외문화홍보원 문체부에 통합 외교통상부 공공외교의 원년의 해로 선포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 문화외교정책과를 공공외교정책과로 문화예술사업과를 문화예술협력과로 변경 외교통상부, 외교부로 명칭 변경
2017년 현재	2017년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자료: 김혜인(2015), 「국제문화교류 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PP.361-362 재구성

-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부처별 주된 책임 영역 들을 설정하되, 협업이 요구되는 영역 안에서는 해당 활동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 가능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4-2.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안)

1)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간,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등과의 전반적 지원 체계 재구축 필요

-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문체부-외교부 간 국제문화교류 정책·사업 관련 조정,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간 매개기능 강화 등 전반적 지원체계 재구축 필요

① 문화체육관광부, 각 시도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의 역할 설정

- 문화체육관광부 : 법·제도 개선 및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5년 주기 종합계획, 연단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사안에 따라 타 부처 및 관련기관(재외공관·문화원, 세종학당 등)과 협력·조정 추진
- 지자체 : 국제문화교류 진흥 관련 조례 제정, 해당지역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구성·운영,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계획 수립·시행’ 등을 통한 자율적 방식으로 해당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추진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재단법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주체들이 개별 미션에 의거한 문화교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 지원 및 매개기능 수행

②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18. 5월~)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위원회 구성·운영(〈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제 3 조(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의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
 -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2.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3. 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
- ⑤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 4 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④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위원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총 15명 이내(당연직 3명 포함)
 - 위촉위원 :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문체부장관이 위촉
 -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
 - 위원장 : 위촉위원 중에서 문체부장관이 지명
 - 당연직 : 문체부 · 교육부 · 외교부 국장급 공무원*
 - * 문체부 문화정책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교육부 국제협력관
- 개최주기 :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요구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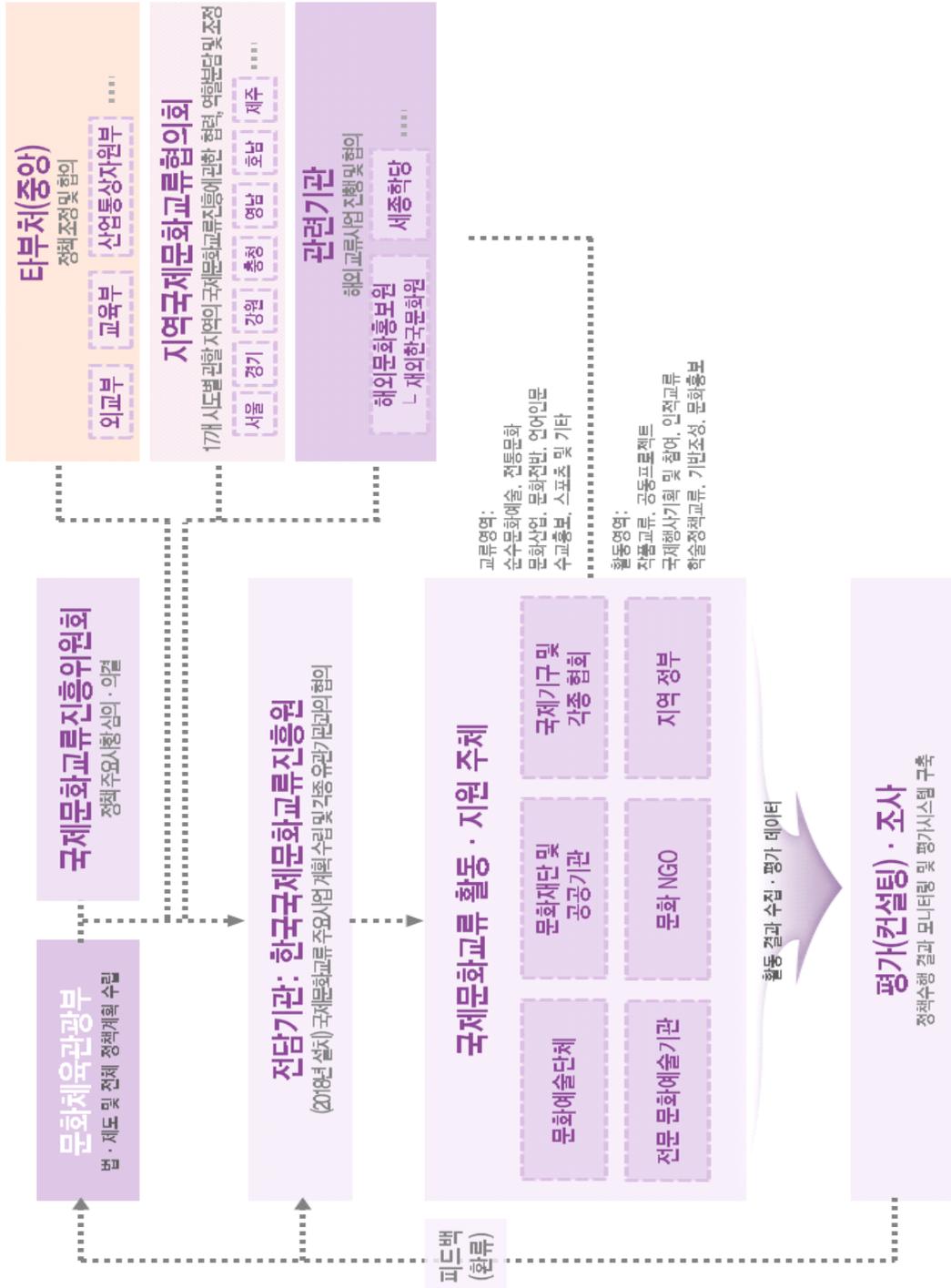
③ 문체부(국제문화교류)-외교부(공공외교) 협력채널 구축

- 국제문화교류정책 및 문화외교정책 국장급 분기별 간담회 정례화
 - 국제문화교류 및 공공외교(문화외교) 분야 현안을 협의 · 조정하고, 재외공관 · 문화원의 문화 교류활동 및 행사계획을 논의하기 분기별 국장급 간담회 개최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보교류 정례화
 - 실질적 협력과 유사 · 중복사업 예방을 위해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공공외교 추진기관)의 사업내용, 지원기관, 유관기관 관련 정보의 주기적 교류를 정례화

2)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행체계도(안)

■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수행체계(안)을 마련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법 ·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를 통해 정책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문화교류 활동 사안에 따라 타부처 및 해외 관련기관(재외한국문화원, 세종학당 등)과 협력함



【그림 4-1】 국제문화교류 정책 수행체계도(안)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를 근거로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각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지원 주체(문화예술단체, 문화재단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및 각종 협회, 전문 문화예술기관, 문화NGO, 지역정부 등)들이 개별 미션에 의거, 자율적인 교류활동 및 진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기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시행(매년) • 국제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협력채널 구성·운영(국장급 간담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보교류) (매년)
2021년 ~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기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지역계획 수립·시행(매년) • 국제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협력채널 구성·운영(국장급 간담회,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간 정보교류) (매년)

4) 참고사례

- 국제문화교류 정책 수행체계 관련, 중앙부처 및 전담기관의 역할 등과 관련하여 ①미국의 신 공공외교 수행체계, ②독일의 문화교류 활동 추진체계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미국의 신 공공외교 수행체계

-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의 경우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성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를 마련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문화교류에 있어 지속성을 추구하는 하나의 사례로서 참고할 수 있음
 - 미국은 국제문화교류 정책 및 공공외교정책이 별도로 분리되어있지 않고 ‘공공외교’ 정책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외국국민 뿐 아니라 자국민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포함, ‘사람 대 사람 간 상호작용’이라는 문화교류에 가까운 방식으로 공

공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임

참고사례 1 : 미국의 신 공공외교 수행체계

- 미국의 공공외교는 ‘자국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형성을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대량의 획일적 메시지 전달을 넘어, 사람 대 사람의 작용을 통한 ‘관계형성 및 교류’의 관점으로 그 접근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³⁵⁾
- 2010년 12월 15일에 외교개발 4개년 보고서(QDDR, Quadrennial Diplomacy and Development Review)발간. 시민과 민간기구들이 미국 외교의 중심축이 되는 신공공외교(New Public Diplomacy)를 주창. 미국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누구와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함

【표 4-4】 미국의 20세기 공공외교와 21세기 공공외교의 패러다임 변화

- 주체: 정부 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주체(NGO, 기업, 일반국민 등의 비정부 행위자)’를 포함 하게 됨
- 대상: 상대국 정부 및 대중 + ‘자국민’도 포함시킴
- 자원 및 자산: 특정 국가가 본래 지닌 자연 환경, 인구, 영토, 역사, 문화 등 물질적·비물질적 유산 모두 포함
- 매체: 정부 간 공식협상 및 대화 → 선전/PR캠페인/구미미디어 → 인터넷, SNS등 디지털매체
- 소통방식: 수평적(정부간) → 수직적, 일방향적, 비대칭적 → 수평적, 쌍방향적, 대칭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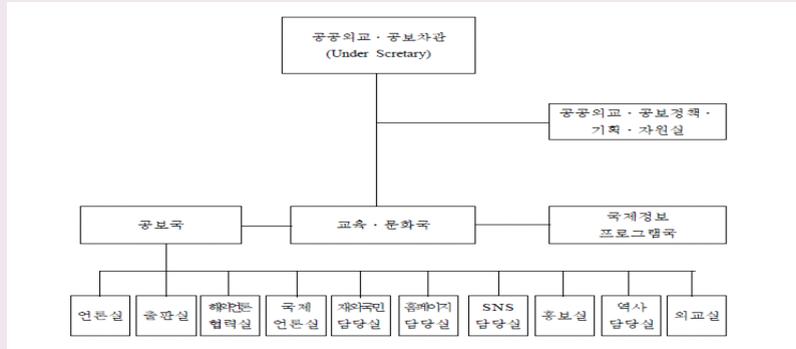
자료: 한국법제연구원(2016) 「공공외교 제도 개선 및 하위 법령 제정방안 연구」, pp.21 바탕으로 재구성

- 미국 공공외교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공공외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자국의 정부와 상대국 국민이 주요요소 작동해야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했다는 데 있음. 오히려 민간 부문 단체나 개인들이 상대국이나 해외의 단체, 개인들과 네트워크 형성 통해 관계 형성하는 데 동참, 혹은 한 국가나 다른 국가들에서 두 개 청중들 간 관계, 외국인들 상호간 관계 속에서 그 들 스스로가 그 관계망 통해 스스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관계형성(relationship)과 네트워크 형성(facilitating networks)을 강조하고 있음
- 미국의 공공외교는 미국 국무성의 공공외교 및 공보담당 차관실에서 총괄,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추진하되, 교류에 있어서는 국가의 직접 접촉보다는 개별 주체의 네트워크 형성을 장려 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미국의 경우 외교에 관한 업무를 연방정부의 관할사항으로 헌법에 규정, 공공외교 또한 연방 정부가 독점적으로 집행함. 주정부에 대하여 협조 구하기보다는 각 주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 기관, 시민단체 등과 직접 접촉하여 협조 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³⁶⁾

35) 미국에서 ‘공공외교’라는 개념은 1960년대부터 학계에서 사용, 냉전체제 하 하드파워 추구 과정에서 상대국가 정책에 영향 미치기 위한 역할을 하였으나, 냉전 종식과 함께 논의 감소함. 이후, 911 테러(2001),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 통신발전, 금융위기 등으로 군사력 및 경제력 기반 종래 외교 형태에 한계점을 감지, 상대국 국민과 소통하는 외교의 중요성 증가함

36) 신진(2016) 「미국 공공외교의 중앙집중성과 국민 참여」, 사회과학연구 p.438

- 미국의 공공외교 업무 추진 방식은 국무성이 정책기획·예산·사업집행의 전 부문을 총괄하는 정부주도 형태를 띠고 있으며, 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과 대화에 기반한 교류를 추구한다는 것이 특징적임



【그림 4-2】 미국 공공외교 담당부서 체계도(한국법제연구원, 2016:37)

- 한편, 기존에는 자국의 외교정책이나 행동, 정치, 경제 시스템에 우호적인 이미지 만들어 해외 전파하고, 상대국 국민들이 이러한 이미지에 설득되어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정책을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했음. 그러나 발달한 통신기술과 시스템 및 인간 이성은 전 세계 청중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있으므로(정부들이 원치 않는 정보들도 함께 파악됨), 기존의 공공외교는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을 인식, “대화베이스 공공외교(dialogue base diplomacy)”를 통해 네트워크 상 참가자 상호간 공개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외교 수행의 효과성을 높여가고 있음³⁷⁾

■ 독일의 문화교류 활동 추진 체계

- 독일의 경우, 문화교류와 관련한 통일된 전략 및 정책 없이 행위주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교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독일의 사례를 통해, 국제문화교류 활동 수행 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기구의 역할 범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참고해볼 수 있음

37) 신진(2016) 「미국 공공외교의 중앙집중성과 국민 참여」, 사회과학연구

참고사례 2 : 독일의 문화교류 활동 추진 체계

- 독일의 문화교류 목표 및 접근방식은 세계 여론에 가능하면 포괄적으로, 그러나 과장되지 않게 독일의 강점을 알리는 것, 이러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그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직접 얻는 것에 있음³⁸⁾
 - 독일 외무부는 공공외교를 위해 통일된 전략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는 새로운 중앙 집권적 기구를 신설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2003년까지 연방정부의 홍보처(Bundespresseamt)에서 담당해오던 외국 주민들과의 소통업무를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방식으로 문화교류 및 공공외교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독일의 공공외교는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 즉 다양한 행위자를 통해 이루어지되 연방정부가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는, 행위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 자연스러운 '지속성'과 '네트워크'형성을 유도함³⁹⁾
 - 독일의 공공외교는 다양한 행위자(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기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연방정부가 이들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님. 연방감사원이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 행위자들은 연방정부의 통제와 지시를 받지 않으며, 각자의 고유한 아젠다를 갖고 각 기관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활동함⁴⁰⁾
 - 이러한 독일 문화외교의 방향성에는 공공권력, 특히 나치에 의한 문화외교 통제를 의식하면서, 이에 대치적인 입장을 갖는 역사적 경험에 근간하는 부분도 있을 것임. 즉 공공외교가 '정치적 선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와 연결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거부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체계가 형성된 점이 있음
- 수용신뢰도 및 지속성의 철학에 기반한 독일의 문화교류 접근 방식으로부터, 국내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한계점(단발적이고 일회적 이벤트에 그쳐지는 사업의 한계 등)에 관한 지점들을 재고해볼 수 있음
 - 다음 그림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및 국내 문화외교 정책 현황에서 지적된 한계점과 관련한 지점들을 재고해볼 수 있음. 특히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쳐지는 사업들이 한계점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해당 사업들이 단순히 이벤트의 형식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해당 사업과 행사가 지향하는 방향성의 근간이 '일방적 정보전달'에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는가 성찰해볼 수 있음

38) 이은정(2014), <디커플링-독일의 공공외교와 문화교류의 원칙 그리고 통일>, 《담론 201》 제17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p.67

39) 오스트로브스키(Ostrowski)는 공공외교가 상대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자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감도를 갖도록 하는데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검증, 상호이해를 위한 대화를 추구할수록 호감도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속성'을 갖게 됨을 밝힘. 즉, 단순히 일방적 정보전달을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오히려 분단시절 독일의 경험이 보여주듯, 냉전체제 하에서도 지속적 교류와 대화를 통한 이해증진이야말로 신뢰도 높이에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됨을 확인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밝힘(이은정, 2010)

40) 이은정(2014), <디커플링-독일의 공공외교와 문화교류의 원칙 그리고 통일>, 《담론 201》 제17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p.69

- 예를 들면,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혹은 타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일종의 정치선전이자 정보전달의 성격을 지닌 콘텐츠물) 세련된 형식을 갖춰 ‘보여주기’는 가능할 것임.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과 시작점이 ‘대화’에 있지 않는 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 또한 수많은 스쳐가는 정보의 하나로서 그것을 수용할 뿐, 그것을 통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열고자 하려는 의지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4-3】 이은정(2010: 66)

- 이에, 지속성을 담보하는 국제문화교류의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 콘텐츠를 통해 어떻게 상대방부터 대화 및 이해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일상적 정치로부터 디커플링 되어있는 문화외교는 독일 외교 대상국 국민들이 독일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호감 및 신뢰를 갖는 데 기여함
- ‘일상적 정치’와 ‘문화적·사회적 교류’를 분리해 접근하는 독일의 공공외교 방식은 신뢰관계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해 왔음
- 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인적·문화적 교류의 사례(독일 고전문학: 종전 직후 이념적 체제적 경계를 넘은 출판사들 간 교류)는 동독인이 서독인에 호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흡수통일이 아닌 ‘가입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여함

자료: 이은정(2014), <디커플링-독일의 공공외교와 문화교류의 원칙 그리고 통일>, 《담론 201》 제17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4-3.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의 체계적 · 전문적 수행하는 한편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 협력기관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 운영 필요(〈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와 관련이 있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8명 이상(업무책임자 1명 이상을 포함한다) 보유할 것
 - 가. 업무책임자(팀장급):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업무책임자 외의 직원(팀원): 국제문화교류,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기관에서 국제문화교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
2.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다음 연도의 집행계획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확대개편(안)

■ 기존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을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전환(정관변경을 통한 명칭 및 목적사업 변경) 후 전담기관으로 지정('18. 2.7.)

-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기능 확대 개편
- 단순한 문화교류 사업이나 행사가 아닌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 업무 및 정책사업 중심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18. 2월~)
- 분산 집행되고 있던 국제문화교류 지원 업무·사업의 일원화
 -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수행하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우수프로그램 권역별 순회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하던 ‘문화동반자 사업’ 등의 사업주체 일원화
 - 단, 정부 보조사업의 단순집행 및 위탁사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지역 및 민간의 교류활동을 진흥하는 활동과 국제문화교류 기반구축 지원 활동에 집중

■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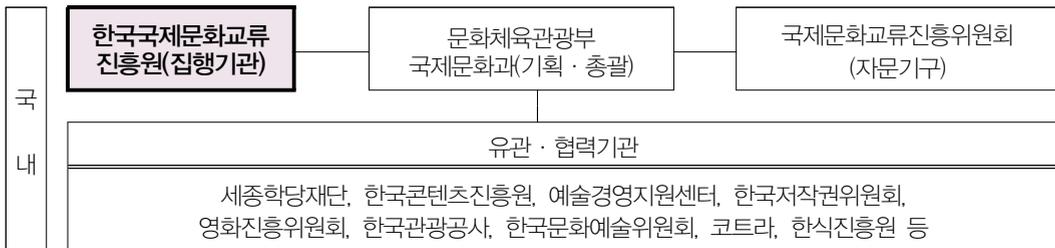
- 맞춤형 국제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지원
- 지자체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체계화된 지원 및 매개 시스템 구축

- 국제문화교류 진흥정책 관련 조사 연구 강화
- 국내외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추진체계 구축으로 정책효과 제고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한 문화교류정책 저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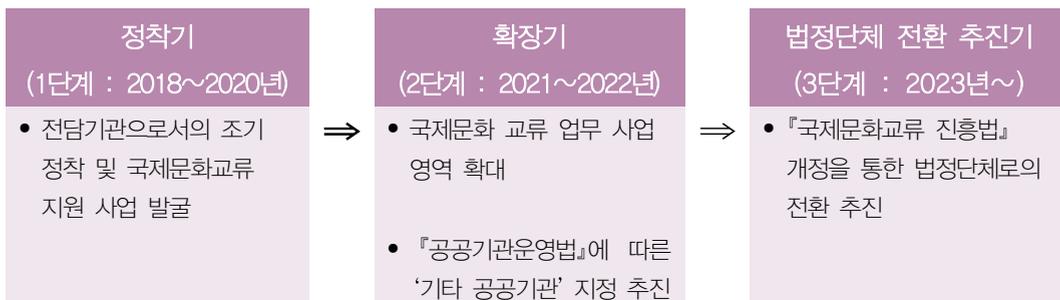
【국제문화교류 지원체계】

해 외	재외문화원 (재외교류 거점)	세종학당 (재외교류 거점)	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센터	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	영화진흥위원회 해외사무소	관광공사 해외지사
	27개국 32개소	54개국 171개소	5개국 6개소	4개국 4개소	2개국 2개소	22개국 32개소

- ① 주재국 현지 정보제공 ⇕ ① 국제문화교류 전략도출 및 조정
 ② 활동상황 공유 및 건의 ⇕ ② 기반조성 및 협업사업 발굴



3) 단계별 추진일정(안)



4-4.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1) 배경 및 필요성

① 인력과 재원의 부족

■ 문화원은 부족한 인력과 직접적인 문화교류사업 수행 역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직접적인 교류사업 수행의 요구를 받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 재외문화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13년 13개소 → '17년 31개소), 경쟁국 문화원에 비해 인력과 자원 부족

◎ 개소 당 예산('17) : 한국 17억원 < 중국 23억원 < 일본 26억원 < 영국 84억원
 ◎ 개소 당 인력('17) : 한국 9명 < 중국 15명 < 영국 20여명 < 일본 90여명

②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의 미흡(지원 방식 측면)

-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 및 관심도가 지역별로 세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부재함
- 우리 문화에 대한 지역별 반응 및 관심도를 분석, 시의성 있는 정보시스템 등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기관별 조사 사업 간 내용상 중복이 존재하며, 일부 예술분야는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가 미흡함

기관명	조사명	조사 대상	문제점
해외문화 홍보원	국가이미지 조사	주요 국가 2개국의 한국의 국가이미지 및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	▶ '국가이미지' 항목에 대한 중복 조사, 일부 예술 분야에 대한 조사 부재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해외한류 실태조사	16개국 해외 한국 대중 문화 경험자의 한국· 한류에 대한 인식 소비 행태	

③ 체계적인 사업 기획의 부재

- 문화원장의 개인 역량에 따라 사업이 기획·집행되어 문화원 간 사업성과의 편차가 크고, 일회적인 문화행사 중심으로 운영됨
- 지역별 문화 수요, 여건 분석 등에 기초한 사업 기획이 부족하며 현지 문화예술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미흡한 실정임

④ 재외문화원 시설 환경(인프라)의 미흡

- 현재 재외 한국문화원은 임차건물(32개소 중 26개소)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임차료 지출(연간 약 110억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장기적 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상설전시 등의 내용 및 전시방식의 진부함, 문화원 간 통일성의 부족 등으로 한국 문화 대표 콘텐츠 소개의 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지점들이 있음

⑤ 유관기관 간 협력시스템의 부재(추진 체계 측면)

- 문체부 각 실·국 및 유관기관들이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사업을 분산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해외 진출과정 시 민간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기능이 부재함

⑥ 주재국 내 문화예술기관의 세분화된 네트워크 부재

- 재외 문화원 주재국 내 문화예술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다 전문화 및 세분화된 문화예술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요구됨

2) 재외문화원 국유화를 통한 시설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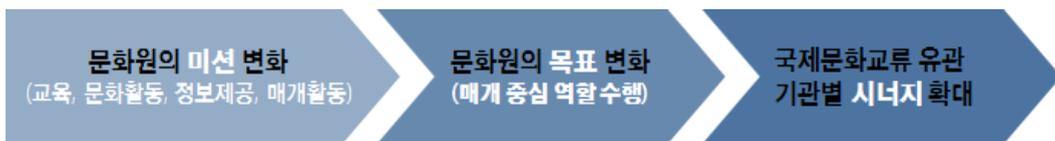
- 2022년까지 임차건물을 사용 중인 문화원 5개소(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오사카)를 단계적 국유화(‘건물매입’ → ‘리모델링 및 이전’의 2개년 사업으로 추진)를 추진함
 - 기준 면적 상향(1,000㎡→2,000㎡) 및 전문 문화시설 수준의 공연장·전시장 조성
 - * 접근성, 상징성, 공간 활용도, 자산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 선정
 - 건물매입 후 한국적 디자인이 반영된 공간으로 리모델링

【표 4-5】 연도별 국유화 계획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입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오사카
리모델링 및 이전	-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카자흐스탄

3) 문화원의 현지 문화교류 매개기능 강화 집중지원(안)

- 문화원의 공통 미션을 설정하고 각 문화원별 환경(문화적 환경, 나라별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그림 4-4】 ‘문화원 공통미션 확립’에 따른 시너지 창출

- 문화원의 현지교류 매개기능 강화 집중지원

- 한국문화원은 ①문화예술전시, 공연 등의 문화교류사업 추진, ②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 소개, ③한국어, 한국역사 및 문화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④한류 및 대중문화 소개 및 체험 확대, ⑤문화예술, 문화산업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 지원, ⑥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통한 한국 관련 정보 제공, ⑦문화관광 관련 정보의 수집과 교류, ⑧각종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등의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① 재외문화원은 매개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

- 공공 및 민간의 각종 문화예술교류 및 한국문화 소개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 해외진출 및 마케팅을 위한 정책 및 비즈니스, 마케팅 관련 지원
- 한국의 문화관광 소개 및 제공
- 주재국 문화예술 및 관광 정보의 수집과 교류
- 한국 문화강좌 등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기능 재편성
- 매개기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주재국과 한국관련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관련 전문 지식, 기관, 단체, 인력 등에 대한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 및 컨설팅 사업 추진

② 현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지원

- ‘현지 유관기관 협의체’구성 및 제도화
 - 한국문화원과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국내 전담기관을 포함하여 ‘현지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 ‘현지 유관기관 협의체’ 소속기관 간 국제문화교류 사업 노하우 및 기 구축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의 협업사업 추진

【표 4-6】 현지 유관기관 협의체 포함 기관 및 운영사업

분야	기관명	관련 사업
문화	해외문화홍보원	한국문화 홍보, 문화예술 교류 등
	세종학당재단	세종학당 지정·운영 등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 동향 조사, 문화교류 등
예술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번역·출판 지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분야 해외 전시 및 교류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시각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 분야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분야 해외진출 지원
관광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활성화, 문화관광대전 개최

③ 권역별 코리아센터를 통한 다기능 서비스 제공

- 문화교류 유관기관 공동 입주 시설인 코리아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이를 거점으로 현지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기반 구축
- 파리, 뉴욕 코리아센터를 건립, 문화원,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 저작권위원회를 공동 입주시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18년 파리 코리아센터 건립 예정, '20년 뉴욕 코리아센터 건립 추진 중

파리 코리아센터(2018년)



뉴욕 코리아센터(2020년)



-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 거점지역 문화원을 코리아센터로 전환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산업의 진출 교두보로 육성
- 재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교육원 등을 공동 입주시켜 해외진출 관련 기능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동일 권역 내 문화원과 협업 및 순회 전시·공연을 개최하여 한국의 다양한 문화 예술을 효과적으로 소개

【표 4-7】 주요 권역별 협력 사업('18년)

사업명	주요 내용	참여기관
재즈코리아 페스티벌	유럽 내 인지도가 부족한 한국의 재즈를 현지인들에게 소개	유럽 8개소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헝가리, 카자흐스탄, 스페인, 터키)
한인 예술가 협력 소개 프로그램	문화원간 한인 예술가 풀(pool)을 조성, 지역 순회공연 추진	유럽 6개소 (헝가리, 스페인,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한식홍보사업	한국 셰프 초청 행사, 갈라 디너쇼 개최, 현지 요리학교에 레시피 보급, 인력양성 지원 등	중남미 3개소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인형극 초청	유소년을 위한 소규모 인형극 단체를 초청, 공연 및 워크숍, 한국 전래동화 소개 등	아프리카·중동 4개소 (UAE,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복 패션쇼	한국 인기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극중 의상을 중심으로 세미나와 한복패션쇼 개최	미주 2개소 (LA, 멕시코)

자료 : 해외문화홍보원(2018), 「우리 문화 해외 진출 추진전략(안)」

4)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코리아센터 건립(2018년) • 뉴욕 코리아센터 건립(2020년) • 해외진출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분기별) • 재외문화원 개소당 운영·사업비 확대('18년 18억원 → '22년 35억원) • 재외문화원 전문인력 비율 확대('18년 12% → '22년 30%)

4-5.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세종학당은 한국어 보급 및 전파 자체에 집중해 왔으나, 한국어를 배우는 시작점에는 ‘한국문화’라는 배경이 있으므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로의 유입 도모 필요
 - * 한국 문화 강좌 및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문화예술 및 한국어 체험 기회의 확대
- 해외 한국어 학습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기본교육과정 이외에 권역별, 세종학당 유형별, 학습자 성향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 필요

2) 추진내용

① 세종학당별 수요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지원

- 지역별, 문화권별 교육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운영비 지원을 통한 고품질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 세종학당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특성화 교육자료 및 교구 개발 지원, 교원 지침서 개발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 해외 한국어교육 연계기관(법무부) 협업체계 구축에 따라 결혼이민자 입국 자격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표 4-8】 사업예시 : 권역별 세종학당 한국어 특성화 프로그램

구분	특성	프로그램	
권역별	동남아	결혼이민자, 고용허가제 대비 한국어 능력시험(EPS-Topik)의 학습 수요 높음	- 결혼이민자 교육과정, 비즈니스반 운영 - 한국문화(생활문화, 기업문화)와 연계한 교육 실시
	아프리카	한류로 인한 한국어 수요 발생 시작 단계	- 흥미 위주의 한국어반 운영 (드라마로 배우는, K-pop으로 배우는 한국어 등)
	북미, 대양주	대학 한국학과 중심으로 학문목적 수요 높음	- 고급 한국어반 운영(시사토론 한국어, 문학 번역반 등)

② 국외 한국어 교원 간 교류 프로그램 운영

- 국외 세종학당 교원, 한국어교육자 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외 한국어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및 교원 교육 강화
- 주요프로그램
 - 국외 : 세종학당,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교사가 참여하는 지역별 워크숍 연 3회 운영
 - * 지역별 교육 현안, 우수교육 사례, 지역 맞춤형 교수법 교육 등을 통한 교원 교육 및 교류의 장 제공
 - 국내 :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국외 한국어 교원 국내 초청 연수)’로 개최, 교원 능력 향상 및 한국어교육자 간 네트워크 구축
 - 온라인 한국어교원 재교육과정 운영 및 온·오프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등 운영

③ 지역별·문화권별 특화된 고품질 문화프로그램 운영

- 세종학당 한국문화과정인 ‘세종문화아카데미’를 대표 문화프로그램으로 육성, K팝 국악 등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한국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고품격 한국문화 해설·체험과정 운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확산의 선순환구조 구축
 - 개별학당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한국문화 전문 인력 및 교육자료 제공

【표 4-9】 주요 프로그램 : 세종문화아카데미 예시

일반 프로그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오리엔테이션 및 도입강의	K-Fashion 한복	K-Language 한글	K-Pop 케이팝	K-Cuisine 한식	수료식 발표회
심화 프로그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한국의 미술) 오리엔테이션 및 도입강의	동굴벽화에서 도시벽화까지	대중적인 그림, 민화	화페 속 그림 여행	예술과 미디어의 만남	수료식 발표회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 강의 수강생 및 문화아카데미 수 확대(56,000명 / 30개)
2019년	• 강의 수강생 및 문화아카데미 수 확대(57,500명 / 40개)
2020년	• 강의 수강생 및 문화아카데미 수 확대(59,000명 / 43개)
2021년	• 강의 수강생 및 문화아카데미 수 확대(60,500명 / 46개)
2022년	• 강의 수강생 및 문화아카데미 수 확대(62,000명 / 50개)

5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 5-1.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류의
세분화 및 다양화 방안
- 5-2.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 5-3.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 5-4.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 5-5. 유네스코(UNESCO)와의 협력 강화
- 5-6. 한국문화를 매개로한 국가이미지 제고

5-1.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교류의 세분화 및 다양화 방안

1) 문화교류 정보제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및 책자 개발의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이 주축이 되어, 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DB뿐 아니라 해당 년도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아카이빙 및 자료서비스 오픈 등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포털 서비스가 개설된다면, 국제문화교류 분야에 새롭게 진입하는 단체, 해외공관 및 문화원, 다른 국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류 인프라의 확장 차원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문화교류 콘텐츠)를 소개하는 책자들이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콘텐츠 개발이 필요해보임

① 국제문화교류 권역별 백서 발간 사업(안)

【표 5-1】 국제문화교류 권역별 백서 발간 사업(안)

구분	세부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어디와, 어떻게, 무엇을 교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무적 차원의 정보 제공 ● 백서를 단계적으로 제작, 공공 및 민간 문화예술 교류단체에 배포하여 교류 기획 및 진행 단계에서의 구체성과 전문성 강화
권역 분류 (수요조사 통한 연차별 집중 권역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 활성화 지역: 서유럽 권역 중 3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 비활성화 지역: 아프리카 권역, 콜롬비아 등 중남미 지역 ● 간헐적 교류지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오세아니아 등 ● 최근 이슈 발생지역: 일본, UAE, 중동 등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책 현황 ● 주요 집행 조직의 특성 및 국제문화교류 사업 추진상의특성 ● 특성화된 사업 제안/ 권역별 수요조사 결과

② 한국 문화교류 통합 가이드북 발간 사업(안)

【표 5-2】 한국 문화교류 통합 가이드북 발간 사업(안)

구분	세부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주축, 문화교류 사업 DB, 해당년도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문화교류 행사에 대한 아카이빙을 바탕으로 소식지 형태의 가이드북을 제작, 국내용(국문)과 국외용(영문)으로 발간 및 배포 기존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문화홍보원 등을 중심으로 한국문화(문화교류 콘텐츠) 소개하는 책자들을 통합/보완
포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화교류 정책 체계 및 관련 단체의 특징, 주요 프로그램 한국 문화예술교류 지원 사업의 특징 및 주요 주한 기관 현황, 프로그램 대표 문화교류 사례 및 과정 소개

■ 교류에 대한 대중 인식 확장으로서의 ‘일상화’

- 아카이브 구축 및 소식지와 같은 장치들은, 국제문화교류의 이슈와 함께 해당 개념에 대한 대중 인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사람들이 폐쇄적인 측면의 문화교류를 넘어서 보다 세계적인 이슈와 연동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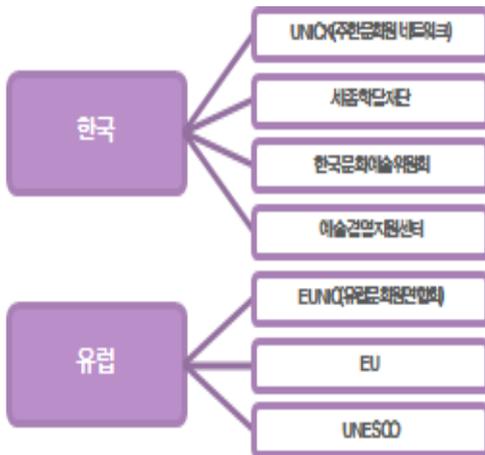
2) 다자협력 채널 진흥 및 교류 공동체의 추진

■ 다자협력 채널 진흥 및 양자/삼자 교류 공동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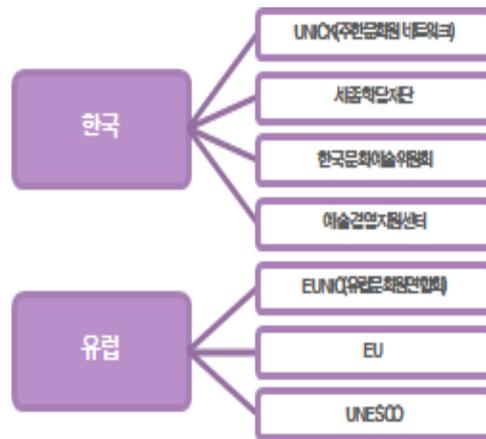
- 교류대상의 집중화 방지를 위하여 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동북아 문화 공동체(안) 및 비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을 확보, 다양한 국가와의 문화협력 채널을 마련하여 교류방식 및 대상의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음



【그림 5-1】 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동북아 문화공동체(안)



【그림 5-2】 비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한-유 문화공동체(안)



【그림 5-3】 비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한-미 문화공동체(안)

- 이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다자간 문화교류 채널 구축 사업(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5-3】 교류대상의 집중화 방지를 위한 다자간 문화교류 채널 구축 사업(안)

구분		세부 내용
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 동북아 문화 공동체(안)	사업 목표	• 다양한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협력을 통해 채널을 마련,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다양한 교류 방안을 모색
	조직 방법	• 기 제안된 〈한중일 문화공동체〉를 확대, 동북아 내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민간 협의체 형식으로 문화 공동체 위원회를 구성 • 문화공동체 운영 사무국을 각 국에 설치하고, 한국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또는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에 별도의 사무국 설치
	운영 방안	• 매년 정기회의 개최, 동북아 문화공동체단 총 위원장을 각국 위원장 중 1인으로 선정 • 동북아 문화공동체를 위한 청사진 개발 및 아젠다 발굴(예시) ① 동북아 문화 공동체 의식과 인식도모 ② 문화유산 보존 및 증진을 위한 공동아젠다 ③ 창조 산업 증진을 위한 공동 아젠다, ④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화적 해결장치 마련
비아시아권 내 다자간 채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유 문화공동체, 한-미 문화공동체 등의 추진을 제안 가능

3) 문화ODA를 통한 공존과 협력 및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진흥

■ 문화 ODA의 경우 그간 문화, 체육, 관광 등 ODA 사업 간 연계조정 기능 및 평가환류 시스템을 총괄하는 기능이 없던 점이 주요 한계점으로 지적되어온 바 있음⁴¹⁾

■ 한국형 문화ODA 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안)

- 문화ODA의 개념 정립 및 중장기전략 마련 통해 한국형 문화ODA 중점협력국가(안) 선정 등 신사업 발굴
- 외교부, 기재부 등 ODA주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향후 제3기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시 문화적 관점 포함 추진

4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2018), ‘2018년 업무계획’, p.5.

■ 문체부 내 ODA 통합관리회의(가칭) 구성 및 운영

- 문체부 내부에 ODA 통합관리회의(가칭)를 구성하여, 문체부 소관 ODA 사업을 총괄 및 평가함
 - 문체부에서 수행 및 관리하고 있는 ODA 사업의 정보를 공유하고, 매년 부처별 무상 원조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 간 연계 및 조정을 통해 ODA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도모함
- 자체적으로 문체부 소관 ODA 사업을 평가하는 가이드라인을 개발 및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 환류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
- 문화관련 국제기구 및 타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문화 ODA 사업의 대내외 파급력을 확대하고, 시너지효과를 제고함
 -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 국제사회에서 대두되는 주요 문화의제의 확산에 기여함
 - 중점 협력국 국가협력전략(CPS)을 고려하여 타부처와의 ODA 협력사업을 발굴 및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5-2.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북방경제협력의 본격 추진과 북방지역 전면 협력 및 교류 강화 흐름

- 「북방경제협력 관계부처 합동로드맵('18.4월)」에 문화, 체육, 관광, 콘텐츠 분야가 모두 연계되어 북방 지역 대상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지속적 교류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기반조성이 요구되는 상황
- 한국과 러시아, 한국과 중앙아시아 권역의 경우 특히 문화 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며 상호지속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발전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에 대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특히 북방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문화교류 분야에 있어서도 북방 지역 중 특히 가장 다양한 콘텐츠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앙아시아 권역은 역사, 문화적 유대감을 통해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있다 평가되는 지역으로 ODA를 활용한 교류를 단계별로 확산하여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방식이 필요한 상황
-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문화교류가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서 교류 대상국의 확장의 필요가 매우 중요한 시점임. 특히 교류 협력의 주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5개국 등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활성화가 필요
 - (러시아) 그간 한-러 수교 20주년(2010년) 기념으로 문화교류 계획서 합의한 바 있으며,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등 문화예술 중심 문화예술 추진된 바 있음
 - (몽골) 한-몽골 수교 25년(2015년)기념으로 영화제, 한식 행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문화교류, 장애인 예술제 등의 교류
 - (중앙아시아) 무형유산 분야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ODA형 교류 약간 및 고려인 관련 행사 등이 진행된 바 있음(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2) 추진내용

① 2020년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최 및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추진(안)

- 한-러 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2020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
 - *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 : 외교 관계 면에서 특별한 계기가 있는 국가와 합의를 통해 상호간 연중 문화교류 행사 개최

【표 5-4】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행사’ 세부내용

구분	러시아 내 한국의 해	한국 내 러시아의 해
기간	2020년 1월 ~ 12월	
주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러시아연방 문화부
실무	주러 한국문화원	주한 러시아문화원
주요 내용	<p>〈 러시아 내 한국의 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폐막식 행사 - 연중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각종 공연·전시 행사 개최(지자체,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 참여) - 양국 문화예술기관 간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 문학, 연극, 공연 등 문화예술 중심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문화재, 박물관, 도서관 사이의 교류협력 강화

러시아는 특히 예술 관련 교류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바, 예술교류 중심의 교류 활성화에 집중하여 문화예술 전문기관 간의 교류협력 강화 지원에 집중

* 문화재청(2012)의 『국외소재 한국문화재 소장기관 거점지정 및 육성방안 연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 박물관이 양국의 공동재정 지원을 통한 전시, 세미나, 컨퍼런스 등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임

- 한-러 양국 국민에게 양국 문화권 페스티벌 사업 지속
 - 한·러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뚜렷한 국가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 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해당 상호문화교류 해 기간 동안 양국 문화권에 대해 소개하는 각종 페스티벌 사업을 지속하도록 함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2016)의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상대국에 대해 “잘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한국인 55%, 러시아인 68%로 나타났으며, 한-러 양국 간 협력의 장애요인은 국제정치적 문제, 부정적 선입견, 상대국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조사됨

■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 단발성 수교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양국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임.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수교행사 이외에도 상호 문화 및 타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지원이 필요
- 또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 및 양국 공동의 예산지원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한-불 상호교류의 해’ 당시 프랑스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인 앙스티튀 프랑세(IF·프랑스문화원)를 통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진행함. 반면 한국의 경우, 프랑스 장식미술전 관련 예술가 선정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됨. 게다가 한국 정부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반면, 프랑스 정부는 예산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음
- 따라서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업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한-러 양국이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2020~2021년 이후 양국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방안 구축이 필수적임
- ‘한-불 상호교류의 해’ 경우 한국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으로 ‘프랑스 내 한국의 해’ 당시에는 단발성 문화교류행사의 개최 수는 높았음. ‘프랑스 내 한국의 해’(2015년 9월~2016년 8월) 당시 프랑스 60여개 도시, 120여개 문화예술기관에서 200여건이 넘는 행사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한-불 상호교류의 해’ 이후 문화교류 행사의 수가 급감하여, 오히려 문화교류의 양적 감소를 초래함

② 북방지역 문화 ODA 협력 강화(안)

- 북방지역 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문화동반자사업(ODA)* 참여확대
 - * 문화동반자사업(ODA) : 개발도상국 문화 분야 전문가 초청연수('05년~)
 - 북방지역 ODA 수원국 대상 문화정책, 무형유산, 문화산업, 예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 도모
- 북방 ODA 수원국 대상 문화 분야 현지 교육훈련 및 워크숍 추진
 - 북방지역 ODA 수원국 대상 국내 전문가를 파견, 교육훈련 및 워크숍 등을 통한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 공유

- 북방 지역 문화부 대상 수요조사 추진* 및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
 - * 18년 수요조사 결과 : 몽골(국립도서관 고문서 복원 및 보존기술 향상, 도서관 데이터 디지털화 및 체계화 관련 분야)
- 유네스코 신탁기금(ODA)* 지원사업 협력 추진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위원국인 우리나라는 대(對)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으로 개도국의 문화 및 창의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신탁기금을 2007년부터 격년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대상권역에 북방 지역 국가의 확장 포함을 추진
 - 2013년, 2015년 기 지원된 경험이 있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은 기존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에 지속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향후('19~'22년) 북방지역 대상 신규사업 추가 지원을 검토

【표 5-5】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연도	사업명	예산
2007	문화원형 디지털화(몽골), 전통공예산업 발전(베트남)	3억원
2009	공예발전(카자흐스탄), 전통수공예 보존발전(우즈베키스탄)	3억원
2011	공예산업 진흥(몽골, 베트남), 문화창의산업 기초체계연구 및 구축(라오스), 음악산업 진흥(아프리카 브르키나파소)	5억원
2013	문화창의산업 진흥정책 및 전략개발(몽골, 베트남), 공예문화산업 발전지원(우간다)	5억원
2015	문화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사업개발(우즈베키스탄, 라오스, 르완다)	4.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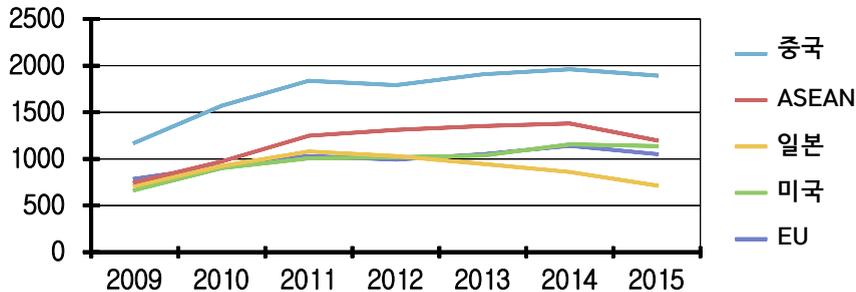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 상호문화교류의 해 개최 • 북방지역 재외공관을 통한 문화동반자사업 홍보 확대(매년) • 북방지역 대상 문화동반자 현지동창회 설립 추진 • 북방 지역 문화부 대상 '문화기반강화 교육훈련·워크숍' 수요조사(매년) 및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19년 이후) • 기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지속 추진(몽골, 우즈베키스탄), '19-'20년 신탁기금 사업지역 선정 시 북방지역 수원국 우선 검토
2021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지속 추진 • 북방 지역 문화동반자를 매개로 국내 연수기관 및 현지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을 통한 장기프로젝트 발굴·지원 • 북방지역 문화기반강화 현지교육훈련·워크숍 대상국 확대 • 21-22년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지역 선정 시 북방 지역 수원국 우선 검토

5-3.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1) 배경 및 필요성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분대화상대국’ 수립 이래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아세안은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이고, 제2위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이나 일본 대비 한국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여 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교류 대상임



【그림 5-4】 우리나라 주요 교역상대국

-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對)아세안 양자관계에서 경제적 실리추구 등에만 집중하면서 동반자 관계로서의 관계 재정립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고, 이는 지속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 문화교류에 있어 특히 아세안 지역은 한류 중점 국가로서 일방적 문화전파가 아닌 양국 간의 문화교류 활성화로 교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

2) 추진내용

① 아세안 국가 대상 필코리아[Feel Korea] 행사 개최(안)

- K-Pop 뮤지션과 현지 뮤지션의 합동공연을 통한 Feel Korea 콘서트 개최
 - 주최: 해당국 공관(한국문화원)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내용: 콘서트, 한국문화교실, 현지 사회공헌 활동, 체험행사 및 컨벤션 부스 운영 (현지진출 기관 및 기업과 협업)
 -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필코리아 사업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장



▲ 필코리아 콘서트



▲ 한복체험관



▲ 전통공예 체험관



▲ 나누고 소통하는 착한한류 사회공헌활동

【그림 5-5】 필코리아 인 런던 사례, 2017

② 아세안 3개국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안)

- 10년 단위 수교기념 해를 맞이하는 아세안 3개국*과의 합의를 통하여 상호문화 교류의 해 추진

*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표 5-6】 '19~'22년까지 아세안 국가 중 수교기념 대상국가

연도	2019년	2020년	2022년
국가	필리핀(수교 70주년) * 1949. 3.3. 수교	말레이시아(수교 60주년) * 1960. 2.23. 수교	베트남(수교 30주년) * 1992. 12.22. 수교

- 연중 양국 수도 및 주요 도시에서 문화교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하며, 상호문화 교류의 해 이후의 사후교류 지속을 위한 사업지원 지속

③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확대(안)

-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문화예술교육 ODA사업*을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대상으로 확대(1개국→2개국)

* ('13~'17) 베트남 라오까이성 현지 (예비)교사, 초중고생, 지역주민(연평균 1,500여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매개자 교수법 교육 등 실행
('18~)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실시

- 사업 종료 후 현지 접목형 문화예술교육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협력망 구축 등 우호 관계 증진

* <문화예술교육자를 위한 교육 매뉴얼> 제작 및 온-오프라인 배포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베트남 라오까이성 문화예술교육 ODA 사업]

- 국내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베트남 라오까이성에 파견하여 초, 중등학교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예비교사 및 지역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교육도 실시
- 라오까이성의 지리적(산악지역), 인구통계적(소수민족 중심)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는 소외지역 학생 및 주민들에게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문화 관람이 아닌 자발적, 지속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민족의 통합 및 공동체 형성 도모

사업 분야	교육	기초교육, 매개자 역량강화
	문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간	2013-2017	
사업 예산	연간 1억원(총 5억원)	
사업 활동	국내 문화예술교육 강사 파견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실시	
	라오까이 사범대 교수 및 예비교사 지역교사 매개자교육 실시	
	중학생 대상 사진 동아리 지원 및 교육	
	현지 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사업 수혜자	박하현 및 사파현 초, 중등학생 151명(2015년 기준)	
	라오까이 사범대 교수 및 예비교사 111명(2015년 기준)	
시행 기관	한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베트남	베트남 라오까이성 인민위원회, 베트남 라오까이성 교육국

자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2016 문화예술교육 ODA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④ 아세아 지역문화 문화ODA 참여 확대(안)

- 아세안 문화 분야 전문가들의 문화동반자사업(ODA) 참여확대
 - 아세안 내 ODA 수원국 대상 문화정책, 무형유산, 문화산업, 예술 관련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 도모
 - 아세안 대상 문화동반자 현지동창회* 설립확대 및 문화동반자 기반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 간 지속가능한 장기 교류사업 발굴 지원
 - * 문화동반자 현지동창회 설립현황 : ('15~'16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17년) 태국
- 아세안 ODA 수원국 대상 문화 분야 현지 교육훈련 및 워크숍 추진
 - 아세안 ODA 수원국 대상 국내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 문화산업 역량강화 교육훈련 및 워크숍을 통한 한국의 문화발전 경험 공유
 - 아세안 국가 문화부 대상 수요조사 추진* 및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
 - * '18년 수요조사결과 : 베트남(영화, 문화기술, 저작권, 대중문화, 미디어, 전통예술 진흥 등), 필리핀(TV 드라마 및 영화 작가·PD 대상 콘텐츠 개발 등)

- 유네스코 신탁기금(ODA) 지원사업 협력 추진
 - 아세안 대상 기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지속추진 및 향후 아세안 지역 신규사업 추가지원 검토
 - * 베트남 최초 창의산업 국가전략 실행을 위한 역량강화사업, 라오스 문화창의산업 분야 정부-민간-시민사회 거버넌스 조성 지원사업, 방글라데시 시각예술 발전 지원사업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코리아 개최 및 상호문화교류의 해('19년 필리핀, '20년말레이시아) 추진 • 아세안지역 재외공관을 통한 문화동반자사업 홍보 확대(매년) • 기존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 지속(베트남, 라오스, 방글라데시) 및 '19-'20년 신탁기금 사업지역 선정 시 아세안 우선 검토 • 기존 문화예술교육 ODA 확대 실시(베트남, 인도네시아), 문화예술교육ODA 신규 수원국 발굴 및 지원 • 아세안 문화부 대상 '문화산업 역량강화 교육훈련·워크숍' 수요조사(매년) 및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19년 이후)
2021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코리아 개최 및 상호문화교류의 해('22년 베트남) 추진 • 아세안지역 대상 문화동반자 현지동창회 설립 확대 • 아세안 지역 문화동반자를 매개로 국내 연수기관 및 현지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을 통한 장기프로젝트 발굴·지원 • '21-'22년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지역 선정 시 아세안 지역 수원국 우선 검토 • 문화예술교육 ODA 현지 접목형 신규 모델 개발·지원 • 아세안 문화산업 역량강화 현지 교육훈련·워크숍 대상국 확대

5-4.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1) 배경 및 필요성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강화

- 2007년 제1차 회의가 시작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2018년 10차 회의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심화된 문화교류 및 협력 기틀 마련이 필요한 시점
 - 그간 문화다양성 원칙을 존중하며, 청소년 문화교류 협력 강화, 문화산업 분야 및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 협력 강화, 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하이 액션플랜 채택, 동아시아문화도시 및 아세안 문화도시의 협력 강화, 3국간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상생발전 계획 등 많은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음
 - 하지만 3국의 공통의 문화브랜드 사업의 발굴,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지속적 문화교류의 틀 마련, 한중일 수시교류의 방안 마련 등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한중일 3국의 정치·외교적 관계에 따라 문화장관회의가 파행되는 등의 아쉬움이 있음
- 2018년 제10차 한중일문화장관회의를 기점으로 한중일 공통의 브랜드 사업 발굴, 한중일의 상시 문화교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할 필요
- 한-중, 한-일 간 갈등원인*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일 3국간 문화교류 협력 심화 필요
 - * 사드(THAAD) 배치에 따른 한한령(限韓令) 문제, 일본군 위안부·독도 영유권 문제 등

2) 추진내용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한 문화 협력 강화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의제 적극 발굴을 통한 내실화 추진
 - 제10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개최('18. 8월, 중국 하얼빈)
- 한중일 예술제, 한중일 문화예술교육포럼 등 한중일 문화부 간 협력사업 심화 발전

- 한중일 국립박물관장회의 및 공동기획전 형태의 협력 사업을 국립미술관, 국립도서관, 국립극장 등 국립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협력으로 확대

■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강화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지역 문화자원 중심 교류내용 다양화, 교류주체 다각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후 교류사업 지속성 확보, 동아시아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체화 등 해당 의제들에 대한 협의 및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심화·발전 추진
- 동아시아문화도시 한중일 사무국 설치 추진('19년~)
 - 한중일 3국 문화부 내 국장급 사무국 설치, 공동로고 제작, 아카이브 구축 등 동아시아문화도시 협력 강화
-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도시('18. 부산, '19. 인천) 지원 강화
 - 당해 연도 6억원 → 3년간 11.5억원('18년~)
-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아세안 문화도시(ASEAN Cities of Culture)와의 교류협력 추진

【표 5-7】 연도별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한국	광주	청주	제주	대구	부산
일본	요코하마	나가타	나라	교토	가나자와
중국	취안저우	칭다오	닝보	창사	하얼빈

■ 한중일 3국간 문화교류 및 협력 강화

- 한중일 예술제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의 계기로 한중일 3국의 문화 공연을 통하여 교류와 협력을 강화
- 한일축제 한마당을 통한 한일 상호문화교류 지속추진
 - '09년 한일외교장관회의의 합의로 동경과 서울에서 매년 문화행사 개최
- ‘한중 축제한마당’ 행사 개최 추진

- 한중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북경에서 교차 개최하는 ‘한중축제 한마당’ 행사 개최(19년~)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한-중 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기반 구축 필요
 - 양국 간 연례 교류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한중 문화부 간 상시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양국 국민 간 문화를 통한 소통 및 화합 도모
- * 한일축제한마당 : '05년 한일수교 40주년을 계기로 일본 측에서 행사 시작, '09년부터 한일 양국 서울, 동경에서 동시 개최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 및 3국 문화도시 간의 연중 문화 교류 추진(매년)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심화·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 • 한일 축제한마당, 한중일 예술제 개최(매년) • 한중 축제한마당 개최 협의 및 준비
2020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문화도시 지정 및 3국 문화도시 간의 연중 문화 교류 추진(매년) •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심화·발전을 위한 지원 지속 • 한일 축제한마당, 한중일 예술제 개최(매년) • 한중 축제한마당 개최

5-5. 유네스코(UNESCO)와의 협력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세계유산·무형유산의 보호 및 등재 등 국제사회 주요 문화 관련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필요
 -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문학, 영화, 음악, 공예와 민속예술, 디자인, 미디어아트, 음식 등 7개의 분야의 창의도시를 선정하여 회원도시 간 경험, 지식, 자원의 공유 등을 통해 각 도시의 문화산업 증진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04년~)
 - 한국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현황 (분야 및 가입연도) : 서울(디자인, '10년), 이천(공예 및 민속예술, '10년), 전주(음식, '12년), 광주(미디어아트, '14년), 부산(영화, '14년), 통영(음악, '15년), 부천(문학, '17년), 대구(음악, '17년)
- 특히 우리나라는 유네스코가 제정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국내 비준·발효(2010.7월)되었으며, 한국은 동 협약 관련 2017-2021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17.6월)되면서 그간의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

2) 추진내용

■ 유네스코 신탁기금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사업 협력 추진
 - 무형문화유산보호와 문화 및 창의산업 발전을 통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대(對)유네스코 신탁기금을 2007년부터 격년 지원(매 지원마다 시행약정서 신규 체결, 현재까지 약 26억 원 지원)
- 개발도상국*의 정책환경 및 수요를 고려한 문화산업 분야(예: 영화산업)를 선정하여 각종 기술적·정책적 역량강화 사업 실시
 - * 새로운 대외정책(신남방협력, 북방경제협력 등)을 고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사업대상국 협의 추진

■ 유네스코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에 문화담당관 파견 추진('19년~)
 - 문화 관련 업무 중요성 및 중국·일본 등의 문화담당관 파견 상황* 등을 고려, 주 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에 문화담당관 파견 추진
 - * 중국과 일본 유네스코 대표부에는 각각 중국 문화부 공무원, 일본 문화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문화 관련 업무를 수행중임
 - 문화담당관 파견 시 문화 관련 국제이슈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및 유네스코 합의사항에 대한 체계적 이행 가능
 - ※ 문화담당관 파견을 위해서는 외교부, 인사처 등 관련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이하 '유네스코 한위') 협력 강화
 - 유네스코 한위 협력 사업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을 확장하여 매 워크숍의 창의도시 분야를 선정하고, 음악·문학 등 분야별 국내외 창의도시 간 국제교류의 장 마련
 - 유네스코 한위 협력을 통해 '2005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전문가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추진('18. 6월)
 - 유네스코 한위 총회 및 집행위원회 부위원장(당연직), 문화·정보커뮤니케이션 분과 위원(당연직)으로서 각종 협의 참여 지속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이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협력 강화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당연직 이사로서, 운영위 및 이사회 참여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협력하여, 문화예술과 국제이해교육사업의 접목을 통한 문화와 교육 분야의 시너지 효과 제고*
 - * 예시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국제이해교육 사진교실」사업 지원 등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아태지역 전문가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18년)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지원(매년) • '19-'20년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격년) • 주유네스코대표부 문화담당관 직위 설치 협의('19년이후)
2021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워크숍 지원(매년) • '21-'22년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격년) •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신규 협력사업 발굴·추진

5-6. 한국문화를 매개로한 국가이미지 제고

1)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간 상호문화 이해 및 우호를 증진하고 해외 소비자들에게 우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우리문화·예술 콘텐츠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과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강화

2) 추진내용

■ 수교기념 문화행사의 효율적 개최

※ 문체부와 외교부 간 수교기념 문화행사 국가 분장방식 및 분장기준

- 분장방식 : 12년부터 외교부-문체부 간 협의를 통해 차년도 수교국 가운데 수교기념 문화행사 대상국 업무분장
- 분장기준
 - (문체부) ① 문화원문화홍보관 주재·인근 지역, ② 전략적 거점 지역 대상
 - (외교부) 문체부 선정 지역 이외 지역 대상

※ 2018-2019년 수교 문화행사 대상국가 분장 현황

연도	부처	해당국가
2018	외교부(6)	도미니카연방, 가이아나, 솔로몬제도, 투발루, 상투메프린시페, 카보베르데
	문체부(3)	태국,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2019	외교부(10)	노르웨이, 스웨덴, 세르비아, 나우루(피지), 세인트루시아(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이라크, 코모로(케냐), 적도기니(가봉)
	문체부(6)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필리핀, 브라질, 쿠웨이트

- 수교기념 문화행사 사전기획 및 효율적 운영
 - 수교국가와 협연 또는 공동전시 등을 위해서는 행사 프로그램을 최소 1년 전부터 사전 기획해야 하는바 수교행사 전년도부터 행사계획 수립

- 주요국의 경우 ‘상호 문화교류의 해’ 형태로 연중 문화교류 사업 추진
- 수교기념 대상국 인근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교기념 공연단이 인근 국가 순회 공연을 시행함으로써 수교기념 행사예산의 효율 향상
 - * 예시 : 2019년 한-덴마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사업
- 합동공연, 공동전시 등 수교기념 대상국 현지 문화예술인들과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양국 간 수교의 의미 확산

■ 한국문화 해외홍보 사업 추진

- 순방 계기 문화행사
 - 언론 등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상외교 계기, 우리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활용
- 주요 계기별 행사 개최 및 지원
 - 재외문화원 개원기념, 월드컵·올림픽 등 메가이벤트 등을 계기로 다양한 한국의 우수문화 콘텐츠를 소개
 - * △'18년 : 러시아 월드컵 계기 클래식 공연, 오사카 개원 20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 파리관광문화센터 개원 기념 전시 및 전통 공연, △'19년 : 뉴욕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행사, 일본(주일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한-일 무형문화재 교류 전시 및 공연, △ '20년 : 독일, 워싱턴, 폴란드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 등
- 한국문화 바로알리기 문화홍보관(9개소*) 우리 문화 소개
 - 문화홍보관(9개소)이 해외에서 우리 문화 소개
 - * 미국(뉴욕, 워싱턴), 영국, 중국(북경), 일본(동경), 홍콩, 싱가포르, 스웨덴, 이란, 남아공
 - * △'18년도 :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 한국문화 축제(8월), △(싱가포르) Korea Festival 2018(8~10월) △(남아공) K-POP Night 행사(케이팝의 밤)(6~9월), △(이란) Korea Culture 2018(10월), 제6회 Korea Film Festival(11월) 등
- 주한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소개 해외주요인사 초청(한국문학, 현대미술)
 -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매개로 상호 소통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
 - SNS 파급력을 활용하여 주한 외국인 대상 사전·사후 홍보를 강화
 - * 주한 유학생 대상 <청춘 인문 논(論)장판>, 주한외국인 대상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등

- 해외 문화예술계 주요인사 초청(한국문학, 현대미술)(매년 약 20명)
 - 한국문학 및 현대미술 분야 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한 한국문학, 현대미술 해외진출 기회 마련 및 국가이미지 제고
 - 문학, 현대 미술 분야의 주요 인사를 국내 초청하여, 국내 인사와 문학 쇼케이스 및 현대미술 발표회 추진
 - 매년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들을 국내로 초청, 한국의 문화예술 현장체험 및 국내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의 기회 제공
- * '17년 초청자 : 런던박물관장,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음악원장 등 20명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기념 행사 브랜드 구축 및 중기계획 수립 •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추진(태국/보츠와나/스위질랜드) • 〈한-영 상호교류의 해〉 계기 문화교류행사 추진 • 파리문화원 개원 기념행사 • 러시아 월드컵 계기 합동공연 • 파리관광문화센터 개원 기념 문화행사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추진(필리핀/브라질/덴마크/폴란드/헝가리/쿠웨이트) • 뉴욕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 벨기에문화원 개원 5주년 기념 문화행사
20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문화원 개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 • 나이지리아 · 독일 · 워싱턴 · 폴란드 · 카자흐스탄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문화행사

6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 6-1.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 6-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행 지원
- 6-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 6-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6-1.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문화교류 단체들은 지역 고유의 우수한 문화교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교류 기회를 얻기 어려운 실정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증진

2) 추진내용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안)

- 사업방식: 지역의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를 공모방식으로 선정
 - * 전국 기초 지자체(광역 지자체 내 기초지자체 제외) 대상 공모를 통해 매년 4~6개 지역 문화교류 단체 선정·지원 예정
- 공모대상 사업: ①지자체와 해외자매·우호도시 간 문화교류 사업, ②지자체의 수교계기 문화교류 사업, ③지역 문화기관·단체·문화예술인 문화교류 사업
- 지원·활용: △ 선정된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는 교류사업 예산 일부 지원*, △ 수교계기 부대·연계행사 등으로 활용
 - * 항공료·체재비(일비, 숙박비, 식비)·현지대관료에 한해 한도를 정해 지원, 나머지 필요경비는 해당 기초 지자체 부담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22년	·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공모(매년)

6-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소규모 국가·도시에 대한 관심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권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류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국가나 개발도상국 등의 뉴스와 문화에 더 많은 관심과 눈을 돌려 작은 지역-나라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외교적 교류가 아니기 때문에, 교류의 주체인 사람이 서로 오가며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단 등을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업무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미흡 문제, 교류 대상 및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①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 계획 컨설팅 사업, ②지역 문화교류 단체의 글로벌 사업 집중 지원, ③실무자(행정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을 제안할 수 있음

2) 추진내용

①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 계획⁴²⁾ 컨설팅 지원

- 국제문화교류 지역 계획 평가 및 컨설팅 사업과 문화 교류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사업으로 지원

42)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지역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이를 위해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의 및 운영(위원장 1명 포함, 위원 20명 이내) 가능

【표 6-1】 국제문화교류 진흥 지역 계획 컨설팅 지원(안)

구분	사업 목표 및 지원 내용
국제문화교류 지역 계획 평가 및 컨설팅 사업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지역 고유의 문화콘텐츠, 인력자원을 활용, 차별화된 국제문화교류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지원내용: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사업 개발을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 및 광역 중심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문체부에서 컨설팅단을 파견 컨설팅단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지역 종합계획의 평가(국제문화교류 사업목표의 적절성, 정책 방향성에의 부합도 여부) 등에 관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검토 및 자문을 지원,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질적 제고 도모
문화 교류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 사업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내용: 문화교류 매개인력(전문 코디네이터 등)의 파견을 통해 지역에서 자체 투입이 불가능한 인력을, 초기 기획/ 개발 단계에서의 지원(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 사업 목표: 지역 및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문화교류 전문성의 결여, 행사 및 축제 등 이벤트의 일회성 등을 보완,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의 내실 제고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② 지역 문화교류 단체의 글로벌 사업 집중 지원

- 지역의 문화교류 인적 자원 강화 및 확보는 지역 중심 문화교류 지속성의 전제 조건이기도 한 바, 지역 문화교류 단체의 글로벌 문화교류 지원 사업과 해당 매개인력 및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사업을 함께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표 6-2】 지역 문화교류 단체의 글로벌 사업 집중 지원 방안(안)

구분	사업 목표 및 지원 내용
글로벌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 지원(안) (문화유산 및 문화산업 · 문화예술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지자체 문화재단 및 민간단체들의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지역 전통 문화유산 및 문화재 등) 장려, 지역 대표 문화 교류 콘텐츠로 성공할 가능성 높은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 지원내용: 지역의 역사 및 문화, 생활문화 등을 바탕으로 문화교류 프로젝트 콘텐츠를 개발한 경우, 지역의 고유 문화예술 분야를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해외 단체 및 정부 등과 협력한 교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경우, 프로젝트 연구비 지원, 행정예 필요한 기금 지원, 컨설팅 지원
글로벌 매개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사업(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문화교류 콘텐츠 개발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각종 매개 및 기획 인력 중 지역에서 자체 투입이 불가능한 인력을 컨설팅 초기 단계에 지원 지역의 문화 교류 매개인력 투입이 가능한 인력의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획비 및 예술가비, 인력 연수 등을 함께 지원

③ 실무자(행정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안)

【표 6-3】 실무자(행정 담당자)의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재교육 등의 지원(안)

구분	내용
국제문화교류 이해 및 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연수 프로그램 지원 및 보급형 콘텐츠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순환보직으로 담당자가 자주 변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교류에 대한 이해 미흡으로 인한 시행착오 등을 보완, 정책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보완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자를 위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 및 보급형(동영상, 인포그래픽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 콘텐츠 제작을 통해 담당자 재교육 지원

④ 국제문화교류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지원

- 지자체가 운영 중인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한계점으로 담당인력의 전문성 결여, 획일화된 일회성 문화행사 또는 축제 개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육성된 문화교류 매개인력을 이들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파견하여 문화교류 사업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현황 및 수요 조사 • 국제문화교류 전문 컨설팅단 구성 • 지역특화 국제문화교류 성과지표 및 가이드 개발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대상 컨설팅 수요 조사 및 컨설팅 사업 추진 • 국제문화교류 전문 코디네이터 파견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컨설팅 센터 구축 및 컨설팅 파견 확대 • 컨설팅 기반 우수 국제문화교류 추진계획 사례집 발간

6-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는 다양한 주체(특히, 민간주체)가 다양한 방법과 내용을 통해 이루어질수록 더욱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민간주체에 의한 교류를 대상으로 집중된 교류활동 지원이 부족한 상황
- 특히 예술교류 이외에 문화일반, 정책교류, 인적교류, 연구교류 등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2) 추진내용

- 민간 주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①국제문화교류 정보 및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②민간 국제교류대사 양성 및 파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① 국제문화교류 정보 및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안)

- 민간 및 관련 기관들이 기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들을 한 데 모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플랫폼 구축이 요구되어옴
- 민간교류단체들 차원에서는 다양한 자원, 지원 통로 구축의 아이디어 확보 가능, 기업차원에서는 해외 투자계획 및 사업유치 등 기업 고유목적에 따른 문화교류 관심을 확대하고 적합한 정보 제공과 펀딩 조성을 가능케 할 수 있음

【표 6-4】 민간 주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원방안(안)

구분	내용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문화교류 활동 수행 주체 및 활동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관련 활동 및 정책 지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해, 자발적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흥하는 제도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명시된 실태조사 실시 및 정보 구축 및 유통의 제도 기반 마련 가능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국제문화교류사업이 국고 및 지자체 예산 통해 지원된다는 점, 책무성 및 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각 교류사업의 정보 등재를 목적으로 제안됨 기 수행 및 지원되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정보(사업 목적, 대상, 기간, 내용, 방식, 이행 상황 및 성과)를 등재하는 것에서 나아가, 해당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의 기획, 민간 및 유관기관 간 매칭 등을 위한 ‘활용방안(활성화 사업)’ 마련을 함께 제안하고자 함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문화교류 수행 주체(민간 단체 및 조직)는 국제문화교류 사업 및 문화교류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목적, 대상, 기간, 내용, 방식, 이행 상황, 성과 등의 정보를 분류하여 입력 해당 정보는 문체부 및 전담기구에서 파악하는 유관기관(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지원을 한다고 파악되는 등록기관) 대상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민간교류기관 및 단체, 민간 지원기관 및 단체 등도 자신들의 정보를 자체 입력하면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열린 시스템 마련

■ 일반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문화교류 환경을 구축해주는 것으로서의 ‘대중화’

- 한류 및 대중문화 영역 관련, 국가 차원에서 사업적인 접근을 하기 보다는 전 세계인들이 해당 문화에 대한 접촉이 용이해지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안 강화의 측면보다는, 콘텐츠를 보다 싸고 용이하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음

참고: 민간 국제문화교류(공공외교) 진흥을 위한 미국의 사례

①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 확대

- 세계평등기금(the Global Equality Fund): 정부와 사적 부문, NGO들이 인권에 관한 규범 촉진을 통해 사전 예방 및 즉각적 도움을 가능케 하는 외교부 주도 협력사업
- USAID: 미국의 해외원조 담당기관, 전 세계에 인도적 식량지원, 교육, 건설, 재난 복구 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추진해온 기간(공공외교 직접 추진 기구는 아니나, 국무성과 긴밀한 협력 통해 공공외교 효과 극대화 하는데 기여). ‘Power Africa’, ‘Feed the Future’, ‘U.S. Global Development Lab’ 등 사적 부문과의 협력 통해 핵심적 사업 모델 마련, 사적 부문의 수십억달러를 농업, 건강, 에너지 등 국제개발 주요 영역에 투자, 기업의 수익 및 지역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리 놓음

② 국제 인적교류와 해외여행 촉진 프로그램

- 미국인과 해외의 사람들을 사람 대 사람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외교의 핵심 업무로 봄. 외국 의 리더나 학생을 미국에 초청하는 것 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을 해외 파견, 상대국 국민 들과 직접 접촉 시키는 것이 미국 공공외교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 장려(교양있는 미국인이 해외여행 통해 미국을 알리고, 미국의 가치관 및 생활모습 보여주며 상대국 국민과 접촉하 는 것이 미국에 대한 인식 호의적으로 만든다고 봄)
- USAID: 미국의 자원봉사자들 활용하여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개인적 연결망 촉진
- 국제방문자 리더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 IMLP): 외교부, 1940년 이래 전 세계 20만명 이상의 미래 지도자 및 전문가들이 미국 방문함
- 청년 아프리카 리더 정책(Young African Leaders Initiative, YALI): 이미 추진 중이던 15개 의 교류프로그램 활용, 청년 아프리카 리더 초청

③ 국민의 참여촉진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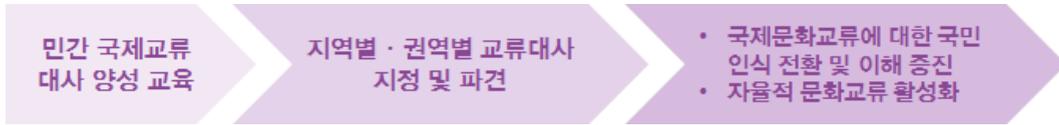
- 미국 대중들과 대화 하면서 미국시민이 국무성의 외교목표를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일종의 고급 교양교육 시행,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민의 지지 확보 및 개별 미국인이 외교관으로 활동하도록 함
- Hometown Diplomats Program: 미국의 대학, 고등학교, 모든 형태의 포럼 등에 직접 국무 성 관료 파견, 국무성의 외교정책 설명하고, 외교목표의 우선순위와 미국의 외교정책의 효 과, 그리고 왜 외교가 중요한가 등을 설명, 질의응답 하며 미국 외교과정에 국민이 이해하 고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무성 및 USAID는 이러한 교육을 위해 미국시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④ 미국 내 이민사회의 활용

- 미국 내 이민사회가 여전히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친족적으로 그 조상되는 나라와 긴밀 히 연결되어 있음에 주목, 해외 국민 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함(장기적 측면에서 이들이 미국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미국에 우호적 이미지를 형성, 나아가서는 조상들의 나라에 미국과의 가교 역할 할 수 있다고 봄, 고향국에 재정적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
- 이민사회동맹(International diaspora Engagement Alliance, IdEA): 국무성, USAID, 이민사회 간 협력을 통해 조상들의 나라에 지속가능한 개발 가능토록 지원

자료: 신진(2016) 「미국 공공외교의 중앙집중성과 국민 참여」

② 민간 국제교류 대사 양성 및 파견 사업(안): 자국민의 인식제고 차원



【그림 6-1】 민간 국제교류대사 양성 및 파견 사업(안) 수행체계

국외 유사 사례: 미국 USAID의 〈Hometown Diplomacy Program〉

- 미국의 국제원조기구(USAID,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에서는 공공외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공공외교 정책 효율성 강화, 민간 공공외교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각 지역사회에 관련 인력을 파견, 공공외교에 대한 대국민 의식 전환과 이해를 돕고, 민간 차원의 자율적 공공외교와 문화교류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음
- USAID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민간 공공외교 대사로서 파견, 지역사회의 고등학교, 대학교, 커뮤니티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을 활동 사례와 함께 소개, 국고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 확장을 도모하고 있음

자료: 미 국무성 USAID 내부자료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20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 문화교류 사업 발굴 및 지원 • 민간 문화교류기관 및 단체 국제문화교류 사업 컨설팅 추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국제문화교류 기관 및 단체 대상 사업 매칭

6-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소통 활성화 및 협력 네트워크 기반 조성이 필요

2) 추진내용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체 운영

- 정책협의체 정례회의 개최 및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연계 및 지자체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 협의를 위한 17개 시·도 문화예술과장 회의 개최 정례화
 - 문화교류 관련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및 워크숍 운영
-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등 각 분야 국제문화교류 기관들 간 정보공유 및 협업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 국제문화교류 통합정보자료집 발간
 - 국제문화교류 정책 현황, 협의체 기관별 사업현황, 협의체 연간 운영성과 및 차년도 계획 종합 보고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유관기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정책협의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 정례화 •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 개최
2020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문화교류 통합정보 자료집 발간 •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사업 발굴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 7-1. 현장경험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 지원의 방향성
- 7-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 7-3.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7-4.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 7-5.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

7-1. 현장경험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 지원의 방향성

1) 국내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그간의 한계⁴³⁾

- 국내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경우 ①국제문화교류 사업매개 인력, ②문화예술별 전문인력, ③문화산업분야 진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등으로 분류가 가능함

【표 7-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분류

구분	주요 수행업무 및 요구되는 전문성
국제문화교류 사업매개 (사업지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립 및 교류지원 등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역할
문화예술별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의 기획 및 진행 역할 (문화예술의 창작자는 포함되지 않음)
문화산업분야 진출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긍정적 의미의 브로커, PD, 마케터 역할) 및 네트워킹 역할 • 언어, 지역학, 정치, 법, 제도 등 교류 대상 지역에 대한 전문영역의 지식

자료: 김혜인(201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pp.13-19 재구성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역할별로 요구하는 ‘전문성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은 대학 등의 정규과정으로 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이론 중심의 표준화된 학과과정 보다는 위와 같이 전문인력의 범위를 구분, 분야별로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학위과정에서는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교류만을 전담으로 다루는 학과가 크게 드러나지 않으며, 문화예술 관련 이론학과에서 국제적 트렌드 및 흐름 등에 대해 기본적인 상황을 다루는 정도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 국제이해(국제법, 국제경영 국제정치 등) 관련 학과의 경우, 국제적인 감각을 기르기 위한 전공 심화과정의 성격이 강한 점, 문화교류의 이해 및 특수성에 대한 교육은 수반되어있지 않은 편임

43) 김혜인(201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56-68 토대로 재구성

■ 국제교류를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한 몇몇 기관의 경우, 예비·신진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있으나, 경력급 인력에 대한 실질적 재교육이 미흡한 상황임

- 예비 및 신진인력의 경우 현장 실무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장 인력 및 중견인력의 경우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이해, 지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국제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표 7-2】 기관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현황

기관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현황 (레지던스 및 펠로십 제외)	교육 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카데미	• 문화산업, 방송통신, 콘텐츠 장르 간 융합 영역에서 활동하는 신진 및 활동 인력에 대한 실무 및 이론교육 제공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 한국문학의 해외소개 및 진출을 위한 번역 전문가 육성
한국영화아카데미	글로벌 현장영화인력 전문성 강화교육	• 영화산업의 국제시장진출 진흥을 위해 활동할 전문인력의 영화비즈니스 실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강좌	• 해외 한국학연구자 육성을 위하여 외국인 학부생(대학원)을 위한 한국학 교육 강좌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리그	• 큐레이터들의 자발적 학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네트워킹 목적으로 하는 전문인 대상 교육프로그램

자료: 김혜인(201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pp.56-61 재구성

■ 국제문화교류 인력 양성에 대한 단기적 지원에서 비롯된 전문성 축적의 어려움

-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5년째 진행되어오고 있는 상황임. 기초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예비-중견 인력을 대상으로 한 문화원 파견을 통해 각 현지 문화원의 환경 분석 및 프로젝트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파견인력 중 일부는 현지의 국제기구 및 관련 문화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 보조인력 및 인턴으로 그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 인력들의 역할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

- 개인 별 전문(전공) 분야를 고려한 매칭, 파견 후 현지에서 일을 지속하며 해당 지역 네트워크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 지원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단기적 성과에 근거한 예산 편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수료생 추적조사의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 인력에 대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의 지원 방안과 더불어, 교육 수료자들이 이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적 조사 실시 필요

■ 소수의 전문인력 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풀 확장의 어려움

- 신진인력들이 국제교류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만드는 정책적 지원을 더해, 전문인력의 풀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에 대한 접근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할 측면으로만 간주되지 않도록 할 필요
- 이는 국제문화교류의 정책적 개념 정립과 그것에 대한 담당자들(행위주체) 간 인식공유가 기초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진인력 뿐 아니라 기존 경력급 인력에게 ‘국제문화교류 개념과 정책 방향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적 접근(정기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NEXT> 프로그램을 운영(2017년 6월 종료), 재외 한국문화원 18개소에 전문인력 5명, 예비인력 24명을 파견, 문화예술 전문(예비) 기획자들의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워크숍, 현장참여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⁴⁴⁾
 - 해당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지니는 한계점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파견 인력의 비자 발급 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어려움, 추가 근무 시 휴가/수당 지급 등 적절한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함
 - 나아가 예술경영지원센터는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을 경력에 따라 세분화, 재외 한국문화원 외에 해외 전문기관으로도 파견을 확대하여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의 심화 양성 도모하는 방향으로 2018년의 사업방향을 계획하고 있음⁴⁵⁾

구분	사업 현황(2017년도 12월 기준)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EXT 아카데미 8개 과정, 수강자 수 총 533명 • 공연예술 행정실무(해외진출 홍보마케팅) • 공연예술 해외진출 실무심화 <변화하는 아시아 공연예술시장> • 공연예술 공개강연 <변화하는 아시아 공연예술시장> • 시각예술 행정실무 <큐레이터를 위한 국제 전시기획 행정실무> • 시각예술 해외진출 실무심화 <글로벌 신진기획자 큐레이팅 워크숍> • 시각예술 공개강연 <큐레이터를 위한 전시기획 재원조성과 활용> • 국제문화교류 예비인력 양성과정 <선배에게 듣는 문화예술 JOB이야기> • 파견 전문인력·예비인력 사전교육
국제문화교류 전문·예비인력 해외 파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예비인력 29명, 총 17개 국가 파견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기획자)와 예비인력(인턴)을 재외 한국문화원에 파견 • 전문인력(총 5명): 문화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현지 리서치 수행 • 예비인력(총 24명): 문화원 사업 및 한국문화 홍보 지원 업무 수행 • 파견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독일, 폴란드, 헝가리, 스페인,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인도, 아랍에미리트,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일본, 중국, 호주

자료: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6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연차보고서, p.16

2) 현장경험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 지원의 필요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연수 개설도 중요하나, ‘실습’ 기회의 확장과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지원이 필요. 강의식 교육 보다는, 현장 실습(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방식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제문화교류사업의 특성 상, 국제적 인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해외경험, 국제적 인력이나 기관과의 협업 경험 등이 중요함.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충분한 시간 및 재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있을시 가능
- 이에 현장 경험 강화에 방점을 둔 전문인력 양성 및 출구전략을 위한 역할분담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44)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하반기 국제문화교류 협업 증진 워크숍 자료집, p.109

4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하반기 국제문화교류 협업 증진 워크숍 자료집, pp.109-110

【표 7-3】 전문인력 양성 및 출구전략 모색을 위한 역할분담(안)

구분		세부 내용
기초 역량 교육	강의형	• 교육 전문기관 (위탁) : 국제문화교류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교육	강의형	
		실습형

7-2.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가 국제문화교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 중 1순위로 조사되어 전문인력 양성이 국제 문화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냄
- 그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예술교류 기획’ 이외의 분야(정책, 전통·생활문화 등)와 활동영역(지역전문가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경력인력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선순환적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체계화 및 전문화가 필요함
- 정책 수립 인력 및 지자체 등에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담당자 교육 등은 미흡한 실정인 바, 활동 영역 및 실무경력 별 세분화된 양성프로그램의 강화 필요
 - 현재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를 위한 인력양성은 주로 프로젝트 기획/진행인력, 문화산업 시장진출 전문 인력, 문화교류 예비인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정책수립 및 교류 지원영역의 전문가, 교류협상전문가, 각 지역 정치 및 문화 등에 전문성을 지닌 지역별 문화매니저 등의 양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7-4】 분야별 국제문화교류 전문 인력 양성 현황

기준	분류	세분류	양성 현황	관련 사례
활동 영역	정책수립 /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 정책입안자	미흡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 담당자	미흡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교류 담당자	미흡	
	프로젝트 기획/진행	문화예술 장르별 예술가(미술가, 음악가, 무용가, 배우, 전통예술가 등)	△	글로벌 현장영화인력 전문성 강화교육 (한국영화아카데미)
		장르별 기획인력(프로듀서, 큐레이터, 연출가, 감독, 코디네이터 등)	○	큐레이터리그(국립현대미술관),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NEXT (예술경영지원센터)
	교류 매개 인력	시장진출 전문가(마케터 등)	○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카데미 (한국콘텐츠진흥원)
		교류협상전문가(국제법, 조세, 저작권, 협상전문가 등)	미흡	
		지역별 문화매니저(지역 정치, 문화, 정책, 경제 분야 전문가 등)	미흡	
기타(통·번역자, 평론가, 한국학전문가, 연구자 등)		○	번역아카데미(한국문학번역원)	
실무 경력	예비인력	국제교류 및 비즈니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학위 학부 및 대학원생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NEXT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전공 관련 학과 또는 전공학위 학부 및 대학원생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NEXT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진인력	실무경력 6개월-5년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NEXT (예술경영지원센터)
	경력급 인력	실무경력 5년 이상	미흡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인력 분류 바탕으로 재구성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9조에 의거, 2013년부터 그간 교육, 연수, 연구, 파견사업 등이 혼합되어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오며, 그간 135명의 인력(전문인력 39, 예비인력 96)을 양성해왔음
- ‘아카데미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일반, 직무역량, 주제 특화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왔고, ‘전문인력 해외파견’은 재외문화원 약 22개국에 파견된 바 있음

【표 7-5】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현황

구 분	2017	2016	2015	2014	201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파견	5개국 5명 (7개월)	5개국 5명 (9개월)	9개국 9명 (9개월)	10개국 10명 (10개월)	10개국 10명 (10개월)
국제문화교류 예비인력 파견	16개국 17명 (5개월)	15개국 24명 (5개월)	15개국 32명 (5개월)	11개국 23명 (5개월)	-
국제문화교류 아카데미 운영	8개 과정 (360여명)	8개 과정 (533명)	13개 과정 (716명)	12개 과정 (433명)	9개 과정 (201명)

2) 추진내용

① 국제문화교류 인력양성 관련 고등교육기관과의 협업추진(안)

■ 기초역량교육과 전문성 강화교육 분리 추진

-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구로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설립되고, 주요 기능으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이 포함되면서 인력양성을 위한 시스템 체계 재편이 가능해짐. 특히 기초 역량 교육은 문화 일반, 권역별 문화, 정치외교, 생활문화, 언어, 문화정책, 전통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포괄이 필요함
- 이는 국제문화교류인력의 정의와 연계되는 부분으로, 국제문화교류인력의 필요역량은 ①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 전반에 대한 전문적 지식, ② 자기 문화권에 대한 이해 및 교류대상 문화권에 대한 전문 지식, ③ 다양한 언어구사 능력, ④ 교

류 수행을 위한 소통, 코디네이팅, 협상 능력, ⑤ 국가 간 문화정책 및 생태계 지식, ⑥문화프로젝트 기획 및 수행 능력을 포함

-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지닌 예비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역량 교육을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관련전공 개설 고등교육기관(대학) 등을 기초역량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혹은 위탁교육 실시
- 기초역량 교육을 이수한 인력 중,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교육 및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전문인력 심화강의 및 연수 교육을 기획·운영

【표 7-6】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분리(안)

구분		6세부 내용
기초 역량 교육	강의형	교육 전문기관 (위탁 혹은 지정) : 국제문화교류 이론 및 교육 프로그램 자체 개발 및 교육 실시
전문성 강화 교육	심화강의	
		연수 및 실습

② 국제문화교류 실무역량 강화 지원

- 이론(강의)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 탈피, ‘현장중심형 워크숍’(해외전문가 초빙 등)의 정례 개최로 국내외 현장 상황에 맞는 교육 지원
- 그룹워크숍, 컨설팅·멘토링 등 후속지원을 연계, 국제교류 활동 주체별 기획 및 실무역량 강화 지원(국내외 전문가 협력 커리큘럼 구성)

▶ [국제문화교류 실무 워크숍]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집중토론, 사례연구, 성공 노하우 공유 등 현장경험과 실무 중심으로 운영

③ 전문인력 양성사업 세분화(안)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전문화를 위해 양성 대상 및 내용의 세분화가 중요함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은 앞서 명시한 필요 역량과 함께 아래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음

【표 7-7】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의 분류

기준	분류	세분류
교류 분야	전통문화/문화재	전통문화 프로젝트 교류, 전통문화 보존 등 기술교류
	생활문화	생활문화 프로젝트 교류 등
	언어	한국어 교육 및 언어 ODA
	정책	문화정책 및 각 문화권 정책 비교 및 공동 프로젝트 교류
	연구	정책연구, 문화권비교연구 등 교류
	인적	문화교류인력 교류
	예술	장르별 예술교류
활동 영역	정책수립/ 교류지원	국제문화교류 정책입안자
		국제문화교류 지원기관 담당자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교류담당자
	프로젝트 코디네이팅	문화권 전문인력(코디네이터, 지역문화 전문가 등)
		문화 예술 기획인력(큐레이터, 프로듀서 등)
	교류 매개인력	시장진출 전문가(마케터 등)
교류협상전문가(국제법, 조세, 저작권, 협상전문가 등)		
지역별 교류매니저(지역 정치, 문화, 정책, 경제 분야 전문가 등)		
기타(평론가, 한국학전문가, 연구자 등)		
문화 ODA 및 교육인력	문화 ODA 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 언어교육 관련 교류기획 및 운영인력	
실무 경력	예비인력	관련 학과 또는 전공학위 학부 및 대학원생
	신진인력	실무경력 6개월-5년
	경력 인력	실무경력 5년 이상

- 다양한 인력 중 예술기획 인력 외 타교류 분야 및 활동 영역 인력들에 대한 인력양성이 미흡하며, 예비·신진인력 지원에 비해 경력 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속적 교류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의 세분화된 계획 마련이 시급

■ 중앙·지역 국제문화교류 정책 전문가 양성사업 운영(안)

- 국제문화교류 관련 제반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하되, 강의형과 실습형 교육을 병행하고 ‘실무자(행정담당자) 재교육 및 연수 지원 사업’ 등과 연동하여 진행
- 해외 정책·행정 전문가 간 쌍방향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 구축 및 네트워크 확장 등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원대상 : 국제문화교류 정책입안자, 국제문화교류 지원 유관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

■ 해외 권역별 문화매니저 양성사업 운영(안)

- 국제문화교류 비활성화 권역(국가)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언어구사 능력을 겸비한 문화매니저 인력양성을 통해 국제문화교류의 지역편중 현상 극복
- 지원대상 : 해외 권역별 정치, 문화, 사회, 정책분야 전문가 등

■ 경력급 인력 양성사업 운영(안)

- 국제문화교류 관련 업무에 노하우를 가진 종사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고, 실무와도 연동 가능한 리서치, 국제 심포지엄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최소 활동비 지원
- 종사자의 활동 경력에 따른 단계별 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문화교류 전문가 양성
- 활동 결과는 심포지엄, 결과집 출간 등의 방식으로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 : 공공·민간 분야 국제문화교류 종사인력

④ 인력양성 프로그램 체계화 및 사업규모 확대

- 국제문화교류 현장 인력의 경력 단계별 필요 역량 및 교육 소요(예: 현장실습, 리서치 등)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지원

신진 인력	준 전문 인력	전문 인력
경력 3년 미만	경력 3년 ~ 10년 미만	경력 10년 이상

- 경력별로 국제문화교류 현장 경험을 쌓고, 단계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교육 운영

경력 단계별 현장실습 교육

구분	필요 역량	해외현장 파견	기대 효과
신진인력	해외 문화예술 현장 경험	축제·비엔날레 등 해외 우수 문화예술 행사 파견	국제 수준 교류 실행역량 강화
준 전문인력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 기획·운영	재외 한국문화원 기획인력 파견	기획역량 강화
전문인력	해외 권역별 동향 이해 및 전문 정보	해외 전문기관 파견	정보 수집 및 인적 네트워크 확장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규모* 확대

* 해외파견 규모 확대 : ‘18년 13명 / (‘19~’20년) 年 30명 → (‘21~’22년) 年 50명

⑤ 국제문화교류 인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내외 현장 종사자 간 정보 공유, 동료 학습(peer learning) 등과 함께 네트워크 구축의 장 마련(국제문화교류 연례 컨퍼런스 개최)

▶ 문화교류 우수사례 발표 및 최신 동향 공유, 국제문화교류 추진방향 도출,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해외 전문기관 협력 등 인적 교류의 장 마련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 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 마련(해외파견 기관 협력 등) 추진 • 문화교류 실무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및 후속 지원 추진
2020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교류 전문가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 인적 네트워크 지원 강화 • 인력양성 후속 지원(프로젝트, 네트워크 형성 등) 확대로 전문성 강화 • 정책전문가·지역전문가·교류협상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협업) 방안 마련
202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전문가 양성 추진 및 현장인력 재교육 등 심화과정 지속 발굴 • 양성인력 국내외 기관 등 진출 지원방안 연구

7-3.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의 활발한 전개 및 진흥을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전개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종합적 정보체계의 구축은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시스템의 정비를 의미하는 점, 국제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지정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범위 및 내용을 ①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에 관한 정보, ②실태조사의 결과 및 통계, ③그 밖에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로 명시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관련 각종 유관기관과의 사업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기간 및 유사 중복 문제 완화 필요
- 국제문화교류 사업 관련 각종 정보의 통합 및 공유를 통해 사업수행 주체의 정보 접근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수적

2) 추진내용

■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안)

- 국제문화교류 환경은 물리적 기관 설립 등의 차원보다 정보 자원, 네트워크 자원, 각종 서비스 자원 등의 확충과 견고화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자원 플랫폼 구축 중심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① 국내 일원화된 교류 지원 플랫폼 사이트 구축
 - ② 국내·외 교류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트 내 주요 권역별 해당 언어 서비스 지원
 - ③ 민간 문화 교류 단체 사이버 공동체 구축교류 관련 플랫폼 구축지원 등의 방안 고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홈페이지에 문체부에서 운영했던 문화교류포털을 통합하여 유관기관 사업 담당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국제문화교류 정보포털 신설('18. 11월~)
 - 정보포털 내 국제문화교류 사업 정보를 데이터화 하고, 상시적인 정보 축적을 위해 유관기관 간 온라인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국제문화교류 관련 조사 정보 제공기능 강화
 -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해외한류실태조사 등 문화교류 관련 각종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권역별·국가별 문화특성, 문화향유, 문화정책 등 포괄적 문화정보 제공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해외통신원 운영 사업 연계 해외 현지의 실시간 문화동향 및 정보 제공
- * '18년 기준 전 세계 37개국 40명 해외통신원 운영

■ 다국어 정보플랫폼 구축 및 해외 문화관련 기관 정보연계 강화

- 국제문화교류 다국어 정보플랫폼 구축
 - 국제문화교류 정보에 대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내 사업에 대한 해외 문화 관련 기관의 정보접근성 강화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한류정보 플랫폼(All about Korea)을 개편, 각종 국제문화교류 사업 관련 정보제공

- 국내외 유관기관 대상 다국어 정보 연계 확대
 - 국내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다국어 정보플랫폼과의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제 문화교류 정보 제공 기능 강화
 - 재외공관 및 문화원, 해외 현지 문화관련 기관·민간대상 문화교류 정보제공 협의 및 정보연계 확대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8년~20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유관기관 대상 국제문화교류 사업정보 제공협의 및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 • 한국국제문화교류 진흥원 홈페이지와 문화교류포털 통합
2020년~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실태조사, 해외통신원 등 국가별 문화정보 제공 • 다국어 정보플랫폼 개편 및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문화관련 기관 대상 문화교류 정보연계 확대

7-4.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제문화교류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지자체 및 국제문화교류 유관기관의 사업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국제문화교류 정책지원의 방향성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운영 현황, 노하우,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도모할 필요
- *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문광연, '16.10.~'17.4.)』가 실시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이에 대한 후속 및 본격 실태조사 연구 실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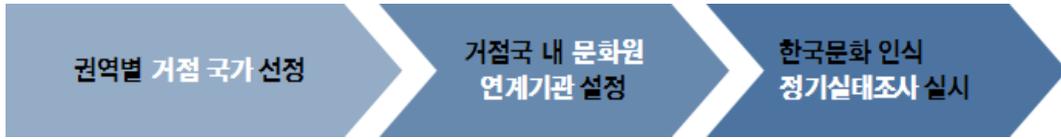
2) 추진내용

■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공 및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국제문화교류 지원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조사주기: 3년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
 - 조사내용: 국내외 국제문화교류 활동 현황, 민간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의 지원 실태,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현황, 문화교류의 국제적 동향 등

■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인식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전 세계 권역별 거점 국가를 선정하고, 각 거점에 위치한 문화원을 연계기관으로 설정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인식도 조사 수행



【그림 7-1】 한국문화 인식 정기실태조사 수행 체계도

■ 해외 한류 실태조사 개편

- 현재 대중문화 분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외 한류실태조사’를 문화예술을 포함한 한국문화 실태조사로 개편 추진
-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체계적 정보 제공

*시각예술, 공연, 공예 등 문화예술분야 포함 및 확대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9년	제1차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2022년	제2차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 제2차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2023~2027년) 수립 시 활용

7-5.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따른 교류진흥방안 모색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산업기술의 연장선상에서 문화예술계에도 적용, 반영되고 있음(ex. 독일 KOMISCHEN OPER BERLIN의 로봇 오페라 공연)
- 시공을 초월한 국제문화교류, 초연결 네트워크 중심의 국제문화교류가 시도되고 있음(ex. 미국 Sundance Institute, Residency Unlimited(NY)의 가상현실 레지던시 운영)
-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네트워크 초밀화 현상,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회관계망이 출현함에 따라, 변화하는 국제문화교류 정보공유 및 교류방식에 대응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 같이 예술의 본질, 예술가의 지위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공연, 예술작품 등은 오히려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
- 예술과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을 배척하기 보다는 인공지능, 3D 프린터,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등을 조력자로 잘 활용하여 예술의 영역 확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

2) 추진내용

■ 새로운 기술기반 문화교류사업 발굴 지원

- 기존 교류방식이 아니라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류,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교류 사업 등 다양한 기술접목을 시도한 교류사업 기획안이 있을 경우 파일럿 형태의

사업을 우선 집중지원 지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문화콘텐츠 지원과 연계하여 기술, 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및 연구진이 함께 구성된 프로젝트에 한하여 연구비 지원 추진

【표 7-8】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기술(예시)

기술명	개요	사례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은 사람과 사람간의 통신을 넘어 사물에 인터넷 주소를 부여하고 사람과 사물, 혹은 사물과 사물간의 통신을 이끌어내는 기술	도서관 도서대출, 박물관 유물관리, 테마파크 놀이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관람객에 정보 제공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존 데이터보다 너무 방대하여 기존의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저장/분석 등이 어려운 정형 및 비정형의 대규모 데이터 * 이용자 검색기록, 구매기록 등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용자 취향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 등에 활용	알파고(바둑)는 10만개 이상 기보를 학습 넷플릭스는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 영화 추천 서비스에 활용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구현	구글 알파고(바둑), IBM 왓슨(지울주행), 구글 딥드림(화가)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	컴퓨터 그래픽 등을 사용해 실체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특정한 환경 또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인 것처럼 느끼며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가상현실 스포츠, 가상현실 놀이(롤러코스트), 가상현실 박물관 등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	실제 환경 또는 상황에 가상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해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	포켓몬고(게임), 문화재 복원 앱
3D 프린팅	3차원 도면 데이터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물품을 생성하는 프린터로 소재는 플라스틱, 고무, 금속, 초콜릿 등 다양한 소재가 활용됨	공예품, 조형물, 가공제품 제작 등에 활용

■ 미래기술 연계 국제문화교류 주제 심포지엄 개최

- 원격교류 관련 정보 및 실제 원격교류 사례를 공유하고, 학술교류를 지원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형태의 문화교류 확대
- 매년 기술기반 원격교류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기술기반 원격교류사업 우선 집중지원(안)’, ‘기술기반 원격교류 인프라 구축 지원(안)’을 통한 성과 및 결과물을 공유

3) 단계별 추진일정(안)

기간	내용
2019년~ 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기반 원격 문화교류사업 파일럿 지원방안 마련 · 기술기반 원격교류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매년)

참고문헌

-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2013),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노영순, 윤주(2013), 「저성장 사회에 대비한 문화관광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은정(2014), <디커플링-독일의 공공외교와 문화교류의 원칙 그리고 통일>, 《담론 201》 제17권 4호, 한국사회역사학회
- 김혜인 외(2015), 「국제문화교류 정책 중장기계획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OECD(2015), 「포용적 성장, OECD의 측정 틀」, OECD 통계 실무 보고서
- 신진(2016), 「미국 공공외교의 중앙집중성과 국민 참여」, 사회과학연구
-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6 예술경영지원센터 연차보고서」 예술경영지원센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2016 문화예술교육 ODA사업 성과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한국법제연구원(2016), 「공공외교 제도 개선 및 하위 법령 제정방안 연구」, 외교부
- 김 면(2017),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 외(2017), 「국제문화교류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노영순, 김혜인(2017) 「UN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와 문화정책의 대응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외교부(2017), 「공공외교 실태조사」 외교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정책포럼 문화공감」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DIGIECO(2017),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인공지능-딥러닝을 중심으로」 디지에코보고서
- 이상열, 정중은(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2017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중심형 문화정책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외교부(2017),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 2017-2021」
-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비전2030 - 사람이 있는 문화」 기초발표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2018), 「2018년 업무계획」

시스ain(2017.02.15.)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을 둘러싼 쟁점”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8359>)

조선일보(2017.03.03.) “중국 ‘관광 보복”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3/2017030300241.html)

중앙일보(2018.01.02.) “중국, 새해에도 사드 보복? 안타깝지만 계속된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50533>)

국제뉴스(2018.01.08.) “니키 헤일리, 북한의 올림픽 참여 회담 두고 '핵실험 중단 확실히 하라' 전해”(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3208)

중앙시사매거진(2017). http://jmagazine.joins.com/art.print.php?art_id=318440

연합뉴스(20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3/0200000000AKR20171223051900108.HTML?input=1195m>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쇄일 | 2018년 3월

발행일 | 2018년 3월

인쇄처 | (주)계문사

〈비매품〉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전재할 수 없음